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파키스탄 국가정황정보보고서

2025년 4월 30일

목차

약어	4
용어	5
1. 목적 및 범위	7
2. 배경 정보.....	8
국가 개요.....	8
인구통계.....	9
경제 현황.....	9
정치 체제.....	15
인권 체계.....	18
안보 상황.....	19
3. 난민 협약 주장	31
인종/국적.....	31
종교.....	41
(실제 또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	53
관심 집단.....	60
4. 보충적 보호 신청	73
자의적 생명 박탈	73
사형.....	76
고문.....	76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77
5. 기타 고려 사항	79
국가 보호.....	79
대안적 국내이주	83
귀환자 대우	83
신분 증명.....	84
사기 행위의 만연	87

약어

ACC	아프간 시민권 카드(Afghan Citizenship Card,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이 발급)
ANP	아와미 국민당 (Awami National Party, 정당)
BISP	베나지르 소득지원 프로그램(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
BRAS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aloch Raji Aajoi Sangar, 민족주의·분리주의 반군 단체 연합)
FIR	최초 정보 보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 신고 또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기 기록)
FSC	연방 샤리아 법원(Federal Shariat Court)
GB	길기트-발티스탄(Gilgit-Baltistan)
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KP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 수니파 무슬림 무장단체)
ISI	군 통합정보국(Inter-Services Intelligence, 파키스탄 군)
KP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Khyber Pakhtunkhwa, 행정구역)
LGBTQIA+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또는 무성애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or Asexual)
MQM	무타히다 카우미 운동(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
NADRA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tional Database and Registration Authority)
NCJP	국가정의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PKR	파키스탄 루피(Pakistani Rupee, 현지 통화)
PML-N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akistan Muslim League-Nawaz, 정당)
PoR card	등록증명서(Proof of Registration card,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프간 난민에게 발급)
PPP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정당)
PTI	파키스탄정의운동(Pakistan Tehreek-e-Insaf, 정당)
SRA	신두데시 혁명군(Sindhudesh Revolutionary Army, 민족주의·분리주의 반군 단체)
TJP	테흐리크-에-지하드 파키스탄 운동(Tehreek-e-Jihad Pakistan, 수니파 무슬림 무장단체)
TLP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ehreek-e-Labbaik Pakistan, 정당)
TTP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수니파 무슬림 무장단체(Tehreek-e-Taliban Pakistan)
UNHCR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용어

아만 지르가(Aman jirga)	파키스탄 정부나 지역 공동체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및 발루치스탄주의 일부 분쟁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평화 위원회'
바렐비(Barelvi)	하나피파(Hanafi)와 샤피이파(Shafi'i)를 따르는 수니파 이슬람 내의 부흥 운동
헌법(Constitution)	2012년 개정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1973)
디아트(Diyat)	살인,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동해보복에 갈음하는 금전적 보상금(키사스 참조)
파트와(Fatwa)	이슬람법상의 쟁점에 대한 판결
후두드(Hudood)	「후두드 법령(Hudood Ordinances, 1977)」은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형법상의 도덕법을 대체했다
이맘바르가(Imambargah)	시아파 예배 장소
잘사(Jalsa)	집회 또는 시위
지하드(Jihad)	'투쟁' 또는 '노력'으로, 성전이나 이슬람의 적에 대한 투쟁/전투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르가(Jirga)	파슈툰왈리(Pashtunwali)에 따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부족 회의(판차야트(Panchayats)라고도 한다)
카툼-예(Khatm-e)	'예언의 최종성'으로, 무함마드가 일련의 예언자들 중 마지막 예언자이며
나부와트(Nabuwwat)	그 이후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와자 시라(Khwaja sira)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한 자의 정체성으로, 영어로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트랜스젠더'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히즈라(hijra)라고도 한다)
마드라사(Madrassa)	이슬람 학교
파슈툰왈리(Pashtunwali)	주로 농촌 부족 지역에서 토착 파슈툰족이 따르는 윤리 강령 또는 법과 통치 체계
푸르다(Purdah)	여성을 무관한 남성의 시야에서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커튼(비유적으로도 사용되어, 여성이 '푸르다 뒤에' 산다는 의미)
키사스(Qisas)	살인,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동등한 보복('눈에는 눈')을 허용하는 이슬람법상의 처벌
샤리아(Sharia)	이슬람법
타즈키라(Tazkira)	아프간 국민신분증
울레마(Ulema)	무슬림 종교 학자 집단
자카트(Zakat)	수니(Sunni) 이슬람의 의무적 종교세

이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

높은 수준의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강력한 반복적 사건 양상을 인지
중간 수준의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충분히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들을 인지
낮은 수준의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서 사건 발생을 인지하지만, 해당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

공적 차별

1.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보호나 서비스에 대한 특정 집단의 접근을 저해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개인 신상 등록이나 신분증 취득의 어려움, 서류 불인정 및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공무원이 특정 집단에 대해, 입법 또는 행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보호나 서비스의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사회적 차별

1. 다른 사회 계층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회 구성원(가족,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 포함)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부동산의 임대 거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거부, 고용 차별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사회 구성원(가족, 지인, 고용주, 동료, 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부터의 배척이나 배제

1. 목적 및 범위

1.1 이 보고서는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보호 지위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호주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의 문서로서 일반적인 사실 관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심사 담당자를 위한 정책 지침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 「이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공표된 장관지시 제84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보호 지위 결정 절차를 위해 명시적으로 국가정황정보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평가서가 심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심사 담당자는 결정을 내릴 때 해당 평가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심사 담당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다른 관련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1.3 이 보고서는 현재 보호 비자 신청 사례를 고려해 작성했으며 개인의 신청 사례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작성 당시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내린 최선의 국가정황정보 평가를 반영한다.

1.4 이 보고서는 현장 지식과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또한 다른 국가 정부, 유엔 기구, 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언론 매체, 학계 등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보고서를 참고했다. 출처 보호를 위해 출처의 세부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1.5 이 보고서는 2022년 1월 25일에 발표된 기존 파키스탄 보고서를 대체한다.

2. 배경 정보

국가 개요

2.1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은 정치적 격동과 분쟁의 역사를 겪어 왔으며, 자연재해 및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항민이 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2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4일 인도 분할 당시 영국 연방 내 '파키스탄 자치령(Dominion of Pakistan)'으로 창설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영국령 인도의 신드(Sindh), 발루치스탄(Balochistan), 북서변경주(North-West Frontier Province)와 펀자브(Punjab) 및 벵골(Bengal)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다. 파키스탄의 국부이자 초대 총독인 무함마드 알리 진나(Mohammed Ali Jinnah)는 분할 이전부터 힌두교도-무슬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종교적 관용에 입각한 다민족 국가를 구상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정치적 경계가 대대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광범위한 폭동과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약 5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1947년 말, 잠무(Jammu) 카슈미르(Kashmir) 번왕국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인도와의 전쟁으로 비화했다.

2.3 파키스탄은 1956년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산하 입헌군주국 체제를 유지했다. 1958년, 무함마드 아유브 칸(Muhammad Ayub Khan) 장군이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해산하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에는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으며, 그 결과 동파키스탄(구 동벵골)이 분리 독립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이 수립되었다.

2.4 1977년, 모하마드 지아-울-하크(Mohammad Zia-ul-Haq) 장군은 파키스탄 역사상 두 번째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지아는 '니잠-에-무스타파(Nizam-e-Mustafa, 예언자의 통치)'를 강제 도입하여 파키스탄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슬람화를 추진했다.

2.5 1988년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 총리 취임과 함께 파키스탄은 문민정치 체제로 복귀했으나, 군부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99년,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장군이 주도한 세 번째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2008년까지 9년간 무샤라프(Musharraf)의 군사 통치가 이어졌고, 그해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s Peoples Party, PPP)의 유사프 라자 길라니(Yousaf Raza Gilani) 총리가 이끄는 선출직 민간정부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2.6 보다 최근인 2018년 7월, 파키스탄정의운동(Pakistan Tehreek-e-Insaf, PTI)을 이끄는 임란 칸(Imran Khan)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칸 정부는 부패 척결, 불평등 해소, 종교적 불관용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적을 탄압하며 종교적 극단주의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년, 칸은 국민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리직에서 축출되었다. 그 직후 그는 일시적으로 공직 진출이 금지되었으며 암살 미수 사건을 겪기도 했다. 2023년 5월 9일 당국이 임란 칸을 체포하자, 시위대가 군사 시설과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대규모 폭력 시위가 전개되었다. 2023년 5월 12일, 대법원이 해당 체포 절차를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칸은 150건 이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3년, 10년, 14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법에 따라 해당 형기들은 동시에 집행된다.

2.7 2022년 4월, 국민의회는 셰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를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선출했다.

셰흐바즈 정부는 가중되는 국제수지 위기, 통화 가치 하락, 고물가, 막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타개하기 위해 즉각 국제 채권단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2022년 6월에서 10월 사이, 폭우와 극심한 폭염으로 힌두쿠시(Hindu Kush) 히말라야 빙하가 융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는 등 유례없는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2.8 2023년 8월 9일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24년 2월 8일 마침내 총선이 실시되었다. 주요 정당과 인권 단체들은 군부가 선거 준비 기간부터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조작했다며 비난했다.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문민정부 간 민주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가운데,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셰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총리로 복귀했다.

인구통계

2.9 2023년 국가인구조사(National Census)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총인구는 2억 4,149만 명(연평균 증가율 2.55%)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19세 이하인 젊은 층이며, 61%는 농촌 지역에, 46%는 편자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라호르(Lahore, 2,277만 명)로 확인되었으며, 카라치(Karachi, 2,038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의 인구는 236만 명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별 인구 구성은 본 보고서의 '민족 및 국적' 편을, 종교별 인구 구성은 '종교' 편을 각각 참조해야 한다.

2.10 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영어와 우르두어(Urdu)이다. 이 외 주요 언어로는 발루치어(Balochi), 파슈토어(Pashto), 편자브어(Punjabi), 신드어(Sindhi) 등이 있다. 영어는 정부, 사법부, 엘리트층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도시 지역에서 흔히 통용된다. 영어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나, 마드라사(madrassa)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어서 국민의 영어 접근성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우르두어(Urdu)는 널리 통용되나 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1%에 불과하며, 반면 편자브어(Punjabi)는 전체 인구의 39%가 모국어로 사용한다.

경제 현황

2.11 파키스탄은 202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20호주달러인 중하위 소득 국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3-24 인간개발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191개국 중 164위로 평가하며 '저개발'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4년 파키스탄의 중하위 소득 빈곤율을 40.5%로 추산했으며, 전년 대비 260만 명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58.6%), 농업(22.9%), 제조업(12%) 순이다.

2.12 1958년 이후 파키스탄은 총 25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을 도입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9월 25일에 지원을 받았다. 부채 상환은 여전히 파키스탄 정부의 중대 과제로, 2024-25년 연방 예산 경상 지출의 약 64%가 '자본 및 부채 관리'에 배정되었다. 2024년 기준 공공 부채는 GDP의 77%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재정 압박은 보건, 교육 및 기타 경제 개발 분야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출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2024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하방 리스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과 2024년 내내 지속되었으며, 2024년 초에는 최고 28%를 기록했다. 이후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이 단행한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4년 말 물가상승률은 4%대로 둔화되었다.

2.13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했으나, 파키스탄의 생활 수준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높은 아동 발육 부진율(5세 미만 아동의 40% 이상)과 문맹률(10세 미만 아동의 80%가 연령에 적합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함)은 파키스탄 노동 인구의 학력과 생산성, 임금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순환 및 경제 구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식통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회복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비공식 경제 부문이 파키스탄 GDP의 32%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했으며, '2020-21 파키스탄 노동력 조사(Pakistan Labour Force Survey)'는 비공식 부문 고용이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의 7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2.14 2022년 홍수는 약 1,730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227억 호주달러 규모의 물적 피해와 232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수 농민은 2022년 홍수로 기존의 경제적 자산이 파괴됨에 따라 지주들에게 심각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또한 2022년의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식품 물가는 빈곤층이 기본적인 영양 수요마저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 남성들은 침수된 농지를 떠나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대거 이주했다. 반면 2023년 폭염의 경우, 현지 소식통은 실제 강도가 국제적 보도만큼 극심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장기적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2.15 경제 상황은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파키스탄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발간 이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러한 경제난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합법 및 불법 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2.16 2012년 개정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1973) 제18조는 '모든 시민은 합법적인 직업이나 업종에 종사할 권리와 합법적인 무역이나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주 및 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을 주로 활용했다.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기 동안 개별 가계의 생계 유지에 기여했다.

2.17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실업률은 2024년 1월 사상 최고치인 8.5%(약 620만 명)에 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존에 남성의 최소 1.5배 수준이었던 여성 실업률이 2024년 중 11.1% 이상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기준 교육받은 청년 중 31% 이상이 실업 상태였으며, 파키스탄의 최근 대졸자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약 10% 높게 나타났다. 파키스탄 개발경제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는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을 졸업생들의 기술 숙련도 부족으로 분석했다. 현지 소식통은 열악한 경제 상황과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이 이주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전했다.

2.18 이주 관련 사항은 이주 조례(Emigration Ordinance, 1979)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는 해외 취업 촉진, 인력 유출의 통제 및 규제,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한 민간 채용 업체인 해외고용촉진기관에 면허를 발급하여, 외국 고용주와 파키스탄 노동자 간의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을 장려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 사이 39만 119명의 파키스탄인이 해외로 이주했다. 이미 2023년 86만 2,625명, 2022년 83만 2,339명이 해외로 이주한 바 있다. 2023년 이주민의 약 50%는 편자브 출신이었으며, 3분의 1가량은 카이베르파크툽와(Khyber Pakhtunkhwa, KP) 출신이었다. 2022~2023 회계연도의 해외 송금액은 총 404억 호주달러로 GDP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는 남아시아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자, 파키스탄의 상품 및 서비스 순수입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2.19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베나지르 소득지원프로그램(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 BISP)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자격을 갖춘 여성과 트랜스젠더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2023년 베나지르 소득지원프로그램(BISP)은 770만 가구(파키스탄 전체 가구의 20%)에 분기별로 7,000파키스탄루피(46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에사스(Ehsaas)'라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보호 제도가 긴급 현금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호우 및 홍수 피해를 입은 적격 대상자에게 2만 5,000파키스탄루피(164호주달러)를 지급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 단위 사회 보호 제도가 존재했으나 정치적 외압에 취약했으며,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통해 특정 공동체에 특혜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

2.20 헌법 제25조는 '국가는 5세부터 1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산 부족, 사회문화적 장벽, 역량 미흡, 부적절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교육 지출은 2023년 기준 GDP의 1.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인 4.2%를 크게 밑돌았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파키스탄의 학교 미등록 아동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5세부터 16세 아동 중 약 44%인 2,280만 명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21 파키스탄의 공교육 체계는 지방분권화되어 있으며, 유치원(3세 이상), 초등, 중등, 고등, 상급 고등 교육 단계로 구성된다. 전국적으로 약 18만 개의 공립 교육 기관이 운영 중이다. 학교 예산과 교육의 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이 농촌이나 오지보다 서비스와 시설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결과적으로 파키스탄 전역의 공립학교는 재정 부족, 교사 인력난 및 높은 결근율, 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2 2021년 기준, 파키스탄 학령기 아동의 약 42%가 사립 교육기관에 재학했다(이슬람 종교학교인 마드라사 제외). 중산층과 상류층은 이러한 사립학교의 월 수업료가 수 호주달러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여겼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대체로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았으나,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두 집단 모두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23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별 자원 및 지리적 격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파키스탄 전역의 교육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2024년 신드주 빈곤층 아동의 52%, 발루치스탄주 여아의 78%가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등 교육 단계(6~8학년) 여아의 전체 취학률은 37%에 불과했으며, 고등 교육 단계 이상(9~12학년)의 취학률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드주와 펀자브주에서는 교통편이 학부모들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는데, 특히 여아를 둔 부모들은 딸을 타 지역 학교에 보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과 여성 대상 폭력 특별보고관은 2024년 여아 교육에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의 북·남 와지리스탄 지역과 발루치스탄주에서 최소 4개의 여학교를 공격했다고 기록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와 발루치스탄주의 파슈툰(Pashtun)족 집단 거주 지역 일부에서는 여성 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여아는 종교 및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자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2.24 공립 및 사립 학교 외에도 파키스탄에는 약 3만 개의 등록된 마드라사(madrassa)와 2만 2,000개의 미등록 마드라사(이슬람 종교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교 참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드라사 학생 수는 약 460만 명이며, 대다수가 빈곤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드라사에서는 교육 외에도 음식, 의복,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소식통은 파슈툰(Pashtun)족 아동의 마드라사 입학은 종교적·문화적 이유보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18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마드라사 등록을 유도하고 마드라사의 교육 과정을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주류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24년 말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람성직자연맹(Jamiat Ulema-e-Islam Party, JUI-F)의 요구를 수용하여, 마드라사가 교육부 또는 산업부를 통한 대체 경로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25 연방교육부(Ministry of Federal Education)에 따르면, 2021년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정부는 교육의 통일성을 기하고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 국가 교육과정(Single National Curriculum, SNC)'을 도입했다.

단일 국가 교육과정(SNC)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초등 단계(1~5학년)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이후 2024년까지 중·고등 단계(6~12학년)로 확대 시행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단일 국가 교육과정(SNC)이 비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 교육 이수를 강요함으로써 학내 종교 차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사회, 과학 등 비종교 교과목 전반에 이슬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 종교 학생들을 비방하는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었다. 이는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교육이나 의식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의 비무슬림 시민 권익 보장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여성 권익 활동가들은 교과서 내 여성의 역할이 주로 가사 노동에 종속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학생들이 편향된 성 역할을 내면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26 파키스탄의 고등교육은 공립 및 사립 대학교와 그 부속 대학에서 제공되며, 직업교육 과정과 학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입학은 성적에 기반하나, 공립 교육기관은 농촌 및 저개발 지역 출신 학생과 정부 인정 소수 집단을 위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통계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지 소식통과 언론은 소수 종교 및 민족 출신이 파키스탄 대학 내에서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2.27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 및 발루치스탄주 일부 지역의 파슈툰(Pashtun)족 여아를 제외하면, 파키스탄인들이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법상 명시적인 보호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소수자들은 단일 국가 교육과정(SNC)에 따른 이슬람 교육 이수 강요 받는 등 이들이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종교 참조)

의료

2.28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파키스탄의 평균 기대수명은 66세였으며, 도시 지역의 기대수명이 농촌보다 더 높았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폐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파키스탄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세계에서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53명을 기록하여 세계 평균(37명)을 상회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열악한 식수 및 위생 상태로 인한 신생아 질환과 설사병, 이로 인한 영양실조가 주요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파키스탄의 전반적인 급성 영양실조율은 17.7%에 달했다. 파키스탄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소아마비)가 토착화되어 전파되는 단 두 국가 중 하나다. 2024년에는 총 70건의 소아마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보건 의료 종사자 참조).

2.29 파키스탄의 의료 수준과 접근성은 열악하다. 파키스탄의사협회(Pakistan Medical Association)는 정부가 2022-23 회계연도에 GDP의 1%를 의료에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세계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1명이었으며, 간호사와 조산사는 이보다 더 적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부적절한 인력, 보건 전문가의 불균등한 분포, 해당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이 높은 인구 증가율과 맞물려 파키스탄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농촌보다 훨씬 양호했다고 전했다. 큐레우스 저널(Cureus Journal)에 게재된 파키스탄 의료 체계의 과제에 관한 2023년 기사는 의료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심각한 건강 격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30 2010년 보건 의료 사무가 주 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는 지방 지구(district)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공립 및 사립 병원, 진료소, 일반의를 통해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여성 보건 의료 종사자들도 많은 농촌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통 치료사와 무면허 의료 시술자들이 파키스탄에서 활동 중이다.

2.31 파키스탄 국민은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주의 국공립 병원에서 일부 의약품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병원 1,201개소, 기초보건소(Basic Health Unit) 5,518개소, 농촌보건센터(Rural Health Centre) 683개소, 약국 5,802개소, 모자보건센터(Maternity and Child Health Centre) 731개소, 결핵센터 347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가용 병상 수는 약 12만 3,394개로 추산된다.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특히 신드주와 발루치스탄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력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의 국가 위험 및 산업 연구소는 2026년까지 GDP 대비 의료 지출 비중이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32 파키스탄 공공 의료 시설 및 자원의 미흡함은 민간 부문이 보완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민간 병원, 진료소, 임상 연구센터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농촌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주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외주화했으며, 의료 체계의 80% 이상이 민간 부문에 의해 운영되었다. 의료 비용의 약 60%는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했다.

2.33 2019년 파키스탄 정부는 최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재정적 보호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세하트 사후라트 프로그램(Sehat Sahulat Program, SSP)'을 도입했다.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세하트 사후라트 프로그램(SSP)을 관리하며 적격 가구에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했고, 해당 카드 소지자는 입원, 수술, 진단 검사 등 1차 및 2차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하트 사후라트 프로그램(SSP)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9월 현지 언론은 펀자브주에서 주 정부와 보험사 간의 대금 지급 분쟁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세하트 사후라트 프로그램(SSP)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2월 8일 나딤 잔(Nadeem Jan) 보건부 장관은 세하트 사후라트 프로그램(SSP)을 종료하지는 않겠으나, 이슬라마바드,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길기트-발티스탄(GB), 신드주 타르파르카르(Tharparkar) 지구에서 재정난으로 인해 프로그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3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인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나 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천차만별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미흡함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빈곤층과 취약 계층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타 집단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신 건강

2.35 파키스탄 정부는 2001년 정신건강 조례(Pakistan Mental Health Ordinance, MHO)를 제정하여 기존의 「정신이상법(Lunacy Act, 1912)」을 대체했다. 정신건강 조례(MHO)는 지역 서비스 개발과 환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 건강 상태의 '증진 및 예방' 전략을 강조했다. 2010년 보건 의료 사무가 주 정부로 이양된 후, 신드주는 자체적인 정신건강법(2013)을, 펀자브주는 정신건강 조례(MHO)에 기반한 「펀자브 정신건강법(2014)」을 각각 제정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신건강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공공 보건 부문은 아직 심리학을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2.36 파키스탄에서는 정신 질환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에 따르면 '정신 장애'가 파키스탄 전체 질병 부담의 4% 이상을 차지하며, 약 2,400만 명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또한 파키스탄의 정신 건강 장애 선별 및 치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가 1명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2.37 국공립 병원에는 정신건강 진료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신 질환 치료제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 학계와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키스탄 내 활동 중인 정신과 전문의는 약 270명, 심리학자는 500명 미만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4개의 대형 정신과 병원과 654개의 정신과 병동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관련 병상은 2.1개에 그쳤다.

정신 건강 분야의 재정 지원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90%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38 의학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이를 기피하는 이들은 흔히 '바바(baba)', '피르(pir)', '수피(sufi)' 등으로 불리는 전통 영성 치유사나 신앙 치유사를 찾는다. 이는 상당수 국민이 정신 질환을 초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신앙 치유법으로는 코란 구절의 반복 암송이나 신체에 '타위즈(taweez, 부적용 끈)'를 착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39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국민이 차별 없이 공공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은 지역별 편차가 크며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민간 정신건강 진료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빈곤층과 최취약 계층은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HIV 감염자

2.40 파키스탄의 첫 HIV 감염 사례는 1987년 보고되었으나, 본격적인 확산세는 2004년 이후 시작되었다. 2018년 편자브주에서는 지역 의료 시설의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대규모 HIV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2021년 전국적으로 약 2만 5,000건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2만 7,000건이 추가되었다. 2023년 기준 성인 21만 명과 15세 미만 아동 4,600명이 HIV 감염자로 집계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빈곤, 낮은 문해율, 성차별, 감염 경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위험군이 검진과 확진 사실 공개를 기피하면서 HIV 전파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은 전통적 고위험군(주사 약물 사용자, 트랜스젠더, 성매매 종사자, 동성 성관계를 하는 남성 등) 내 HIV 유병률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집중 유행' 단계로 분류되었다.

2.41 파키스탄 정부는 70개 HIV 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모든 HIV 감염자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이들에게 무료 검사,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 시설에서 모든 HIV/AIDS 관련 의료 서비스가 완비된 것은 아니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국가에이즈관리프로그램(National Aids Control Program)에 따르면, 전체 HIV 감염자 중 치료를 위해 등록된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2023년 기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를 받은 비율은 61%에 그쳤다.

2.42 파키스탄에는 HIV가 '부정한' 행위나 혼외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를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는 동성 간 성행위와 결부시켜, 낙인과 편견,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HIV 감염자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감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후원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58%와 남성의 62%가 가족의 HIV 감염 사실을 비밀에 부치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4% 이상은 HIV에 감염된 상인에게서 채소를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35%, 남성의 48%는 HIV 감염 교사의 교직 유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2017~2018년 파키스탄 인구보건조사(PDHS)'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HIV 감염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HIV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낮은 교육 수준이 이러한 차별적 태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43 2023년 3월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의 HIV 감염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대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공통된 경험을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 감염자와 그의 가족은 "사회적 거부와 차별, 낙인에 시달리며 공동체 내에서 마치 버림받은 존재가 된 기분이다"라고 호소했다. 한 여성 감염자는 7세 자녀와 함께 친척들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강제 이주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방될 것을 우려해 마을 주민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 의학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는 2017년 HIV 감염자들이 치과 진료, 수술, 산과 진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HIV 양성 진단 사실이 감염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2.44 신드주는 HIV 감염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유일한 주다. 「신드 HIV법(Sindh HIV Law, 2014)」 제3장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공공시설 이용 등 제반 서비스 분야나 주거(임대·매매 등) 관련 사항에서 타인의 HIV 감염 사실 또는 감염 의심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드주에서 개인의 HIV 감염 사실을 근거로 차별한 자는 5만 파키스탄루피(약 273호주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집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2.45 헌법은 '지위, 기회,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정의'를 포함한 파키스탄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에는 HIV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 법률이 부재하다. 2018년 파키스탄 정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CSO)와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HIV 예방 교육 및 검사·상담을 실시하고 치료 서비스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3년 기준 약 54개의 시민사회단체(CSO)에서 HIV/AIDS 인식 제고 및 감염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4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HIV 감염자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을 포함하여, 감염 사실에 근거한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HIV 감염자는 주거 및 고용 접근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단순히 HIV 감염 사실만으로 가해진 폭력 사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성소수자(LGBTQIA+) 공동체 구성원인 감염자의 경우 그 위험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체제

정부 구조

2.47 파키스탄은 국민의회(하원)와 상원(Senate)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를 둔 연방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은 의회, 총리, 대법원에 귀속되며, 그 외 당국의 권한과 의무는 의회법으로 규정된다. 총리는 국민의회에서 선출되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며, 대통령의 역할은 주로 의례적인 수준에 그친다. 군부는 이론상 총리와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구조이나, 실제로는 정보기관 및 친군 성향의 관료와 민간인을 통해 정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48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336석과 96석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 336석 중 266석은 소선거구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60석은 여성에게, 10석은 비무슬림 소수자에게 각각 할당된다. 할당 의석은 폐쇄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된다. 각 주 의회는 상원의원 23명을 선출하며, 국민의회는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 대표 상원의원 4명을 선출한다. 다만 길기트-발티스탄(GB)과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상원 의석은 배정되어 있지 않다.

2.49 파키스탄은 선출직 주 의회와 주 정부를 갖춘 4개의 주로 구성된다. 4개 주는 발루치스탄주(주도: 퀘타(Quetta)), 카이베르파크툽와주(주도: 페사와르(Peshawar)), 펀자브주(주도: 라호르(Lahore)), 신드주(주도: 카라치(Karachi))이다. 이 중 카이베르파크툽와주는 과거 북서변경주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의 구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을 포함한다.

이슬라마바드는 '연방 수도권(Federal Capital Territory)'으로서 독자적 지위를 지닌다. 각 주 정부는 주총리가 이끌며, 각 주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존재한다.

2.50 지방 행정은 구역, 지구, 소구(테실(tehsil) 또는 타실(tahsil)), 시 및 마을 의회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된다. 이들 단위는 구역장, 지구 행정관, 소구 치안판사, 소구 관리관 또는 테실다르(tehsildar) 등 위계적 행정 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핵심 행정 단위인 지구의 행정관은 선출직인 지구 의회 의장과 권한을 분담한다.

2.51 2018년 5월 31일까지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은 연방 정부의 직접 관할 하에 있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식민지 시대 법률인 「변경범죄규정(Frontier Crime Regulations, FCR)」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와 사법 접근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집단 처벌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했다. 구 연방직할부족지역(FATA) 관할 구역들은 현재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로 편입되었다.

2.52 18세 이상의 파키스탄 시민은 투표권을 보유하나, 아흐마디야(Ahmadi)교 신자들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인들은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보다는 민족·지역적 유대나 봉건적 관계에 기반하여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임란 칸(Imran Khan)이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 전국적으로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면서 이러한 선거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53 이슬라마바드와 각 주의 현지 소식통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파키스탄은 167개국 중 124위를 기록하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을 '부분적 자유' 국가로 규정하며, "군부가 안보 및 주요 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위협하며, 무차별적인 법외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당국이 시민적 자유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 세력이 종교적 소수자와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4 임란 칸 전 총리는 2024년 2월 총선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소속 정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PTI)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2024년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와 정보기관, 경찰은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의 집회 개최를 빈번히 차단하고 주요 당직자들의 활동 금지 및 체포를 단행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정의운동(PTI) 계열 무소속 후보들은 전체 266개 선출 의석 중 90석 이상을 확보했다. 2024년 7월 12일 대법원은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법률상 정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할당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이 결정을 거부했다.

2.55 일부 국가와 인권 단체들은 2024년 2월 파키스탄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 개입 및 투표 조작 여부를 평가했다. 일례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일부 정당의 선거 참여가 배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당국의 광범위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탄압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정당 상징 사용 금지와 지지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괴롭힘이 후보자 간 형평성을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 파키스탄 당국이 선거 기간 중 야당 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2월 17일 펀자브주 라왈핀디(Rawalpindi) 행정관은 선거 결과 조작을 위해 막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선거 조작과 관련된 청원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패

2.56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파키스탄 전역에 크고 작은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부패의 역사적 요인으로 공공 부문의 낮은 임금, 법치보다 우선시되는 족벌주의, 후원 및 친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꼽았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 파키스탄 인권보고서'는 "모든 직급의 관료들이 부패 행위에 빈번히 가담했으며, 정치와 행정 전반에 부패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수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뇌물 수수, 갈취, 정실주의, 족벌주의, 부정축재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증가했으며, 사회 서비스, 교육, 의료 접근은 물론 국가 보호 및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뇌물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2.57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파키스탄을 180개국 중 133위로 평가하며, 공공 부문 내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2024 법치지수'에서도 142개국 중 129위를 기록했으며, 조사 결과 파키스탄 시민 대다수가 부패 문제로 인해 사법 제도의 정의 구현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0 국가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고용, 교육, 사법 서비스 접근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신드주의 여성 노동자들은 남편의 아내 폭행 사건조차 경찰에 뇌물을 건네면 무마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발루치스탄주의 노동자들은 부유층이 공립학교 시험 문제를 매수하거나 교사를 매수하여 부정행위를 묵인받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불공정성을 호소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의 청년들은 병원 진료를 위해 별도의 '소개비'를 지불해야 하는 실태를 언급했으며,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역 응답자들은 공직 채용 시 족벌주의와 정실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58 국가책임국 조례(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Ordinance, 1999)에 의거하여 부패 및 금융 범죄 척결을 담당하는 독립 연방 기관인 국가책임국(NAB)이 설립되었다. 국가책임국(NAB)은 재정 부실 관리, 테러 자금 조달, 부패 등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조사 수행, 체포 영장 발부 권한을 지닌다. 해당 조례 제10조제(a)항은 '부패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또는 개인은 최대 14년의 징역형(고역형) 및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9 다수의 시민사회단체(CSO)와 인권 활동가, 정치인들은 국가책임국(NAB)이 주로 정부 비판 인사나 군부 및 보안기관의 눈 밖에 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국가책임국(NAB)이 합리적 근거 없이 야당 정치인 카와자 사드 라피크와 카와자 살만 라피크를 15개월간 구금한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국가책임국(NAB)이 '법치와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가책임국(NAB)이 정부 측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례로 자베드 차우드리 전 의장은 2019년 5월 인터뷰에서 정국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바 있다.

2.60 국가책임국 조례(1999)는 군 장교를 공직자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하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0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군부가 파키스탄 최대의 기업 집단이자 부동산 개발 주체로서 공공 건설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현지 및 국제 언론은 전·현직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이 약 167억 호주달러 가치에 달하는 두바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선출직 관료나 사법부가 군부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고위 장성들의 역외 회사를 통한 거액의 자금 유출과 부동산 투자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 '팩트포커스(FactFocus)'는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6년 동안 그 가족이 약 8,000만 호주달러 상당의 출처 불명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도했으나, 보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당국의 조사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2.61 각 주 정부는 지역 내 부패 척결을 위해 편자브주의 반부패 규칙(Anti-Corruption Rules, 1965), 신드주의 조사 및 반부패 규칙(Enquiries and Anti-Corruption Rules, 1993), 발루치스탄주의 조사 및 반부패 규칙(Enquiries and Anti-Corruption Rules, 2011),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정보권법(Right to Information Act, 2013)」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주에 반부패기관(anti-corruption establishments, ACE)을 설립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고위 정치인들이 반부패기관(ACE)의 업무에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기관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일례로 2023년 12월, 발리구르 레만(Balighur Rehman) 편자브 주지사는 편자브 반부패기관(개정) 조례(Punjab Anti-Corruption Establishment Amendment Ordinance, 2023)를 공포하여, 공무원 대상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반부패기관(ACE)의 권한을 축소했다. 또한 2023년 11월 마크불 바카르(Maqbool Baqar) 신드주 총리는 지난 5년간 반부패기관(ACE)의 유죄 판결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2.62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경쟁(제보자 보상금 지급)규정(Competition (Reward Payment to Informants) Regulations, 2014)은 제보자의 신원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들은 신원 노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적대적인 근무 환경, 해고 위협 및 피고발 조직의 보복 등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63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연방과 주의 반부패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일반 시민이 뇌물 및 부패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전무한 상태다. 2022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직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책임 추궁 절차가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법 시스템 전반이 부패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기 행위의 만연, 경찰 참조).

인권 체계

2.64 파키스탄 헌법 제8조부터 제28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 이동·결사·언론의 자유, 시민의 평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종, 종교, 카스트 또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여러 인권 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이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2.65 파키스탄은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나, 실질적인 조약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전체 협약 목록은 [UN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참조). 파키스탄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그리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관련 상세 내용은 고문, 강제 실종, 사형 섹션을 참조한다.

2.66 1995년 설립된 인권부(Ministry of Human Rights)는 헌법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강화할 책무를 지닌다. 2016년 인권부는 인권 실행 계획(Action Plan for Human Rights)을 수립하고, 연방 및 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업의 인권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 실행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이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집행력 또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7 연방 차원의 인권 관련 입법 담당 기관으로는 법무부(Ministry for Law and Justice), 종교사무 및 종교간 화합부(Ministry for Religious Affairs and Interfaith Harmony), 이슬람이념위원회(Council for Islamic Ideology, CII) 등이 있다.

이슬람이념위원회(CII)는 법률의 이슬람 교리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입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헌법 기관으로, 정부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인권 관련 민감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 및 주 인권위원회

2.68 파키스탄에는 여러 공식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나, 일부는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NCHR)는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ct, 2012)」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율 기구다. 또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라 구성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자 연방법정기구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NCHR)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국가의 인권 준수 상황 전반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연방 차원의 전문 인권위원회로서 여성지위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Status of Women, NCSW), 소수자권리위원회(Commission on Minority Rights), 아동권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이 운영되고 있다.

2.69 주 정부들은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된 지역 인권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NCHR) 제외)와 마찬가지로 주 단위 위원회 역시 접수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권고 기관에 불과하다. 이들 위원회는 직접적인 집행 조치 권한이 없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로 관련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신드 인권보호법(Sindh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2011)」에 의거한 신드 인권위원회(Sindh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인권 침해 감시 및 불만 사항 조사 책임을 지니고 있으나, 그 권한은 신드주 정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2.70 파키스탄 전역의 현지 소식통은 연방 및 주 단위의 정부 산하 인권위원회들이 근무 조건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권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또한 각 주의 인권위원회가 실무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시(市) 단위의 서비스 제공 문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상황

2.71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의 안보 상황은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파키스탄의 나머지 지역은 펀자브주와 신드주에서 발생한 산발적인 공격을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Ahmed Sharif Chaudhry) 소장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파키스탄군이 총 3만 2,173건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교와 병사 193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2.72 안보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 Security Studies, CRSS)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대테러 군사 작전으로 인해 총 2,5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지역별로는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가 1,61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발루치스탄주 782명, 펀자브주 66명, 신드주 55명,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길기트-발티스탄(GB) 지역에서는 1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다.

2.73 이슬라마바드 소재 싱크탱크인 파키스탄분쟁안보연구소(Pakistan Institute for Conflict and Security Studies, PICSS)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파키스탄 전역에서 785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하여 951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보안군 병력 62명이 사망하며 연중 최대 월간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와 발루치스탄주에 집중되었다. 파키스탄분쟁안보연구소(PICS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첫 8개월 동안 757명이 사망하고 유사한 규모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만 민간인 92명과 보안군 52명을 포함해 총 2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74 2023년 무장 세력의 공격 및 대테러 작전 발생 건수는 2022년 대비 56% 급증했다. 파키스탄 안보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Security Studies, CRSS)에 따르면, 2023년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789건의 공격과 작전으로 1,524명이 사망하고 1,463명이 부상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outh Asia Terrorism Portal, SATP)은 같은 기간 동안 527건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1,502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2023년 파키스탄의 안보 사건 관련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력 사태는 주로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에 집중되어 전체 사망자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 펀자브주와 신드주의 사망자 비중은 8%에 그쳤다. 이러한 공격은 종교적 극단주의, 종파 간 증오, 민족 갈등, 국내 정치 및 경제난, 그리고 인접국(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과의 긴장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했다.

2.75 안보연구센터(CRSS)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파키스탄에서 약 586건의 무장 세력 공격이 발생했다. 이 중 17%는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또는 fitna al khawarij), 발루치스탄해방군(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또는 Da'esh) 등의 무장단체가 배후를 자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무장단체 참조). 보안군은 2023년에 약 197건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537~545명의 무장 대원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보안군 500명이 전사했다.

2.76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ak Institute for Peace Studies, PIPS)는 2023년 발생한 공격이 대부분 보안군을 직접 겨냥했으나, 예배 장소와 소수 종교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포함되었다고 보고했다. 공격에는 주로 총기와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이 사용되었으며, 로켓, 수류탄, 자살 폭탄 공격 사례도 발생했다. 파키스탄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에는 종파 간 폭력이 증가하여, 12건의 종파 관련 공격과 4건의 충돌로 인해 43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했다.

2.77 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의 주별 안보 상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본 정보는 작성 당시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확보한 최선의 데이터에 근거하나, 파키스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출처에 따라 통계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2.78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2024년 총 405만 명 인구의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파키스탄이 관할하나 공식적으로는 연방에 통합되지 않은 자치주)에서는 테러 공격이나 대테러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은 2023년 해당 지역에서 무장 극단주의자 1명이 사망한 것 외에 보안군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반군 및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민간인 총 3명이 사망했으나, 보안군 사망자는 전무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 인도-파키스탄 통제선(Line of Control) 및 잠정 경계선(Working Boundary) 인접 지역에서 4건의 무장 세력 공격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발루치스탄주

2.79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인구 1,489만 명의 발루치스탄주에서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관련 대테러 작전으로 총 78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스탄주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파키스탄군을 표적으로 하는 민족주의·분리주의 성향의 반군 공격이 2024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2024년 11월 9일 켄타(Quetta) 기차역에서 파키스탄 부사관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로 27명이 사망한 사건과, 2025년 3월 11일 무장 세력이 약 440명의 승객이 탑승한 '자파르 익스프레스' 열차를 납치하여 25명이 사망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80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 발루치스탄주에서 반군 및 종교 성향 무장단체가 총 110건의 공격을 감행하여 229명이 사망하고 282명이 부상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 데이터는 2023년 발루치스탄주에서 169건의 안보 사건이 발생해 4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국내외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 및 지역 매체 폐쇄로 인해 해당 주의 안보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한 전체 공격 건수가 보고된 수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81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발루치스탄주 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보안군(39%)이었으며, 그 뒤로는 무장 대원(테러리스트·반군·극단주의자, 35%), 민간인(26%)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케치·투르바트(Kech/Turbat) 지구(103명 사망)였으며, 마스통(Mastung), 퀘타(Quetta), 조브(Zhob) 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발루치스탄주 36개 지구 중 잘 막시(Jhal Magsi), 킬라 사이풀라(Killa Saifullah) 등 7개 지구에서는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82 발루치스탄주는 대다수 민간인에게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었으나, 2024년 들어 종파 간 폭력과 군 및 보안기관에 대한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락산(Rakhshan) 구역의 농촌과 칼라트(Kalat) 구역의 아와란(Awaran) 지구가 민간인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혔으나, 퀘타(Quetta)와 과다르(Gwadar) 같은 도시는 2023년 10월 기준 민간인에게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해당 주의 '군사화' 현상을 지적하며 많은 학교 건물이 군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사 작전 횟수가 증가하여 때로는 하루 45건 이상 수행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무장 집단 억제를 위한 단순 '수색 작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2.83 현지 소식통은 정부나 군부 및 보안기관이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는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의 경우, 무장 세력이나 보안기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또한, 주민들이 군과 변경경비대(Frontier Corps)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군 및 테러 집단이 자신들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무장 집단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2024년에 782명의 사상자가 기록되는 등 특정 지구에서는 무장 세력과 보안기관 간 교전 중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의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84 무장단체, 발루치족, 하자라족, 파슈툰족 참조.

길기트-발티스탄(GB)

2.85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인구 149만 명의 준주(semi-province)인 길기트-발티스탄(GB)에서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대테러 작전으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은 2023년 발생한 경제·종교적 성격의 장기 시위와 보안군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인해 길기트-발티스탄(GB) 지역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는 2023년 디아미르(Diamir) 지구에서 1건의 종파 관련 공격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12월 3일에는 무장 세력이 길기트-발티스탄(GB) 북부 카라코람 하이웨이(Karakoram Highway)를 주행하던 버스에 총격을 가해 군인 2명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했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

2.86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인구 236만 명의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에서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대테러 작전으로 총 26명이 사망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에 따르면, 2023년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내에서 무장 대원(테러리스트·반군·극단주의자) 1명이 사망한 것 외에 보안군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서 발생한 무장 단체의 공격 및 대테러 작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5명이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2.87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인구 4,086만 명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에서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관련 대테러 작전으로 총 1,616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 해당 주에서 174건의 공격이 발생하여 422명이 사망하고 782명이 부상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은 2023년 총 310건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9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 내 테러 활동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남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2023년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자살 공격 31건 중 25건이 해당 주에서 발생했다.

2.88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중 75%는 군대와 경찰 등 보안 및 법 집행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무장 대원(테러리스트·반군·극단주의자, 44%)이었으며, 그 뒤로 보안군(35%), 민간인(21%) 순으로 나타났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구는 북와지리스탄(151명 사망)이었으며, 페샤와르(122명), 데라 이스마일 칸(109명), 남와지리스탄(107명), 바자우르(9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아보타바드(Abbottabad), бата그람(Batagram) 등 9개 구에서는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록되지 않았다.

2.89 쿠람(Kurram) 지구는 보안군이 대거 주둔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질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 21일 총격범들이 파라치나르(Parachinar)와 페샤와르(Peshawar) 사이를 이동하던 시아파 무슬림 호송대를 공격하여 4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전까지 수니파(Sunni)와 시아파 간의 종파 분쟁은 2023년 수립된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 대화를 통해 중재된 바 있다(종교, 방가쉬족, 투리족 참조). 본 보고서 작성 당시 파라치나르 공항 노선은 운영되지 않았으나, 현지 소식통은 해당 사건 전까지 페샤와르와 쿠람 간의 도로 접근성 및 치안 상태가 대체로 양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부는 2023년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따라 초소를 설치하여 치안을 개선했으나, 부족 간 분쟁에 대한 경찰의 개입 역량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0 현지 소식통은 북와지리스탄과 남와지리스탄 지구가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2024년 도심 외곽 도로에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검문소를 설치했다는 보고도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또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가 해당 주에서 활동하며 폭탄 공격과 납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TTP와 IS-KP는 2019년 이후 주로 보안군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지양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부족 지역 외부에서 무장 세력이 파슈툰(Pashtun)족을 추적한 사건은 알려진 바 없다. 한편, 2024년 3월 26일 베삼(Besham)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호송대 중 중국인 국적자 5명이 사망했다.

2.91 무장단체, 방가쉬족, 하자라족, 파슈툰족, 투리족 항목 참조.

편자브주

2.92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인구 1억 2,769만 명의 편자브주에서는 2024년 테러 공격 및 이와 관련된 대테러 작전으로 66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는 2023년 해당 주에서 6건의 무장 공격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편자브주에서 16건의 '사건'이 발생해 총 49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 편자브주 내 공격 중 4건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JP)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3건은 미안왈리(Mianwali), 1건은 카네왈(Khanewal)에서 발생했고, 이 공격들은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 직원을 표적으로 삼았다. 발루치 민족군(BNA)은 자파르 익스프레스(Jaffar Express) 여객 열차를 겨냥한 급조 폭발물(IED) 공격 1건에 대해 배후를 자처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와 별도로 라호르(Lahore)에서는 시크교(Sikh) 지도자인 파람지트 싱 판즈와르(Paramjit Singh Panjwar)가 신원 미상의 공격자들에게 살해되었으며, 이는 종파 폭력 사례로 보고되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은 2023년 편자브주 사망자 49명 중 78%가 '테러리스트·반군·극단주의자'인 것으로 분류했다.

신드주

2.93 인구 5,570만 명의 신드주에서는 안보연구센터(CRSS) 통계 기준 2024년에 테러 공격 및 대테러 작전으로 55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2023년 신드주에서 15건의 무장 공격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다. 이 중 14건은 카라치(Karachi, 인구 2,038만 명)에서, 1건은 신드 내륙 잠소로(Jamshoro)에서 발생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은 2023년 28건의 안보 '사건'으로 총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3년 신드주에서 기록된 공격 중 7건은 민족주의 반군 단체의 소행이었으며, 이 중 4건은 신두데시 혁명군(SRA), 3건은 발루치 반군 단체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카라치 경찰청에 총기 및 폭탄 복합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4명과 무장 대원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무장단체

2.94 파키스탄의 무장단체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나, 각 범주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지향, 국제 지향, 인도 및 카슈미르 지향, 그리고 반시아파(anti-Shi'a) 무장세력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 학계는 수십 년간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 보안기관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및 반(反)인도 성향의 자이쉬-에-모하메드(Jaish-e-Mohammed, JeM)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정부 지원 무장세력은 시간이 흐르며 자율성을 확보했고, 현재 일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국제 학계와 언론은 지하드 단체를 '동맹'으로 간주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무장단체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국내에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무장단체가 파키스탄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조차 공격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대중적 동조는 무장단체가 마드라사(madrassa, 이슬람 신학교)로부터 신병을 모집하는 데 기여했으며, 일부 마드라사는 전투적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기도 했다.

2.95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인도와 카슈미르에 적대적인 무장단체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 단체는 대개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국제 학계 보고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2015년 이후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 국가 목록(grey list)'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무장단체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2.96 파키스탄 내에는 반시아파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데오반디(Deobandi) 학파를 따르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 LeJ)는 파키스탄 내 시아파 영향력 일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시아파 공동체와 예배 장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자라(Hazara)족, 아흐마디야(Ahmadi), 기독교도, 힌두교도 등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공격을 자행해 왔다. 라슈카르-에-장비(LeJ)는 호주 「형법전(Criminal Code, 1995)」에 테러 조직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엔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2015년 2월 분열을 겪은 후 다수의 조직원이 발루치스탄주의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에 합류하거나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한 분파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합병했다.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라슈카르-에-장비(LeJ)는 2024년 파키스탄 내에서 발생한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Raji Aajoi Sangar, BRAS) 및 발루치스탄 공화국군(Balochistan Republican Army, BRA)

2.97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 민족해방전선)는 주로 아라비아해 인근과 이란 국경을 따라 발루치스탄 남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연합체이다.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는 2018년 발루치스탄 공화국군(Balochistan Republican Army, BRA), 발루치스탄 해방군(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발루치스탄 해방전선(Balochistan Liberation Front, BLF)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후 발루치스탄 공화국군(BRA)의 한 분파가 2022년 1월 통합 발루치군(United Balochi Army, UBA)과 합병하며 연합 내 별도 조직인 발루치 민족군(Baloch Nationalist Army, BNA)을 형성했다.

2.98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는 무기, 장비, 정보, 은신처 등 자원을 공유하고 발루치스탄주의 보안군, 중국인 노동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프로젝트를 겨냥한 공격을 조율함으로써, 파편화되어 있던 발루치 분리주의 운동의 통합을 지향한다.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가 종교적 색채가 없는 세속적 운동 단체라고 전했으나, 일부 구성원은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는 발루치인을 위한 독립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며, 파키스탄과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이 발루치스탄 영토 내 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다수의 안보 분석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은 발루치스탄의 천연자원 착취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 초기부터 발루치 분리주의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10월 7일,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은 카라치(Karachi) 공항 인근에서 중국인 기술자와 투자자 호송대를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중국인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2.99 남아시아테러포털(SATP)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은 파키스탄 보안기관에 의한 발루치인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 지역 저개발, 그리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 방치' 등을 명분으로 보안군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2020년 국제 학계는 발루치 분리주의자들의 반파키스탄 정서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구성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프로젝트가 주로 타 주 출신 및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편자브족과 파슈툰(Pashtun)족이 발루치스탄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발루치인이 소수 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BLA는 2024년 4월 12일 퀘타(Quetta)에서 타프트탄(Taftan)으로 이동하던 편자브족 남성 9명을 정보 요원으로 지목하여 납치 살해한 바 있다.

2.100 2025년 3월 11일,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은 여객 열차를 납치해 승객을 인질로 잡고 객차에 방화를 저질렀으며, 이후 보안군의 개입으로 무장 대원 33명이 사살되었다.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BLA와 BLF를 포함한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 연합은 2024년 1분기 동안 발루치스탄주와 신드주에서 발생한 18건 이상의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의 주요 표적은 과다르 항만 단지(Gwadar Port Complex), 마크 교도소(Mach Jail), 투르바트 해군 기지(Turbat Naval Base) 등 핵심 치안 및 정부 시설이었다. 구체적으로 3월 20일 과다르 항만청 거주지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했으며, 2월에는 급조폭발물(IED) 및 로켓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조직들이 선전 효과를 위해 공격 규모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검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따르면, 발루치스탄 해방군(BLA)과 발루치스탄 해방전선(Balochistan Liberation Front, BLF)은 2023년 발루치스탄 보안군을 표적으로 78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하여 86명을 살해하고 13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101 발루치스탄 해방군(BLA)과 발루치스탄 해방전선(BLF)이 파키스탄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무장단체인 반면, 발루치 공화국 수비대(BRG)나 라슈카르-에-발루치스탄(Lashkar-e-Baluchistan)과 같은 분파 조직들은 2023년과 2024년에 새롭게 등장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 반군 세력은 현지 민간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신생 분파 조직들은 치안 기관에 협력하거나 CPEC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지인'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SATP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 말까지 발루치스탄 내에서 살해된 '외지인(주로 편자브족)'은 총 254명에 달한다.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2.102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두고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그 외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국제 수니파 무장단체다. IS-KP는 2014년 10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ISIL 또는 다에쉬(Da'esh))'의 지역 지부로 출범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칼리프 제국 건설을 목표로 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이를 배교자나 이교도로 간주하는 극단적 살라피 지하디스트(Salafist jihadist) 이념을 따른다. 역사적 의미의 '호라산(Khorasan)'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이란 일부를 포괄하는 지역을 뜻하나, 2019년 초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활동 범위를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 학계에 따르면, IS-KP는 보편적 이슬람 지하드를 추구하고 기존의 국제 국가 체계를 부정함으로써 아프간 탈레반 및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살라피 이념은 탈레반이 따르는 데오반디(Deobandi) 이슬람 학파와도 신학적 차이가 뚜렷하다.

2.103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2023년 기준 IS-KP의 무장 대원 규모를 4,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추산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과거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조직원이었거나,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아프간 탈레반 전투원들이다. IS-KP의 신규 조직원은 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기반의 살라피주의자(대부분 파슈툰(Pashtun)족) 및 외국인 동조자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3년과 2024년에 들어서는 불만을 품은 도시에 거주 중인 비파슈툰 청년들의 가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초기 IS-KP 지도부는 TTP 핵심 지휘관 출신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인적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한편, 아프간 탈레반이 전 IS-KP 지휘관 사나울라 가파리(Sanaullah Ghafari, 일명 사합 알무하지르)를 살해한 이후, 현재 누가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04 2024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주요 테러 공격으로는 2월 7일 발루치스탄주 피신(Pishin)과 킬라 사이풀라(Killa Saifullah) 지구의 정당 사무소에서 발생하여 30명의 사망자를 낸 연쇄 폭탄 테러를 꼽을 수 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IS-KP는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 바자우르(Bajaur) 지구에서 8건의 공격을 수행했다. 또한 2023년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총 31건 중 3건이 이들의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민간인 64명이 사망한 바자우르 지구 테러, 63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마스통(Mastung) 지구 테러, 그리고 경찰관 9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한 발루치스탄주 볼란(Bolan) 지구 테러 등이 있다.

2.105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호주 「형법전(Criminal Code, 1995)」에 따라 호주에서 테러 조직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S-KP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L/다에쉬)' 및 '알카에다(al-Qa'ida)'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신두데시 혁명군(Sindhudesh Revolutionary Army, SRA)

2.106 신두데시 혁명군(SRA)은 주로 신드주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 내 신드 민족주의·분리주의 반군 단체다. SRA는 2010년 12월, 신드인을 위한 독립 국가인 '신두데시(Sindhudesh)' 건설을 목표로 파키스탄 중앙 정부 및 신드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2022년 기준 신두데시 혁명군(SRA)의 무장 대원 규모를 1,500명에서 2,500명 사이로 추산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SRA의 지도자는 사예드 아스가르 샤(Syed Asghar Shah)다. 2020년 7월 26일, 신두데시 혁명군(SRA)은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와 동맹을 맺어 정부에 맞서는 연합 전선을 구축했으며, 신드와 발루치스탄주의 '해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신두데시 혁명군(SRA)과 발루치 라지 아조이 상가르(BRAS) 모두 이란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해 왔다.

2.107 2024년 신두데시 혁명군(SRA)의 공격은 신드주 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다. 주요 사례로는 1월 2일 다두(Dadu) 지구에서 발생한 경찰 매복 공격과 2월 2일 카라치(Karachi)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인근의 폭탄 테러 등이 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신두데시 혁명군(SRA)은 2023년 카라치에서 3건, 잠쇼로(Jamshoro)에서 1건 등 총 4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남아시아 테러 포털(SATP)은 SRA가 2023년 신드주에서 다수의 무장 대원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했다. 피해자 중에는 샤히드 베나지라바드(Shaheed Benazirabad) 지구의 라슈카르-에-타이바(LeT) 핵심 조직원과 카라치 지역의 전 알 바드르(Al Badr) 지휘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지하드운동(Tehreek-e-Jihad Pakistan, TJP)

2.108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ehreek-e-Jihad Pakistan, TJP)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기반을 둔 파키스탄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다. TJP는 파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로 변모시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체제와 유사한 신정적 샤리아(Sharia)법을 도입할 목적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맞서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 2월 설립되었다. 또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영국령 인도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했던 분할 전 국경 지역의 복원을 추구한다.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JP) 구성원들은 데오반디(Deobandi) 학파의 엄격한 추종자들이며, 2024년 초 기준 조직의 수장은 압둘라 야기스타니(Abdullah Yaghistani)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TJP의 전체 무장 대원 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2.109 파키스탄 지하드운동(TJP)의 이념과 작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국제 안보 분석가는 이 단체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의 분파 단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2023년 2월에 현지 언론은 파키스탄 지하드운동(TJP)이 공격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무장단체(예: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가 사용하는 위장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안보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서로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수의 국제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 지하드운동(TJP)이 이념적으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에 더 가까운 별개의 독립적 단체라고 보고 있다.

2.110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JP)은 2023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총 31건의 자살 폭탄 테러 중 최소 3건을 자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12월 12일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 데라 이스마일 칸(Dera Ismail Khan) 지구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군인 23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TJP는 2023년 한 해 동안 페샤와르(Peshawar), 바자우르(Bajaur), 락키 마르와트(Lakki Marwat)의 보안군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자살 공격을 추가 감행했다. 또한 19명이 사망한 2023년 3월 6일 퀘타(Quetta) 자살 테러와 12명이 사망한 4월 25일 스와트(Swat) 지구 카발 경찰서 자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이 외에도 2023년 11월 펀자브주 미안왈리(Mianwali)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발루치스탄주 조브(Zhob) 지구에서 군 장병 14명을 살해했다. 다만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JP)은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 발생한 공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2.111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ehreek-e-Taliban Pakistan, TTP)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둔 수니파(Sunni) 무슬림 무장단체로서, 2007년 연방직할 부족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FATA) 내 지역 파슈툰(Pashtun) 무장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연합 운동으로 창설되었다. 2014년 군사 단속과 내부 분열 이후 많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조직원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해 아프간 탈레반 반란에 합류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권에 성공하자, 미군과 기존 아프간 정부에 수감되었던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구성원 수백 명이 석방되면서 적극 활동하는 구성원의 수가 증가했다.

2.112 2021년 11월 상당수의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무장 대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복귀했으며,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지도부는 파키스탄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 2021년 11월 9일 한 달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2021년 12월 10일 휴전이 종료된 후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의 공격이 발생했다. 이후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상을 재개하고 2022년 5월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부재를 이유로 2022년 9월 2일 공격을 재개했으며, 휴전 종료는 2022년 11월 28일해야 공식 선언했다.

2.113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투원 1만 2,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기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병력 규모를 7,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추산한 바 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 북부 일부 지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114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의 단기 목표는 파슈툰족 지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립한 체제와 유사한 신정적 샤리아법을 시행하여 파키스탄(또는 그 일부 지역)을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의 파슈툰족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 세력임을 지역민에게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14년 페샤와르(Peshawar) 육군학교(Army School) 공격 및 2012년 여성 교육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암살 시도와 거리를 두려는 행보를 보였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24년 선거 유세 현장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파키스탄군과 보안군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이들은 진정한 반정부 무장 저항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3~2024년의 종파 간 공격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2.115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아프간 탈레반을 모방하여 더욱 민족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족 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개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담론 대신 식민지 시대에 사용되던 수사(rhetoric)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현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지하드' 대신 '부족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지역 내 불만 여론을 이용하려 했으며, 파슈툰족과 발루치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패한 통치자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부각하려 했다. 한편 2023년 국제 안보 분석가들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아프간 탈레반의 통치 모델을 모방하려는 시도 외에, 구체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의제는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16 2023년 11월 8일,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탈레반이 은신처 제공, 물자 지원, 이념적 지도 등을 통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아프간 탈레반은 이념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제 안보 분석가들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활동 면에서는 아프간 탈레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모든 초국가적 또는 역내 의제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활동 범위를 파키스탄 내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식통은 이들이 여전히 국제 지하드 운동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2.117 안보연구센터(CRSS)에 따르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 파키스탄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 2월 초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데라 이스마일 칸(Dera Ismail Khan) 지구 경찰서를 중화기로 공격하여 경찰관 최소 10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군을 겨냥한 추가 공격을 이어갔으며, 10월 25일에는 대규모 TTP 무장대원들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KP) 데라 이스마일 칸 인근의 국경 치안부대 전초기지를 장악하고 최소 10명의 경찰관을 살해했다. 11월 20일에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반누(Bannu) 검문소에서 군 장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평화연구소(PIPS)에 따르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23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총 31건의 자살 폭탄 테러 중 11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KP, 카이버(Khyber), 북와지리스탄(North Waziristan), 반누(Bannu), 페샤와르(Peshawar) 지구 등)에서, 나머지 1건은 발루치스탄주 퀘타(Quetta)에서 발생했다. 해당 11건의 자살 폭탄 테러는 모두 보안군과 법 집행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중 1월 30일 페샤와르(Peshawar) 공격은 경찰관 81명이 사망하여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또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은 2023년 펀자브주와 신드주에서도 공격을 자행했다. 대표적으로 2월 카라치 경찰청(Karachi Police Office)에 대한 총기 및 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4명과 무장 대원 3명이 사망했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의 민족주의·분리주의 단체들을 지원했으며, 인도 아대륙 알카에다(AI Qaeda in the Indian Subcontinent, AQIS) 및 파키스탄 지하드 운동(TJP)과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시민 소요

2.118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정치 및 종교 단체들이 빈번하게 시위를 벌이며, 이는 흔히 대규모 군중 동원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폭력 사태로 비화하기도 한다. 국제적 사건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나 기타 종교적 사안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종교, 시위 참조).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ehreek-e-Labbaik Pakistan, TLP)

2.119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즉 '파키스탄여, 내가 여기 있다' 운동('Pakistan Here-I-Am Movement')은 2015년 카딤 후세인 리즈비(Khadim Hussain Rizvi)가 창설했다. 이 조직은 바렐비(Barelvi, 하나피 및 샤피이 법학파를 따르는 수니파 이슬람 내 부흥 운동) 정당이자 종파적 종교 운동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신성모독자들'(특히 시아파와 아흐마디파(Ahmadi))을 처벌하고 파키스탄 전역에 샤리아(Sharia)법을 시행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 학계와 언론은 군 및 보안기관이 2017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나와즈(PML-N) 정부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의 종교적·정치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120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대규모 거리 시위와 연좌 농성을 조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는 폭력 사태로 변질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던 아시아 비비(Asia Bibi)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며 전국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2018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220만 표 이상을 획득하며, 파키스탄 최대 종교 정당이자 전체 제5당으로 자리매김했다.

2.121 2021년 4월,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가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된 만평을 재게재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주파키스탄 프랑스 대사 추방을 요구하는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주도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을 불법 단체로 지정하고 지도자 사드 후세인 리즈비(Saad Hussain Rizvi)를 체포했다. 해당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관 사망 이후 파키스탄 정부가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리즈비를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122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2024년 총선에서 득표율 4%에 그쳐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2024년 2월 한 현지 분석가는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이 주류 정당으로의 변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펀자브(Punjab) 및 신드주 내 바렐비(Barelvi)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 기반이 잠식당했다고 분석했다. 2024년 7월, 피르 자히를 하산 샤(Pir Zaheerul Hassan Shah) 부대표(Deputy Emir)는 라호르(Lahore)에서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파키스탄 사법부에 대한 폭력 행사를 공개적으로 선동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사건 직후 카지 파에즈 이사(Qazi Faez Isa) 대법원장에 대한 '대중 폭력 선동' 혐의로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고위 간부 사키브 이브라힘(Saqib Ibrahim)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2.123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여러 차례 신성모독 혐의자들에 대한 군중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2023년 7월 편자브주 사르고다(Sargodha)에서 이맘(Imam)들과 공모하여 한 아동이 쿠란을 모독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대중의 분노를 조장했다. 또한 2023년 8월 자란왈라(Jaranwala)에서 쿠란 모독 혐의를 받은 기독교도 2명에 대한 집단 폭행을 주도했다. 2024년 5월에도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한 기독교도 남성이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지지자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

2.124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경찰관 살해를 포함한 다수의 초법적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일례로 현지 언론은 2021년 10월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활동가들이 기관단총, AK-47, 권총 등을 동원해 경찰을 표적으로 삼아 4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이 유력 반정부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편자브주와 신드주 내에서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폭력 전술을 사용해 왔다고 분석했다.

폭력 및 조직범죄

2.125 무장 강도, 폭행, 차량 강탈, 납치 등 폭력 범죄가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파키스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4.2건으로 남아시아 지역 평균 수준이었으며, 세계 평균인 6.1건보다는 낮았다. 2023년 세계 조직 범죄 지수(Global Organized Crime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범죄 조직망은 주로 밀입국 알선(특히 발루치스탄주)과 갈취에 관여하고 있다. 2023년 파키스탄의 세계 조직 범죄 지수 점수는 10점 만점에 6.03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세계에서 47번째로 범죄 성향이 높은 국가로 기록되었다.

2.126 세계 조직 범죄 지수는 2023년 마피아식 집단과 아프간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들이 주도하는 갈취 및 보호비 공갈이 파키스탄 전역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이들 집단은 부유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빈곤 지역의 취약 계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식수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공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다수의 국제 협약에 서명했으나 인신매매, 이주민 밀수, 총기 밀매에 관한 세 개의 유엔 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2.127 현지 소식통은 폭력 및 조직 범죄율이 수년 전보다는 낮아졌으나, 실업 증가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라호르(Lahore)와 카라치(Karachi)의 범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슬라마바드는 대규모 치안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다른 주요 도시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 한편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스탄주에서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주 내 언론 통제로 인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128 파키스탄 정부의 폭력 및 조직범죄 대응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국가 보호를 참조한다.

인신매매

2.129 인신매매는 파키스탄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다.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결부된 강력한 배출 요인(push factors)으로 인해 일부 파키스탄인들은 타지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된다. 파키스탄에서 밀입국 알선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경제가 해외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파키스탄인들은 착취를 당하거나 제3국으로 인신매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130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의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최대 인신매매 문제는 채무 담보 노동(bonded labor)이었다. 이는 인신매매법들이 노동자가 고용 조건의 일부로 떠안은 초기 채무를 악용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채무 종속 상태로 몰아매는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는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되기도 한다.

인권 및 수형자 원호 협회(Society for Human Rights and Prisoners' Aid)는 여성과 아동이 부모, 보호자, 남편에 의해 먼저 매매된 후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로 인신매매된 파키스탄인의 대다수는 결국 걸프 협력 회의(GCC) 국가들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1 파키스탄의 여러 법률은 성 착취 및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인신매매 방지법(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ct, 2018)」은 성인 남성 피해자가 연루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00만 루피(5,482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병과 가능), 성인 여성이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0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해당 법령에 의거해 총 1,588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성매매 목적이 282건, 강제 노동이 1,035건, 기타 불특정 형태가 271건이었다. 또한 2023년 당국은 동법에 따라 인신매매범 351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들 중에는 성매매 혐의자 4명, 강제 노동 혐의자 337명, 불특정 형태 매매 혐의자 10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2.132 2024년 미국 국무부(DOS)는 파키스탄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 확대, 전국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 개설 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했다.

국경 지역 불안정

2.133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접경 지역에서는 박격포, 포격, 미사일, 드론 공격 및 총격전 등의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역사적으로 인도와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으나 이란이 발루치스탄 해방군(BLA), 발루치스탄 해방전선(BLF), 신두데시 혁명군(SRA) 등 발루치 및 신드 민족주의·분리주의 반군 단체를 지원한다고 비난해 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조직원들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2.134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의 토르크함(Torkham)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파키스탄군과 아프간 탈레반 간의 일련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충돌이 아프간 탈레반 측의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무장단체 은닉 및 '불법 구조물' 건설을 통한 파키스탄 영토 침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말 파키스탄의 아프간인 추방 정책 노선은 주로 아프간 탈레반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2년 현지 및 국제 언론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따라 발생한 7건의 무력 충돌을 보도했으며, 해당 사건들로 인해 파키스탄 보안군 장병을 중심으로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135 2024년 3월 18일,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코스트(Khost)와 팩티카(Paktika)에 위치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기지에 대해 공습을 실시하여 8명을 살해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군은 2024년 3월 20일 박격포를 포함한 중화기를 사용해 국경 너머 쿠람(Kurram)과 북와지리스탄(North Waziristan)의 파키스탄군을 공격함으로써 대응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 이러한 국가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파키스탄의 국경은 테러리즘에 맞선 한계선(red line)이다. ... 이웃 국가의 영토가 테러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후 2024년 8월과 9월에 걸쳐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의 쿠람-코스트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사이에 중화기가 동원된 전투가 발발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파키스탄군은 또한 2024년 12월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을 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바르말(Barmal) 지역을 공습했다.

2.136 아프간 탈레반은 부족 지역 중 파슈툰족과 발루치족 거주지를 가르는 1893년의 '듀란드 라인(Durand Line)'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의 외무장관 대행인 셰르 무함마드 압바스 스타니크자이(Sher Mohammad Abbas Stanikzai)는 2024년 2월 초, "우리는 듀란드 라인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절반이 분리되어 듀란드 라인 반대편에 있다. 듀란드 라인은 영국인들이 아프간인들의 심장에 그은 선이다"라고 발언했다.

2.137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상대국 영토 내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단체를 지원한다고 비난해 왔다. 이러한 공격은 과거 적대 행위를 고조시켜 왔으며,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상존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파키스탄-인도 국경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2021년 휴전 이후 국경 간 폭력 사태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파키스탄과 인도는 엄격한 휴전 조건을 준수했으며, 주요 사건이나 충돌 및 총격전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양국은 핵 시설 목록 및 수감자 명단 교환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

2.138 이란은 2024년 1월 16일 파키스탄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여 기지 두 곳을 공격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기지를 발루치스탄주 판즈구르(Panjgur) 지역에서 이란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 발루치족 민족주의·분리주의 반군 단체인 자이슈 알아들(Jaish al-Adl)이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2024년 1월 18일, 이란 시스탄오발루체스탄주(Sistan and Baluchestan) 사라반(Saravan) 인근의 여러 기지를 발루치스탄 해방군(BLA)과 발루치스탄 해방전선(BLF)이 거점으로 삼고 있다며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러한 상호 공격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은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공격은 각국의 특정한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추가적인 무력 충돌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3. 난민 협약 주장

인종/국적

3.1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 언어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다.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민족 구성은 펀자브족 44.7%, 파슈툰족 15.4%, 신드족(Sindhi) 14.1%, 사라йки족(Saraiki) 8.4%, 무하지르족(Muhajir) 7.6%, 발루치족 3.6%, 기타 6.3%로 조사되었다.

3.2 펀자브족은 대체로 권력 요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 관료, 군사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발루치족, 파슈툰족, 신드족(Sindhi) 등 소수 민족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 증대와 경제 개발 이익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문화 및 언어적 유산의 보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파키스탄 내 소수 민족은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는 파슈툰족을 대표하는 아와미 국민당(ANP), 발루치족의 발루치스탄 국민당(Balochistan National Party, BNP), 하자라족의 하자라 민주당(Hazara Democratic Party), 신드족(Sindhi)의 코미 아와미 테흐리크(Qomi Awami Tehreek, QAT) 등이 있다.

3.3 헌법 제28조는 "독자적인 언어, 문자 또는 문화를 가진 시민 집단은 이를 보존하고 진흥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제(3)항제(b)호는 인종, 종교, 카스트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시민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 및 공공 부문 고용에서의 차별에 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각각 제26조 및 제27조). 제25조제(1)항은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는 성별, 카스트, 신조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헌법상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키스탄인이 여전히 인종, 종교, 카스트, 출생지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종교 참조).

아프간인

3.4 아프간인은 하자라족, 파슈툰족, 타지크족(Tajik), 우즈베크족(Uzbek)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국민 또는 시민을 일컫는다. 연이은 전쟁, 만성적 사회 불안,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아프간인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현지 소식통은 2023년 10월 기준, 장기 체류 자격 없이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약 420만 명의 비시민권자 중 대다수가 아프간인이라고 전했다. 2023년 유엔난민기구(UNHCR)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아프간인은 310만 명이며, 그중 82만 2,400명이 미등록 상태다. 수치는 통계마다 상이하나, 아프간인 중 130만 명은 등록증명카드(Proof of Registration Card, PoR 카드)를, 83만 명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카드(Afghan Citizen Card, ACC)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45만 명은 타즈키라(tazkira, 아프가니스탄 공식 신분증)를 지닌 채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었다.

3.5 일부 아프간인은 1980년대부터 파키스탄에 거주해 왔으나, 상당수는 최근에 유입된 인구다. 여기에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국경을 넘은 약 60만 명이 포함된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아프간인 자녀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부친이 파키스탄인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요건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파키스탄 여성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할 수 없다.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51)」 제10조에 따르면, 아프간인을 포함한 외국인 여성은 파키스탄 남성 시민과 혼인할 경우 파키스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파키스탄 여성은 혼인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후원하거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없다(여성, 아동, 신분 증명 참조).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출생지주의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51)」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성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

3.6 2007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프간 난민에게 등록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명카드(Proof of Registration Card, PoR Card) 발급 권리를 명시한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등록증명카드(PoR Card) 소지자는 파키스탄 내 임시 체류 권한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공공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아프간 난민은 부동산을 임차(구매는 불가)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 대학 입학이 허용되었으나, 정원이 제한적이고 고등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프간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했으나, 다수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등록증명카드(PoR Card) 소지자는 복지 수당 수급 자격은 없었으나 유엔난민기구(UNHCR)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았다. 아동은 가족의 등록증명카드(PoR Card)에 등재되어 이를 승계할 수 있었다. 등록증명카드(PoR Card)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유효했다. 2023년 말 별다른 설명 없이 등록이 지연된 후, 당국은 2023년 6월 30일 만료된 약 130만 장의 등록증명카드(PoR Card)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2024년 7월 10일, 파키스탄 내각은 등록증명카드(PoR Card)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3.7 2017년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내 미등록 아프간인들을 위한 등록 수단으로 아프간 시민 카드(Afghan Citizen Card, ACC)를 도입했다. 아프간 시민 카드(ACC)는 다른 형태의 신분증이 없는 아프간인을 위한 임시 신분 증명서로서, 등록증명카드(PoR Card)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등록 기간 동안 아프간인임을 자처하는 누구나 아프간 시민 카드(ACC)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혼 남성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간 시민 카드(ACC) 소지자는 파키스탄에 임시 체류할 권리와 이동의 자유를 가졌으나, 공공 의료 및 공공 교육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다. 등록증명카드(PoR Card)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공식 부문 취업은 불가능했으나,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등록증명카드(PoR Card)와 달리 아동은 가족의 아프간 시민 카드(ACC)에 추가되거나 이를 상속받을 수 없었다. 2024년 3월, 아프타브 두라니(Aftab Durrani) 연방 내무부 차관은 아프간 시민 카드(ACC) 소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파키스탄을 떠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자발적 귀환과 추방을 목적으로 아프간 시민 카드(ACC) 소지자 명단을 경찰 및 기타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6월에 만료된 아프간 시민 카드(ACC)의 유효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3.8 아프간인 중 상당수는 양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통행지역권(easement rights)'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발급한 타즈키라(tazkira)를 사용해 파키스탄에 입국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파키스탄 정부는 새로운 '단일 문서 체제(one document regime)' 정책을 도입하여, 아프간인의 합법적 입국 조건으로 유효 여권 소지 및 파키스탄 비자 취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지 소식통은 유효한 비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공식적으로 체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실제 당국이 비자를 연장해준 사례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2024년 초 출입국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아프간 트럭 운전자들과 파키스탄 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환자들도 2024년 1월 이후에는 재입국을 거부당했다.

3.9 파키스탄은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 1951)」의 서명국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망명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나,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정부가 2023년 말까지는 대체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존중해 왔다고 보고했다. 2023년 9월 26일, 파키스탄 정부는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 IFRP)을 승인하며 2023년 11월 1일까지 체류 중인 모든 불법·미등록 및 체류 기한 초과 외국인을 추방 또는 강제 송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은 불법 이주와 테러 행위 및 밀수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를 퇴치하기 위함이었다. 2023년 11월에는 안와르울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당시 파키스탄 과도정부 총리가 '범죄 및 테러 활동 가담자 중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여러 국제 안보 분석가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간 탈레반 정부에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군부가 점차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내 파슈툰족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10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의 '1단계' 조치에 따라 파키스탄 비자(타즈키라 사용자 포함), 등록증명카드(PoR Card), 아프간시민카드(ACC)가 없거나 비자 만료 후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신원 확인을 거쳐 지역 수용 센터(이슬라마바드, 라왈핀디(Rawalpindi), 아톡(Attock), 퀘타(Quetta))로 이송된 후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국경으로 수송되어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현지 소식통은 2023년 11월 1일 이전에도 다수의 미등록 아프간인이 신드주의 유희 수용 능력이 있는 교도소에 선제적으로 구금된 후 추방되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2023년 10월 26일, 사르프라즈 부그티(Sarfraz Bugti) 당시 과도정부 내무부 장관이 파키스탄에서 추방되는 이들은 현지 통화로 5만 루피(273호주달러)까지만 휴대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적절한 은행 창구'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2024년 국경을 넘는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금전, 물품, 가축 등을 갈취당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31일, 파키스탄 정부는 '무이의증명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소지하지 않은 이슬라마바드 거주 아프간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모두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5일부터 파키스탄 비자가 없는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 거주 모든 아프간인을 추방하는 조치로 확대되었다.

3.11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5일 사이 아프간인 73만 8,583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고 보고했다. 귀환자에는 등록증명카드(PoR Card) 및 아프간시민카드(ACC) 소지자, 미등록 아프간인이 모두 포함되었다. 아프가니스탄 귀환자 중 3만 5,248명(6%)은 추방되었고, 4만 7,435명은 조력 귀환자(facilitated returnees), 65만 5,900명은 '기타' 귀환자로 분류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는 자발적 귀환자의 약 90%가 미등록자였으며, 80% 이상이 파키스탄 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주된 귀환 사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아프타브 두라니(Aftab Durrani) 연방 내무 차관은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의 '2단계' 조치로 2024년 4월 15일부터 아프간시민카드(ACC) 소지자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미실행). 현지 언론은 2단계 완료 후 '3단계'에서 등록증명카드(PoR Card) 소지자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파키스탄 정부의 대대적인 추방 조치로 인해 2025년 4월 1일부터 14일 사이 약 6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고 보고했다.

3.12 불법·미등록 및 체류 기한 초과 외국인의 출국 기한이 2023년 11월 1일로 공표된 후, 현지 소식통은 당국이 임대인들에게 미등록 아프간 세입자를 퇴거시키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경찰이 미등록자 검거를 위해 가구별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언론은 부그티 당시 과도정부 내무부 장관이 2023년 10월 26일 불법 이민자를 돕거나 은닉하는 파키스탄인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정부가 대다수 미등록 아프간인의 소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13 파키스탄 보안군은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에 동조하거나 초국가적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법 집행 당국은 2023년 11월 1일 출국 기한을 앞두고 카이베르파크툰크와(KP)주에서 신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아프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수색 및 단속' 작전을 확대했다. 이러한 작전은 주로 파키스탄 내 아프간인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지 소식통은 아프간인들이 등록증명카드(PoR Card)나 아프간 시민 카드(ACC)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뇌물을 지불해야만 구금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2023년 말에는 아프간 인권 활동가들과 비공식 아프간 학교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구금의 표적이 되었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은 미등록 상태일 경우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였으며, 현지 소식통은 아프간 여성이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조혼 및 강제 혼인을 겪는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여성, 아동 참조).

3.1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내 미등록 아프간인과 아프간 시민 카드(ACC) 소지자들이 국적을 이유로 신체적 괴롭힘과 구금 형태의 공적 차별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하자라족 아프간인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미등록 아프간인은 「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 위반을 근거로 2023년 11월 1일부터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 1단계에 따른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되어 왔다. 아프간 시민 카드(ACC) 소지자 또한 불법 이주자로 간주되어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유효한 비자나 등록증명카드(PoR Card)를 소지한 채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이 공식 차별 정책이 아닌 광범위한 개인적 편견에 기인한 신체적 괴롭힘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파키스탄 내 아프간인이 주거 및 비공식 고용 시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높다고 평가한다. 다만,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툽와(KP)주에 거주하는 파슈툰족 아프간인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낮으나, 타 지역(타 주)에서는 차별을 겪을 수 있다.

3.15 최신 호주 외교통상부(DFAT) 아프가니스탄 출신국 정보 보고서도 참조한다.

발루치족

3.16 발루치족은 발루치어(Balochi)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민족·언어 부족 집단으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와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이 원주지다. 대다수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며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으나, 현재는 다수가 정착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23년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의 '모국어별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발루치어 사용자는 전국 인구의 3.38%(811만 7,795명)이며 발루치스탄주 내에서는 39.91%를 차지한다. 발루치족은 발루치스탄주 내 21개 지구(districts)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파키스탄 내 타 지역으로도 이주하여 라호르(Lahore), 카라치(Karachi), 이슬라마바드 등 대도시에도 거주하고 있다.

3.17 발루치스탄주 현지 정보는 제한적이며, 당국이 해당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안보 상황 참조).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스탄주에서 정부가 언론 봉쇄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관련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루치족이 보안군의 협박과 강제 실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자기 검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18 발루치스탄주에서는 발루치족 집단이 주도하는 장기간의 무장 반란과 민족주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무장단체 참조). 국제 학계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데라 부그티(Dera Bugti) 지역의 부그티 부족을 반국가 반란을 부추기는 주요 후원 세력으로 판단했다. 반면, 다른 부족 지도자들 역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무장 추종 세력을 이용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족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해당 주의 경제 성장 부진, 정치적 예측, 발루치 언어와 문화의 주변화, 과다르(Gwadar) 대형 항만 건설, 천연가스 탐사 확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군의 강경 대응 등을 꼽았다.

3.19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족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안군으로부터 '반국가 세력' 및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발루치 인권 활동가와 민족주의 단체 구성원이 정치적 소속과 신념을 이유로 당국에 의해 구금 및 체포되었다. 일부 발루치족은 협박 전화, 사적 사진 게시, 신상 공개, 고용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개입, 활동가 전화 도청 등의 형태로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예로, 현지 언론은 보안기관이 2024년 3월 저명한 발루치 권리 옹호자인 마랑 발루치를 체포하고 변호사의 접견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DOS)는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에서 보안기관이 발루치스탄 국민당(BNP)과 발루치학생회(Baloch Students Organization)와 같은 지역 정치 조직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 활동가들이 인접한 신드주에서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3.20 2023년 5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권리 단체 '학 두 과다르(Haq Do Gwadar)'의 지도자 마울라나 히다야투르 레흐만 발루치가 과다르 지역의 식수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금되었다. 그는 이전에도 발루치스탄주 내 불법 조업, 트롤 어업, 불필요한 검문소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시위를 이끌었다. 그는 보안군에 의해 퀘타(Quetta)에서 4개월 반 동안 투옥되었으며, 불법 구금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후 석방되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발루치 인권 활동가 라시드 후세인은 2019년 6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되어 파키스탄으로 송환되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라시드 후세인의 소재와 그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은 불명확하다. 보안군은 카라치(Karachi) 공항에서 라시드 후세인을 호송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 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3.21 발루치인권위원회(Baloch Human Rights Council)에 따르면, 발루치스탄 보안군은 인권 활동가, 정치인, 언론인, 교사 등을 포함한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 전 실종시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2023년 9월 29일 BBC 우르두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의 전 과도정부 총리 안와르울하크 카카르는 발루치스탄주에서 실종된 사람이 약 5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 강제실종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Enforced Disappearances, COIED)는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발루치스탄주에서 발생한 강제 실종 사례를 총 2,752건으로 확인했다.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스탄주 내 강제 실종 사례가 약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현지 소식통은 거의 모든 발루치족이 가족이나 친척 중 강제 실종된 사람을 한 명 이상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DOS)는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사면 제안에도 불구하고 발루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당하거나 영장 없는 구금과 일반 발루치 시민들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루치스탄주 실종자 중에는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국이 이들을 구금한 목적은 주로 부모에게 옹호 활동 중단을 종용하거나 보안군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케치 지역에서 두 소년이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후 비공개 장소로 이송되었다. 2023년 12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금된 소년 중 한 명의 아버지 역시 강제 실종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22 현지 및 국제 언론은 최근 수년간 다수의 발루치족, 특히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발루치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실종되었다고 보도해 왔다. 일례로 2024년 3월 현지 언론은 대테러국(Counter Terrorism Department) 요원들이 압둘 라지크(Abdul Razziq)를 체포한 뒤 강제로 실종시켰다고 전했다. 압둘 라지크의 형제 역시 이전에 강제 구금된 바 있으며, 부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수개월 후 석방되었을 때 구금 기간 중 겪은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적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 발루치스탄 포스트(Balochistan Post)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강제 실종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3년 12월 한 달간 66건의 강제 실종이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은 발루치스탄주에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23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보안군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강제 실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보안군의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 당사자 역시 임의로 구금되거나 실종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사법 체계를 통한 모든 구제 수단을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자, 일부 실종자 가족은 당국이 가족을 석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카라치(Karachi) 자택에서 강제 실종되었던 두 학생은 카라치 프레스 클럽(Karachi Press Club) 밖에서 며칠간 평화 시위가 이어진 끝에 석방되었다.

3.24 일부 발루치 인권 옹호자와 민족주의자들은 보안기관이 자신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보안군에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여러 인물을 인터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구금자들은 발루치 무장단체 연루 여부에 관한 심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고문 방식에는 구타, 수면 박탈, 장시간 기립 강제, 심문 중 신체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3.25 국제 언론에 따르면, 발루치 권리 활동가들은 2023년 발루치스탄주에서 504명이 초법적으로 살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발루치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f Balochistan)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내에서 발생한 366건의 초법적 살해 사례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경찰과 보안군이 이른바 '경찰 교전' 상황을 가장하여 테러 용의자를 살해했다는 국제 및 현지 언론 보도가 다수 잇따랐다.

일례로 2023년 11월 현지 및 국제 언론은 대테러국(Counter-Terrorism Department)에 의해 발라치 몰라 박쉬(Balaach Mola Baksh) 외 3명이 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을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이미 구금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건이 '조작된 교전'에 의한 살해라고 주장했다.

3.26 2023년 말, 수백 명의 발루치 여성은 초법적 살해와 강제 실종에 항의하기 위해 발루치스탄주 투르바트(Turbat)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이어지는 '발루치 대장정(Baloch Long March)'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3년 12월 17일 편자브주에서 대장정 참가자 최소 20명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경찰이 평화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휘두르는 영상 증거가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 20일 대장정 행렬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자,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곤봉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2023년 12월 2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폭동, 불법 집회, 강도(dacoity),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3.27 현지 소식통은 발루치스탄주에 거주하는 발루치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이들이 부족 사회에 거주하며 소속 부족의 보호를 받고, 일반적으로 타 집단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위해 발루치스탄주를 떠난 발루치족 학생들은 다른 주, 특히 편자브주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8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발루치스탄주에 거주하는 발루치족이 인종(민족)을 이유로 물리적·기술적 감시 및 괴롭힘,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초법적 살해, 안보 범죄 기소 등의 공적 차별에 직면할 위험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시위를 주도하거나 권리 확대, 자치, 자결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경우, 이러한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발루치족이 발루치스탄주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지 않으나, 타 주에서 고등교육에 접근할 때는 낮은 수준의 차별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다.

방가쉬족

3.29 방가쉬족은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하트(Kohat), 한구(Hangu), 쿠람(Kurram) 지구에 거주하는 파슈툰 부족이다. 방가쉬족은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으로 나뉘며, 시아파 방가쉬족은 주로 한구와 어퍼 쿠람(Upper Kurram)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파키스탄 내 방가쉬족 인구는 약 38만 3,000명이다. 이들은 외모상 다른 파슈툰족과 구별되지 않으나, 부족명, 억양, 방가쉬족 지역 내 거주 사실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

3.30 부족 간 폭력의 경우, 역사적으로 카차이(Kachai)와 마라이(Marai)의 시아파 방가쉬족과 라바이 켈(Rabai Khel) 및 셰칸(Shekhan)의 수니파 방가쉬족 간에 불화가 존재해 왔다. 또한 방가쉬 부족들은 투리족과도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방가쉬족과 투리족 사이의 적대감은 2019년 해당 지역의 안보 상황이 개선된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31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쿠람(Kurram) 지구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적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최소 3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24년 1월 7일에는 쿠람(Kurram) 지구 파라치나르(Parachinar)에서 페샤와르(Peshawar)로 향하던 버스가 무장 괴한들로부터 자동화기 공격을 받아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언론은 방가쉬족이 해당 사건 이후 긴급 지르가(jirga, 지도자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은 이슬라마바드 국립 프레스 클럽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해 탈파라치나르(Thali-Parachinar) 도로의 보안 병력을 증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32 방가쉬족은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실제 이주 사례도 존재하지만,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주 능력은 개인의 재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부족 네트워크의 지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방가쉬족은 비파슈툰계 민족 입장에서는 다른 파슈툰족과 외견상 즉시 구별되지 않는다.

3.3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거주하는 방가쉬족이 다른 파슈툰족 및 시아파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공적·사회적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방가쉬족이 다른 파슈툰 부족이나 무장단체와 충돌하여 폭력에 노출될 위험 역시 낮다고 평가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거주 방가쉬족은 주로 자체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며 부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타 지역에 거주하는 방가쉬족 또한 다른 파슈툰족 및 시아파와 유사한 낮은 수준의 공식적·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한다.

하자라족

3.34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라자트(Hazarajat) 지역 출신의 독특한 민족·언어 집단으로 하자라기어(다리어와 관련됨)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하자라족은 시아파 이슬람, 주로 12 이맘파(Twelfer)를 따르지만, 일부는 이스마일파에 속하며 소수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자라족은 독특한 '동아시아적 외모'를 가지고 있어 다른 민족 집단과 쉽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파키스탄 내 하자라족 인구는 약 65만~90만 명으로 추산된다.

3.35 20세기 후반 아프간 전쟁(1978-89) 기간과 1996년 및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대규모의 하자라족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50만 명 이상의 하자라족이 퀘타(Quetta)의 집단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카라치(Karachi),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등지에도 소규모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퀘타(Quetta)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하자라족은 인종 프로파일링, 차별, 공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피하고 있다.

3.36 일부 하자라족은 파키스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체류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다(아프간인 참조). 파키스탄에서 출생한 하자라족은 부친이 파키스탄인일 경우에 한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신분 증명 참조). 현행법상 파키스탄 여성은 대부분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할 수 없는 실정이다(여성, 아동 참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각 하자라족의 신분 증명 소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하자라족은 연방 및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루치스탄주 의회 선거에서 하자라족 당선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자라족 권리 활동가들과 정당들은 해당 결과가 '선거 사후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치 체제 참조).

3.37 라슈카르-에-장비(LeJ)와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를 포함한 여러 무장단체는 하자라족을 '이교도'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표적 살해를 자행해 왔다. 현지 및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폭탄 테러와 자살 공격 등으로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하자라족의 수는 2,000명을 상회한다. 하자라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암살의 표적이 되어 왔다. 2021년 1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무장단체는 발루치스탄주 카치 지역(Kachhi District)의 마크(Mach) 마을에서 하자라족 광부 11명을 살해한 바 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2021년 마크 사건 이후 발루치스탄주에서, 혹은 2014년 이후 발루치스탄주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하자라족 대상 공격 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바는 없다.

3.38 퀘타의 하자라 공동체는 하자라 타운(Hazara town)과 마리아바드(Marriabad)라는 두 거주 구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 구역 출입 시 차량 검문소 운용과 검색을 포함한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부군은 하자라 종교 행렬(시아파 참조)과 하자르간지(Hazarganji) 시장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퀘타를 떠나는 하자라족은 치안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월 마크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공격 이후, 발루치스탄주 정부는 합동조사팀(Joint Investigation Team)에 하자라족 보호 과정에서 불거진 보안군의 태만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조사가 진행되고 보안군의 무능에 항의하는 시위가 하자라족 주도로 발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하자라 타운과 마리아바드 내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하자라족은 거주 구역을 벗어날 경우 여전히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연방 및 주 정부가 2021년 마크 공격 이후 퀘타 내 하자라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안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치안 병력이 충분치 않은 퀘타 외 지역 거주 하자라족은 여전히 폭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편 현지 및 국제 언론은 하자라족을 겨냥한 종파 간 공격이 과거 몇 년 전만큼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3.39 퀘타의 하자라 타운(Hazara Town)과 마리아바드(Marriabad) 집단 거주지는 하자라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안보 우려로 인해 하자라족은 퀘타 내 두 곳의 밀집 거주지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강화된 보안 조치가 자신들의 거주지를 게토(ghetto)화하여 경제적 착취를 야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해당 거주지 내 소비재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으며, 하자라족은 적절한 고용이나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보고서(Pakistan 2023 Human Rights Report)는 또한 2021년 8월 아프간 탈레반의 카불(Kabul)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자라족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당국에 의한 하자라족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아프간인 참조](#)).

3.40 현지 소식통은 퀘타 거주지 내 보건, 교육 및 기타 서비스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주 보건 저널(Journal of Migration and Health)에 게재된 2023년 하자라족 보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접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라치(Karachi)로 이동했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거주지 외곽의 퀘타 병원을 이용해야 했다. 식품을 포함한 필수품은 대부분 거주지 외부에서 반입되었으며, 그 가격은 퀘타 내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거주지 내에 학교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전무했다. 특히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인해 하자라족 여성과 여아의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이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외부에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주 보건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 우려에 따른 이동 제약은 하자라족이 권익을 주장하고 교육 및 고용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3.41 퀘타의 많은 하자라족은 거주지 내 공동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파키스탄 전역의 타 도시로 이주한다. 과거 하자라족은 군이나 공공 부문에 활발히 진출했으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인식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2024년 기준 해당 직종에 지원하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은 2021년 1월 마크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공격 이후, 주요 수입원이었던 발루치스탄주 광산 노동에 대해 하자라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우려하여 거주지 외부 직장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고용 기회의 추가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현지 소식통은 장기간 지속된 높은 실업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퀘타 내 하자라족 청년층 사이에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학계 또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하자라족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3.42 관련 서류를 구비한 파키스탄 내 하자라족은 국민신분증(National Identity Card, NIC)과 여권을 포함한 공식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은 2024년 보도를 통해,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관리들이 하자라족에 대한 신분 서류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전했다.

3.4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신분 증명 서류가 없는 파키스탄 내 하자라족이 다른 아프간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괴롭힘 형태의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평가한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하자라족을 포함하여 신분 증명이 없는 모든 아프간인은 「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 저축 대상이며, 2023년 11월 1일 이후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FRP)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되었다([아프간인 참조](#)).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시민권을 보유한 하자라족의 경우, 검문소에서의 통행 방해나 신분증 발급, 취업, 서비스 이용 시의 어려움 등 민족적 배경에 근거한 공적 차별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차별은 공식적인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에 퍼진 개인적 편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퀘타 거주지에 머무는 하자라족이 대체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나, 고등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과 같은 민족 중심의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크다고 평가한다.

3.4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하자라족이 민족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무장단체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시아파 참조](#)). 하자라족은 외모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무장단체에 의해 시아파 교도로 식별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하자라족의 파키스탄 내 국내 이주 가능 여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평가한다. 종파 간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하자라족에게 퀘타 거주지 외부로 이주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국내 이주 참조](#)). 특히 하자라족 여성과 여아의 경우에는 국내 이주가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여성 참조](#)).

파슈툰족

3.45 파슈툰족은 파슈토어를 사용하는 부족 중심의 민족-언어 집단으로, 주로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거주한다. 파슈툰족은 총 60여 개 부족과 350~400개의 하위 부족으로 구성된 민족적으로 다양한 집단이다. 대다수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나, 전부는 아니다(투리족, 방가쉬족 참조). 2023년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의 '모국어별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파슈토어 사용자는 전국 인구의 18.15%에 해당하는 4,363만 3,946명으로 집계되었다. 파슈툰족은 파키스탄에서 편자브족 다음으로 큰 민족 집단이다.

3.46 파슈툰 문화는 명예, 기사도, 혈연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이는 파슈툰왈리(Pashtunwali)라는 관습 규범에 집약되어 있다. 이슬람 이전부터 내려온 이 규칙들은 파슈툰 부족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며, 연대, 상호 부조, 수치심, 복수가 사회 질서와 개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일례로 파슈툰왈리에 따라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며, 동료 부족원이 살해당하면 흔히 복수가 요구된다. 파슈툰족은 종종 파슈툰왈리의 부족적 가치를 종교법이나 국법보다 중시한다. 이러한 엄격하고 타협 불가능한 핵심 가치는 개인에서 가족, 씨족, 부족, 나아가 비파슈툰 민족 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적용된다.

3.47 파슈툰족은 파키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널리 진출해 있다. 이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양국의 운송업 고용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보안군에서도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파슈툰족이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일부는 아와미국민당(ANP)이나 현재 활동이 금지된 파슈툰보호운동(Pashtun Tahafuz Movement, PTM) 등 파슈툰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 및 운동을 지지한다. 전통적으로는 부족 및 하위 부족 단위로 거주했으나, 다수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추세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파슈툰 공동체는 카라치(Karachi)에 형성되어 있다.

3.48 2018년까지 구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에 거주하는 파슈툰족은 별도의 초헌법적 체제 하에 통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파키스탄 시민들이 누리는 일부 기본권을 박탈당했다(정치 체제 참조). 현재 구 연방직할 부족지역(FATA)을 포함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주민들은 정규 사법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대안 분쟁 해결법(KP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Act, 2020)」에 따라 여전히 전통 지르가(jirga)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3.49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보안군은 파슈툰족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에 동조하거나 초국가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슈툰족이 군사 검문소에서 추가 조사나 수색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슈툰족은 파키스탄의 다른 소수민족보다 테러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미국 국무부(DOS) 2023년 파키스탄 인권보고서는 구 연방직할 부족지역(FATA) 출신 파슈툰족이 소속 부족, 복장, 외모, 또는 조상의 출신 지구를 근거로 무장세력이나 테러리스트로 식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파슈툰 인권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위협, 불법 구금, 미결 구금 여행 금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3.50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에서 보안군에 의해 파슈툰 청년 6,000명 이상이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희생자가 되었다. 소식통은 파슈툰 청년 실종 사건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같은 테러 집단과의 연루 혐의와 관계된 경우가 많으나, 와지리스탄 지역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현지 파슈툰 공동체의 요구가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의 민정 지원 활동 조례(Actions (In Aid of Civil Power) Ordinance, 2019)는 민간인을 수용소에 혐의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인 단 한 명의 증언만으로 피구금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했다. 또한 해당 조례는 군이 피구금자의 명단을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함에 따라, 구금자 가족이 민사 법원을 통해 구금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51 미국 국무부(DOS) 2023년 파키스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파슈툰 정치 지도자들은 파슈툰족이 정치적 소속, 신념, 정부 비판을 이유로 보안군의 표적이 되어 초법적으로 살해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및 지역 인권 단체들은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에서 발생한 파슈툰족 초법적 살해 사례를 수없이 보고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17일 와지리스탄에서 보안군에게 납치된 후 살해된 리작 칸(Rizak Khan), 2022년 3월 22일 와지리스탄에서 피살된 정치 활동가이자 인권 옹호자 무사와르 다와르(Musawar Dawar), 그리고 2021년 4월 14일 와지리스탄에서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자히드 우딘(Zahid Uddin) 등이 대표적이다.

3.52 일부 파슈툰족 유력 인사들은 과거에 취한 반무장단체 입장 때문에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반국가 무장단체의 표적이 되었다(평화위원회 참조). 이들 유력 인사와 그 가족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외부로 이주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무장단체와의 물리적인 근접성을 줄일 수 있었다(국내 이주 참조). 현지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 아닌 한, 반국가 무장단체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의 전통적인 파슈툰 지역 밖에 거주하는 파슈툰족을 추적하거나 표적으로 삼아 폭력을 행사할 조직적 역량을 갖추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3.53 파슈툰족은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활발히 이주하고 있다. 다만 다른 민족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주 가능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및 부족 단위의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좌우된다(국내 이주 참조). 현지 소식통은 다수의 파슈툰족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카라치(Karachi), 라호르, 페샤와르(Peshawar), 퀘타 등 파키스탄 주요 대도시로 이주했으며, 해당 지역에 잘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3.54 현지 소식통은 파슈툰족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적 차별을 겪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일부 파슈툰족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당국이 해당 인원들의 국민신분증(NIC)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나 자산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공식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실무자 개인 차원의 편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파슈툰족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나 발루치스탄주 내에서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슈툰족이 소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비방이나 민족적 고정관념과 같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

3.55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 내 분쟁 영향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파슈툰족이 국가 보안군에 의한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이들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단체로부터 폭력이나 초법적 살해를 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파키스탄 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파슈툰족은 해당 지역의 다른 소수 민족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사회적 차별을 받을 위험이 낮다. 다만 아와미국민당(ANP)이나 파슈툰보호운동(PTM) 활동에 관여하는 파슈툰족 및 시아파 파슈툰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방가쉬족, 투리족 참조).

투리족

3.56 투리족은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쿠람(Kurram) 지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파슈툰 부족이다. 파키스탄 내 투리족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다수가 시아파 교도이다. 투리족은 외모상 다른 파슈툰족과 구별되지 않으나, 부족명, 독특한 억양, 투리족 밀집 지역 거주 여부 등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

3.57 투리족은 역사적으로 타 파슈툰 부족과의 영토 분쟁, 시아파 신앙에 따른 갈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및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을 포함한 수니파 무장단체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겪어왔다(무장단체 참조). 현지 소식통은 쿠람(Kurram) 지구의 치안 상황이 2019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종파 간 공격이나 무장단체의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조치는 적절한 수준이었지만, 지역 부족 간 분쟁에 대응하는 치안 인력은 여전히 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지 소식통은 투리족이 쿠람(Kurram) 지구, 페샤와르(Peshawar) 등 파키스탄 내 타 지역에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적 차별을 겪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3.58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쿠람(Kurram) 지구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적 긴장이 재점화되어 최소 3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5월 4일에는 쿠람(Kurram) 지구 파라치나르(Parachinar)에서 발생한 두 건의 별개 총격 사건으로 투리족 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 5월 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퍼 쿠람(Upper Kurram) 지구 경찰 책임자인 무함마드 임란(Muhammad Imran)은 첫 번째 총격은 샬로잔(Shalozan) 지역 인근 도로에서, 두 번째는 테리 멩갈(Teri Mengal) 학교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정부 관리들은 해당 사건을 '토지 분쟁'의 일환으로 설명했으나, 투리 부족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와도 토지 분쟁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며 해당 사건이 명백한 '테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 직후 투리족은 긴급 지르가(jirga, 부족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또한 이들은 5월 4일 파라치나르(Parachinar)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3.59 투리족은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이주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다른 민족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주 능력은 재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부족적 네트워크 형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국내 이주 참조). 타 지역으로 이주한 투리족은 비파슈툰계 민족 집단이 볼 때 다른 파슈툰족과 외견상 즉시 구별되지 않는다.

3.6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거주하는 투리족이 다른 파슈툰족 및 시아파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공적·사회적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내 투리족이 타 파슈툰 부족이나 무장단체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거주 투리족은 주로 자체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며 부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키스탄 내 그 외 지역에서도 투리족이 직면한 공적·사회적 차별 위험은 다른 파슈툰족 및 시아파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종교

3.61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이다. 2023년 국가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6.3%가 수니파 또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확인되었다. 무슬림 인구 중 80~85%는 수니파이며, 시아파가 나머지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비무슬림 인구는 힌두교도 1.6%, 기독교도 1.4%, 아흐마디아파 0.1% 미만, 그리고 기타(바하이교(Baha'i), 불교, 파르시교(Parsis), 시크교(Sikh) 등) 종교가 0.6%로 구성된다. 소수 종교 지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 집단 규모를 축소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신자 수와 보고된 수치 간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62 헌법은 이슬람교를 파키스탄의 공식 종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0조는 법률, 공공질서 및 도덕을 조건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종교를 고백, 실천 및 전파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종교 교파와 그 종파는 종교 기관을 설립, 유지 및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6조 또한 소수집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추가로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에 따라 시민의 권리 범주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41조 제2항과 제91조 제3항은 대통령과 총리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헌법 제260조는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아흐마디아파를 포함한 여러 집단을 그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3.63 헌법은 국민의회와 각 주의회의 의석 할당을 통해 소수 종교 집단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헌법 제51조 제4항은 비무슬림 소수집단에 국회 의석 10석을 배정하고 있으며, 제106조는 모든 주의회에 비무슬림 할당 의석을 정해두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한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소수 종교 집단(시아파와 아흐마디아파 제외)의 고용을 위해 5퍼센트 할당제를 설정했으나, 이러한 고용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관리 및 행정 직무에 소수 종교 집단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고용된 소수 종교 집단 출신자들은 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수 종교 집단을 위한 할당직 중 3만 5,000개 이상이 현재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되었다.

3.64 197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정치와 문화 전반은 모하마드 지아울하크(Mohammad Zia-ul-Haq) 장군이 니잠-에-무스타파(Nizam-e-Mustafa)를 강제 시행함에 따라 급격한 이슬람화 과정을 겪었다. 지나 범죄 조례(후두드 조례)(Offence of Zina (Enforcement of Hudood) Ordinance, 1979)는 음주, 혼외 성관계,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고 있다. 비무슬림은 음주 금지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으나, 그 외 금지 조항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3.65 연방샤리아법원(Federal Shariat Court, FSC)은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의 무슬림 판사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이슬람법에 정통한 울라마(ulama, 이슬람 학자)여야 한다. 연방샤리아법원(FSC)의 권한은 현행법이 이슬람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후두드 법령(Hudood Ordinances, 1979)」 집행 판결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범위까지 포함한다. 연방샤리아법원(FSC)의 판결에 대해서는 세속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66 「샤리아 시행법(Enforcement of Shari'ah Act, 1991)」은 모든 법률이 이슬람에 부합해야 하며 꾸란이나 순나(Sunnah)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샤리아(이슬람 경전, 특히 꾸란과 하디스(hadith)에 기반한 종교법)는 1991년 단순한 입법 지침을 넘어 국가 기본법(law of the land)으로 선포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 학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법 조항을 해석할 때 꾸란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세속 법원과 국가 이슬람 기구 간의 제도적 경계가 모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에서는 이로 인해 개별 판사의 종교적 이해가 판례에 기반한 법적 추론을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3.67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파키스탄 내 종교적 극단주의와 불관용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소수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수많은 신성모독 사건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중 앞에서의 공개적 발언이나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안보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Security Studies)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비무슬림 신도 및 예배 장소를 겨냥한 폭력 사건은 총 193건이 기록되어 이전보다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사회정의센터(Centre for Social Justice)는 2023년 초부터 종교정치단체들이 총선 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신성모독 혐의를 반복적으로 무기화해 왔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에 의한 신성모독 혐의 남용 사례가 2023년 5월 사르고다(Sargodha)에서 시아파를 대상으로 다시 발생했으며, 이후 아흐마디야(Ahmadiyya)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과 펀자브(Punjab) 및 신드주 일부 지역으로 확산된 기독교도 대상 공격(2023년 8월 자란왈라(Jaranwala) 사건 포함)이 신성모독을 구실로 잇따라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정부가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과 같은 강력한 로비 집단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종교적 극단주의 행태를 묵인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성모독

3.68 신성모독 및 종교와 관련된 기타 범죄는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Act XLV of 1860)」 제295A조, 제295B조, 제295C조 및 제298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1860) 제295C조는 신성한 예언자에 대한 '경멸적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제295B조에 따르면 꾸란 사본을 '모독(defiling)'하는 행위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제298A조는 '신성한 예언자의 아내, 가족 구성원 또는 정통 칼리파의 성명'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벌금 병과 가능)을 규정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의 2023년 보고서인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과 종교의 자유 관련 법률 평가(Assessing Blasphemy and Related Laws on Religious Freedom in Pakistan)'에 따르면, 1987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2,100명 이상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 40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며, 89명은 군중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신성모독 유죄 판결로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3.69 파키스탄은 인도 분할 이후 영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신성모독법을 계승했으나, 1970년대까지는 해당 법률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은 전 세계적으로 신성모독법을 가장 엄격하고 빈번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신성모독 혐의는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사형 선고 후 장기 구금, 독방 감금, 망명을 초래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3.70 2023년 1월 17일, 국회는 형법(개정)법(Criminal Laws (Amendment) Act, 2023)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신성모독법의 적용 범위를 예언자 동료들(역사 전반에 걸쳐 수천 명의 무슬림이 해당할 수 있음)을 모욕했다고 간주되는 자로 확대했으며, 형량을 10년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상원은 2023년 8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확대된 법률이 소수 종교 집단, 특히 시아파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양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지 않아 제정되지 않은 채 효력이 만료되었다.

3.71 이슬람에서의 개종(배교)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신성모독법에 따른 기소나 가족 및 지역사회의 폭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2022년 4월, 배교 사건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자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개종자들이 사회·정치적 소외와 제도적 차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 혐의, 체포, 장기 징역형, 자경단식 군중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1860)」 제295A조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2 파키스탄 국가정의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수 종교 집단은 전체 인구의 4%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 혐의 기소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의센터(CSJ)는 2023년 최소 329명이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소수 종교인의 비율은 불균형적으로 높았으며, 시아파 38%, 아흐마디아파 20%, 기독교도 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2023년 전체 신성모독 사건의 54%가 펀자브주에서 접수되었고, 그 뒤를 이어 24%가 신드주에서, 11%가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에서 접수됐다. 사건 보고가 가장 빈번한 도시는 라호르, 파이살라바드(Faisalabad), 코틀리(Kotli), 쿠람(Kurram), 만디 바하우딘(Mandi Bahuddin), 카라치(Karachi)였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2024년 신성모독 유죄 판결 사례 중에는 관련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22세 피고인이 사형을, 동일 사건의 17세 피고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존재했다(파키스탄 법상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금지되어 있다).

3.73 하급 법원의 신성모독 유죄 판결률은 매우 높으며, 판사들은 대중의 강력한 유죄 판결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사법부 참조). 현지 소식통은 대부분의 신성모독 유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혐의의 근거 없음이 최종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수년간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찰에 신성모독 혐의를 제기하려면 고소인이 지역 관할에 최초정보보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 FIR)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은 심도 있는 조사 과정 없이 즉각 체포된다. 일반적으로 신성모독 사건의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5~1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판사와 변호인들은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성모독 사건 수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인권 활동가 참조).

3.74 신성모독 혐의자는 경찰 구금 전후 및 구금 도중에 초법적으로 살해될 위험이 있다. 일례로 2024년 9월 국내외 언론은 신드주 경찰이 소셜 미디어에 신성모독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도피 중이던 샤나와즈 칸바르(Shahnawaz Kanbhar) 박사를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칸바르 박사가 오토바이 동승자에 의한 '오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유가족은 BBC 우르두(BBC Urdu)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조작된 교전(fake encounter)으로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카이베르파크툽와주 스와트(Swat) 지구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꾸란 모독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단 공격을 가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서 내에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피해자의 몸과 경찰서, 경찰 차량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23명을 체포하고,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 49명과 신원 미상 용의자 2,500명을 최초정보보고서(FIR)에 등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7명이 초법적으로 살해되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2023년 5월 카이베르파크툽와주 마르단(Mardan) 지구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집회에서 한 지역 무슬림 지도자가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군중을 분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경찰이 그를 인근 상점으로 대피시켰으나 분노한 군중은 상점 문을 부수고 그를 끌어내어 곤봉으로 살해했다. 당시 소셜 미디어에 확산된 영상에는 폭도가 남성을 구타하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2월 펀자브주 난카나 사히브(Nankana Sahib) 지구에서 수백 명이 경찰서에 난입해 신성모독 용의자를 유치장에서 끌어내 살해했다. 셰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이 사건을 규탄하며 경찰이 집단 공격을 막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3.75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모독법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원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수 종교 집단은 경찰이 자신들의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하급 법원 판사들이 종교 단체의 압력에 밀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수 종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허위 신성모독 고발이 제기되어도 고발자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2023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는 신성모독 혐의가 개인적 원한 해결 수단으로 악용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혐의가 정식 기소되거나 법정에 제출되기도 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허위 신성모독 고발 사건 대다수에서 허위 고발자와 자경단 폭력 가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가정의평화위원회(NCJP)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법 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허위 고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개종 요구를 거부하는 여성과 소녀들 또한 허위 신성모독 혐의와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강제 개종 참조).

3.7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차별은 체포 및 구금, 종교 범죄 기소, 불공정한 재판과 선고(사형 포함), 그리고 부적절한 국가 보호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신성모독 혐의자들이 공개적 비난, 신상 털기, 신체적 폭력 및 초법적 살해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아흐마디아파, 기독교도, 힌두교도, 시아파 등 소수 종교인과 그 중에서도 여성 및 소녀는 더욱 가중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강제 개종

3.77 기독교도와 힌두교도 소녀들은 이슬람교로의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매년 12세의 어린 소녀들까지 노린 종교적 소수 공동체 소녀들의 납치 사건이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다(여성, 아동 참조). 종교적 소수자 출신 소녀들은 경제적 취약성, 이들의 이슬람 개종이 종교적으로 공덕이 된다는 믿음, 그리고 국가 보호 체계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강제로 개종당한 소녀들은 빈번하게 강제 결혼을 강요받으며 젠더기반폭력(GBV)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탈출하여 원래의 종교로 되돌아가려 할 경우,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는 경제적 곤궁이나 기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슬람교 신자로 개종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3.7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OHCHR)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납치되어 먼 곳으로 인신매매되고, 때로는 나이가 두 배 이상 많은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며 이슬람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결혼과 개종이 소녀와 그 가족에 대한 폭력적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족의 사법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혼 및 개종의 상당수가 종교 당국의 개입과 보안군 및 사법 당국의 방조 하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인신매매 참조). 법원은 납치범이 제시한 미성년 소녀가 성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증거와 자발적 결혼 및 개종에 관한 허위 증거를 면밀한 검토 없이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사실상 용인했다. 법원이 종교법 해석을 오용하여 피해자가 학대자와 계속 머물도록 방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납치범들은 종종 피해자에게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며 자유 의지로 결혼하고 개종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경찰은 이러한 문서를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용했다.

3.79 파키스탄 국가정의평화위원회(NCJP)는 2023년 인권 모니터(Human Rights Monitor) 보고서를 통해 2022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강제 개종 사례 수십 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주로 미성년 기독교도와 힌두교도 소녀들이 연루된 사건들이었다. 일례로 펀자브주 바하왈푸르(Bahawalpur) 출신의 한 학생은 등교 중 납치되어 어두운 방에 갇힌 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특정 서류에 강제로 서명한 후, 자신이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되었으며 이미 혼인한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년 후 피해자는 탈출에 성공했으며, 부친은 가족 법원에 강제 혼인 무효화와 가족을 표적으로 한 공동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라왈핀디(Rawalpindi)에서는 12세 기독교도 소녀가 납치되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된 후 40세 납치범과 강제 혼인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2022년 3월 21일 신드주 수카르(Sukkar)에서는 18세 힌두교도 소녀가 이슬람 개종과 무슬림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드주의 한 힌두교 공동체는 강제 개종을 당국에 신고할 경우 신성모독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모든 종교적 소수 집단이 강제 개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빈번한 무대응과 가해자 편을 드는 사법부의 종교적 편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3.80 2023년 1월 1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파키스탄 당국이 강제 개종, 강제 혼인 및 조혼, 납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 및 집행해야 하며, 노예제와 인신매매 척결 및 여성·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또한 파키스탄 정부에 국내법 및 국제 인권 약속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예방하고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강제 개종 금지 법안은 의회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 종교부 장관이 입법 추진을 하기에는 의회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직후의 일이었다.

3.81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된 소수 종교 공동체 여성과 소녀들이 종교를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차별은 부적절한 국가 보호, 불공정한 재판,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기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된 여성과 소녀들이 소수 종교 공동체 외부에서 대중적 비난, 신체적 폭력, 초법적 살해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기독교도 및 힌두교도 여성과 소녀는 더욱 가중된 위험에 처해 있다.

아흐마디아파

3.82 아흐마디아파는 카디안(Qadian)의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창시자)를 '약속된 메시아'로 여기는 이슬람 부흥 운동인 아흐마디아(Ahmadiyya)에 속한다. 아흐마디아(Ahmadiyya)라는 명칭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또 다른 이름인 '아흐마드(Ahmad)'에서 유래했다. 일부 아흐마디아(Ahmadiyya) 신앙이 수니파(Sunni) 및 시아파 이슬람 교리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무슬림은 아흐마디아파를 이단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부 무슬림은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가 스스로를 예언자로 선포했기에 그 추종자들이 이슬람의 근본 교리인 카템-에-나부왓(Khatem-e-Nabowat, 예언자 무함마드의 최종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흐마디아파는 또한 전투적 성전 개념을 거부한다.

3.83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서는 파키스탄의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 규모를 16만 2,684명으로 기록했으나, 그 외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인구 추정치는 4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다양했다. 편자브주에 위치한 인구 7만 명의 라브와(Rabwah)는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가 다수인 도시이다. 라브와에는 1948년부터 1984년까지 아흐마디아파 무슬림 공동체의 세계 본부가 있었으나, 1984년에 본부가 영국으로 이전했다. 라브와의 기반 시설은 전 세계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양질의 시설과 심장 전문 병원을 갖추게 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라브와 출입 시 차량 검문소 운영 및 검색 등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현지 소식통은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의 국외 이주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주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차별과 사회적 냉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3.84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는 외모, 언어, 이름만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흐마디아(Ahmadi) 이슬람 복장의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일부 아흐마디아(Ahmadi) 여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한다.

3.85 파키스탄에서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에 대한 공식적 종교 차별은 만연하며 잘 기록되어 있다. 1974년 이후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은 비무슬림으로 규정되었다. 조례(1984) 제20호에 따라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은 공개적 신앙 활동, 예배를 위한 비아흐미다야 모스크나 공공 기도실 사용, 기도 시 이슬람 경전 사용, 무슬림 기도 의례 수행, 종교 자료의 생산·출판·배포, 공공장소에서의 이슬람 인사말 사용, 개종 유도, 공개적인 꾸란 인용 등이 모두 금지되었다.

조례(1984) 제20호는 또한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이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이들이 신성모독 혐의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3.86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무슬림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이에 따라 당국과 일반 대중은 이들의 공개적인 예배 행위를 통상적으로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현지 소식통과 국제 언론에 따르면,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이 구란을 낭독하거나 무슬림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1860) 제298A조 및 제298C조에 의거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은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변론하는 행위 자체가 포교로 간주되어 또 다른 신성모독 혐의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신성모독 참조)

3.87 다수의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가 「전자 범죄 방지법(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2016)」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해당 법률이 본래 혐오 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슬람에 대한 다수파적 해석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16명의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가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2024년 현재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소된 16명 중 6명은 2023년 10월 기준 미결 구금 상태였고, 5명은 정식 재판 없이 3년 이상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전자 위조를 자행하여 동일 법 제1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1조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5만 루피의 벌금형(병과 가능)을 규정한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다수의 아흐마디야(Ahmadi)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 위반에 따른 미집행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3.88 고등법원(High Court)과 대법원은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이 가정 내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몇 가지 우호적인 판례를 남겼다. 일례로 카지 파에즈 이사(Qazi Faez Isa) 전 대법원장은 2024년 2월 8일, 아흐마디야(Ahmadi) 공동체가 구란 주석서인 타프시르-에-사기르(Tafseer-e-Sagheer)를 인쇄 및 배포할 권리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 강요 금지 원칙을 인용하며, 모든 시민은 자신의 종교를 고백, 실천, 전파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침해되거나 희석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3개월간 수감되었던 피고인을 보석금을 조건으로 즉시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피고인 무바라크 아흐메드 사미(Mubarak Ahmed Sami)는 이단적 구란 주석서 배포를 금지하는 2021년 편자브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23년 1월 체포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여전히 편견을 지닌 지방 당국은 해당 판결의 상당수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카지 파에즈 이사 대법원장이 판결 이후 파키스탄라바이크당(TLP) 등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수차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3.89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은 법적으로 비무슬림으로 지정됨에 따라 혼인 등록, 투표,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히는 등 광범위한 공적 차별을 겪고 있다. 여권, 출생 증명서, 국민신분증(NIC)을 포함한 모든 공식 문서 신청서에는 종교 기재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험 응시와 여권 신청 시 종교 신고는 필수 사항이다. 파키스탄 공식 문서에 자신을 무슬림으로 기재하려면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가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를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고, 모든 아흐마디야(Ahmadiyya) 추종자를 '비무슬림'으로 비난하는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절차가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시에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비무슬림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는 데 동의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많은 공식 문서에서 이들을 '카디아니(Qadiani)'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아흐마디야 공동체에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다.

3.90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 여부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정확하고 최신화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파키스탄 여권 역시 2011년부터 도입된 '비고란'을 통해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임을 명시한다. 해당 기록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를 명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신앙을 포기해야 하므로, 대다수의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아흐마디야(Ahmadi) 공동체는 출생, 사망, 혼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교한 등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해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3.91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은 신앙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예배소는 빈번히 파손되거나 모독당하고 있다. 2024년 12월 라왈핀디(Rawalpindi)에서는 타이압 아흐마드(Tayyab Ahmad)가 아흐마디야(Ahmadiyya)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도끼를 든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도 바하왈푸르(Bahawalpur) 지구의 아흐마디야 공동체 지도자가 산책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수니파 종파주의 단체들에 의해 다수의 아흐마디야 모스크와 묘지가 훼손되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42곳의 예배소가 파손되었고, 편자브주에서 100기의 묘소가 모독당했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지방 당국은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경찰이 공격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으며, 지방 당국이 모스크의 미나렛이나 이슬람 구절이 새겨진 묘비의 복구를 금지하는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92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은 수니파 극단주의 집단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혐오 활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은 아흐마디야파에 대한 차별적 법안의 완화 움직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종교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이들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치인과 판사들 또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아흐마디야파를 비난하는 발언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군 지도부는 아흐마디야파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TLP의 폭력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군이 모스크를 모독한 TLP 가담자들에 대해 최초정보보고서(FIR)를 작성하도록 경찰을 압박하는 등, 치안 강화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일부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93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은 고용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사회적 차별과 배척을 경험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라브와(Rabwah) 이외의 지역에서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의 상점 출입을 제한하는 비공식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점 직원들이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에게 '가게에 들어오려면 먼저 이슬람에 입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아흐마디야(Ahmadi)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체가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 기물 파손과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변호사 협회는 예언의 종결(Finality of Prophethood)과 같은 주류 이슬람 교리에 동의한다는 선언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아흐마디야파의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아흐마디야(Ahmadi) 변호사들의 개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차원의 소수 종교인 고용 할당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라브와에서조차 경찰이나 지방 정부에 고용된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는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은 이어져, 아흐마디야파 학생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퇴학당하거나 종교 교육 수업 참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9월 23일, 편자브주 아톡(Attock)의 한 학교는 아흐마디야파 학생 4명에게 '카디아니교(Qadinaniat religion) 신앙을 이유로 더 이상 학적을 유지할 수 없다'며 퇴학을 통보했다.

3.9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내 아흐마디야파 신자(Ahmadi)들이 신앙에 대한 법적 금지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차별은 공식 문서 취득의 어려움, 국가 보호의 부재,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종교 관련 범죄 기소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라브와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이 공공 및 사회 서비스, 주거, 공공 부문 취업 및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공식적·사회적 차별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한다.

3.95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는(maintain a low profile)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의 경우, 뚜렷한 식별 특징이 없어 무장 세력이나 비국가 주체에게 표적이 될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 또한 복장의 미세한 차이로 구별될 수 있는 일부 여성의 사례는 예외적이거나, 이들 역시 신체적 폭력이나 초법적 살해를 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라브와 내 거주 신자들이 신체적 폭력 및 초법적 살해를 당할 위험은 낮은 반면, 라브와 외부에 거주하는 신자들은 초법적 살해를 포함한 폭력을 당할 위험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아흐마디아파 신자(Ahmadi)들이 라브와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파적 폭력에 대한 근거 있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에 접근하는 데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국내 이주 참조).

기독교도

3.96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약 330만 명의 기독교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가톨릭교회는 실제 기독교도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가 1,400만 명에서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파키스탄 기독교도의 대다수는 분단 이전 개종한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의 후손이다. 이들은 주로 펀자브주에 거주하며, 신드주, 이슬라마바드 및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도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파키스탄법은 기독교도의 종교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역시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종교 참조),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역사적인 공격 사례들로 인해, 경찰은 폭력 위험을 방지하고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등 주요 절기마다 기독교 교회를 대상으로 특별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3.97 기독교도들은 타 집단에 비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빈도가 잦으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러 인권 단체가 참여한 '국민 조사(Peoples' Inquiry)'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르고다, 파이살라바드 및 자란왈라에서 최소 60명의 기독교도가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구금 전 군중으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에는 한 출판사에서 제작한 꾸란의 일부 페이지가 하수구에서 발견되자, 현장에서 일하던 기독교도 미화원이 꾸란 모독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라호르 법원은 아쉬파크 마시흐(Ashfaq Masih)가 무슬림 고객에게 "예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고 발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발언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여 신성모독죄를 적용했다. 2022년 2월에는 한 기독교도 간호사가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 뒤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되어 가족과 함께 은신해야 했던 사례도 보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성모독 참조)

3.98 일부 기독교도들은 수니파 극단주의 집단에 의한 신체적 폭력과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 출신의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공동체가 느끼는 불안감과 취약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크리스마스 기간 라호르에서 한 목사의 주거지가 공격받아 기독교도 3명이 총상을 입었다. 미국 국무부(DOS)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만 신앙을 이유로 3명의 기독교도가 살해당했다. 2023년 4월 1일 페샤와르(Peshawar)에서는 청소 노동자 카시프 마시흐(Kashif Masih)가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2022년 1월 30일에는 파키스탄개신교회(Protestant Church of Pakistan)의 윌리엄 시라즈(William Siraj) 목사가 오토바이를 탄 가해자들에게 피살되었다. 또한 2022년 2월 14일 라호르의 기독교 지역에서는 150~200명의 무슬림 무리가 상점에서 페르베즈 마시흐(Pervez Masih)를 끌어내어 집단 구타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초법적 살해 참조)

3.99 2023년에는 무장 군중들이 기독교 신자와 예배 장소를 조직적으로 공격했다(시민 소요 참조). 2023년 8월 16일, 기독교인 주민 2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편자브주 자란알라 마을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수백 명의 군중이 구세군 교회(Salvation Army Church)와 성 바오로 가톨릭교회(Saint Paul Catholic Church)를 습격해 방화했으며, 기독교인 개인 주택들을 공격해 가산을 파괴했다. 이 사건으로 17개의 교회와 40가구의 기독교인 가정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종파의 성직자(울레마, ulema)들이 이 공격을 규탄했고, 아심 무니르(Asim Munir) 육군 참모총장 역시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해 용의자의 90% 이상이 여전히 검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정의 구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3.100 국내 및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이살라바드의 기독교인 거주지 인근에서 신성모독적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찢어진 쿠란 페이지가 발견되어 지역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도자는 무슬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설 것과 범인 체포를 강력히 요구하도록 종용했다. 현지 소식통은 경찰이 군중의 습격 몇 시간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기독교 공동체 공격에 가담한 무슬림 150여 명과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된 기독교도 2명을 체포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의 조사 결과, 이번 공격은 다수의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도한 기독교도 대상 혐오 캠페인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01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폭탄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라호르의 교회 두 곳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최소 14명이 사망했으며, 2017년 퀘타의 교회 자살 폭탄 테러로 9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2017년 이후 기독교인을 겨냥한 이와 유사한 규모의 공격 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바 없다.

3.102 기독교도 소녀들은 강제 혼인, 조혼 및 강제 개종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여성, 아동 참조). 2023년 지역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기독교도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강제 개종 사건을 최소 26건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DOS)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역시 무슬림 남성들이 어린 기독교도 여성들을 납치하고 강간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납치 피해 소녀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린 나이와 소수 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자신들을 취약한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14세 기독교도 소녀가 2022년 1월 4일 라호르에서 45세 무슬림 이웃에게 납치된 후, 납치범과의 혼인을 위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편, 2024년 개정된 「기독교 혼인법(개정) 법안(Christian Marriage (Amendment) Bill, 2024)」은 기독교 남녀의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로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제 개종 참조)

3.103 달리트(Dalit) 기독교도(식민 시대에 개종한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의 후손)는 대다수 무슬림으로부터 일상적인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 이들은 '불신자' 혹은 '더럽다'는 의미의 '추라(chura)'와 같은 경멸적인 비방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독교도는 불결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신체 접촉이나 시설 공유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현지 소식통은 무슬림들이 달리트 기독교도와 거래하거나 이들로부터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기피하여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심지어 경쟁 업체들이 기독교도 사업장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신성모독법을 악용하기도 한다. 또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기독교도 소유의 토지를 강탈하거나,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목적, 혹은 사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신성모독 고소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3.104 달리트 기독교도는 파키스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2024년 기준 다수의 달리트 기독교도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기독교도 여성과 소녀들은 더욱 가중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여성 참조). 많은 달리트 기독교도가 청소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 자유 활동가들은 2022년 민간 고용 부문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으며 이들이 단순 노동 이외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다. 2022년 1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금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구인 광고에서는 청소 업무의 자격 요건을 기독교도나 기타 '비무슬림'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파키스탄 전역의 쓰레기 수거, 하수 처리 및 거리 청소 직종의 80% 이상을 기독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이슬라마바드 위생 인력의 90%가 기독교도라고 보도한 바 있다.

3.105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기독교도들이 파키스탄에서 대체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기독교도들이 정부 고용 및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불공정한 재판, 종교 범죄 기소 등의 형태로 종교에 기반한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달리트 기독교도의 경우, 고등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 제한 형태의 중간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다. 기독교도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대체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기독교도 여성과 소녀는 가중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여성, 아동 참조).

힌두교도

3.106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힌두교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현지 소식통은 실제 인구가 9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드주의 힌두교 밀집 지역에 거주한다. 파키스탄 법은 힌두교도의 종교적 실천을 제한하지 않으며, 현지 소식통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 장소를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소수 종교와 마찬가지로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종교 참조), 인도에 대한 파키스탄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양국 관계의 부침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종교 집회나 축제 기간 동안 주요 힌두 사원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3.107 수니파 극단주의 집단들은 힌두교도를 표적으로 신체적 폭력과 초법적 살해를 가해왔다. 미국 국무부(DOS)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9월 8일 한 무슬림 경찰관이 하이데라바드 출신의 힌두교도 남성 알람 콜리(Alam Kohli)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가하며 추격한 끝에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 경찰관의 폭력 장면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당국이 피해자의 사인을 자살로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3년 6월 23일에는 신드주의 범죄 조직이 몸값을 노리고 저명한 힌두교 지도자를 납치했으며, 조직의 지도자인 우마르 샤르(Umar Shar)가 힌두 사원 공격을 예고함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안전상의 우려로 사원 방문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이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힌두교도 30명을 추가로 납치했다.

3.108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을 비롯한 종교 및 정치 단체들은 신규 힌두 사원의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해 왔다. 또한 폭도들에 의한 예배소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2023년 7월 신드주 카슈모르(Kashmore) 지구에서는 한 범죄 집단이 로켓 발사기(RPG)로 힌두 사원을 공격했으나, 다행히 탄두가 불발되어 인명 피해는 면했다. 2022년 7월 6일에는 카라치(Karachi)의 스리 마리 마타 만다르(Shri Mari Mata Mandar) 힌두 사원이 수니파 종파주의 집단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09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발루치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및 펀자브주에 적용되는 「힌두 혼인법(2017)」과, 신드주에서 혼인 등록 절차를 성문화하고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드 힌두 혼인법(개정)(2018)」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 소녀들은 여전히 강제 혼인, 미성년 혼인 및 강제 개종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2023년 지역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힌두교도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강제 개종 사건을 총 110건 확인했다.

3.110 전반적으로 힌두교도들은 종교적 이유로 의료,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접근에 있어 뚜렷한 장벽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타 소수 종교와 마찬가지로 힌두교도들은 정부 고위직, 경찰, 군 요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유한 상위 카스트 힌두교도는 하위의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 힌두교도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덜 겪는 편이다. 반면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공유하는 달리트 기독교도와 유사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많은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는 위생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으며, 신체 접촉 및 시설 공유 거부와 '추라(chura, 더럽다)'와 같은 경멸적 용어 사용을 포함한 일상적인 사회적 차별을 겪는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내 힌두교도의 이주율이 증가하는 현실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3.111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힌두교도들이 파키스탄에서 대체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들이 정부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나 불공정한 재판 등의 형태로 종교 기반의 공적 차별을 받을 위험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들이 고용 접근 제한과 같은 사회적 차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중간 수준으로 본다. 반면, 부유한 상위 카스트 힌두교도의 경우 정부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공적 차별 위험이 낮고, 사회적 차별 위험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힌두교도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대체로 낮은 수준의 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힌두교도 여성과 소녀는 강제 개종이나 혼인 등 가중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여성, 아동 참조).

시아파

3.112 파키스탄은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아파 인구 보유국이다. 약 2,000만~4,000만 명의 시아파가 파키스탄 전역에 거주하며, 여기에는 방가쉬(Bangash), 보흐라(Bohra), 하자라(Hazara), 이스마일리(Ismaili), 투리(Turi) 등의 소수 공동체가 포함된다. 시아파 올레마(성직자)는 2023년 시아파 인구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약 8,0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카라치(Karachi), 라호르, 라왈핀디, 이슬라마바드에는 상당한 규모의 시아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시아파는 길기트-발티스탄(GB) 지역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나, 그 외 주와 지역에서는 소수 집단이다. 파키스탄 시아파는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으며, 문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영향력 있는 고위직에 오르는 등 성공 사례가 많다. 또한 의회에서도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류 정당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3.113 대다수의 파키스탄 시아파(하자라족 제외)는 외모나 언어상 수니파와 구별되지 않으며,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신분증 신청 과정에서 종파 정보를 수집하지만, 국가 신분증(NIC)에는 소지자의 종파가 명시되지 않으며 여권 또한 수니파와 시아파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시아파는 나크비(Naqvi), 자이디(Zaidi), 자프리(Jafri) 등 시아파에서 흔히 쓰이는 성씨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하자라족과 투리족, 그리고 상당수의 방가쉬족이 시아파이므로, 민족이나 부족명을 통해 종파를 식별할 수도 있다.

3.114 파키스탄 법은 시아파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시아파 종교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시아파가 새로운 모스크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동의서(NOC)'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종교 집회 개최 허가를 받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시아파는 종교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교육 또는 사회 복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 뚜렷한 장벽을 겪지는 않는다.

3.115 시아파는 종교적 불관용의 심화와 신성모독 고발 형태의 공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 2023년 전체 신성모독 사건의 38%가 시아파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2023년 1월, 종교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el) 소속 의원은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상에서 신성모독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형법(개정) 법(202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법(1860) 제298A조의 신성한 인물에 대한 경멸적 발언 등 사용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징역 또는 벌금에서 중신형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정의센터(CSJ)는 이 법안이 수니파와 시아파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 위반자는 보석 불허 대상이 되어 헌법 제9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국회 사회의를 거쳐 8월 7일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2023년 8월 15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의회로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신성모독 섹션을 참조 바람.

3.116 펀자브 의회(Punjab Assembly)는 2020년 7월 「펀자브 타하푸즈 분야드-에-이슬람 법안(Punjab Tahaffuz Bunyad-e-Islam Bill, 2020)」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길기트-발티스탄(GB) 지역의 분리 요구를 포함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펀자브 주지사는 해당 법안 승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 및 동료, 또는 4대 성서를 모독하는 자료의 출판을 금지하고, 테러 교사나 종파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 법안이 수니파의 꾸란 해석을 표준화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치적 계승에 관한 시아파의 핵심 신념을 범죄화했다는 점에서, 시아파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3.117 시아파는 신체적 폭력과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ATP)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480건의 무장 공격 및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약 2,800명의 시아파가 목숨을 잃었다. 일례로 2022년 3월 4일,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자살 폭탄 테러범이 페샤와르(Peshawar)의 이맘바르가(imambargah, 시아파 전용 예배소)에서 금요 기도 중 폭탄을 터뜨려 예배자 약 62명을 살해했다. 같은 달 카라치(Karachi)에서는 시아파 조직 파스반-에-아자(Pasban-e-Aza)의 사무총장 사이드 살만 하이데르 리즈비(Syed Salman Haider Rizvi)가 자택 인근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다만 시아파 예배소와 행렬에 대한 경찰의 치안 강화 조치 덕분에, 시아파를 겨냥한 공격 빈도는 2013년 이후 크게 감소한 추세다.

3.118 아흘-에-수나트-왈-자마아트(AHL-e-Sunnat-Wal-Jamaat), 라쉬카르-에-장비(LeJ),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시파-에-사하바 파키스탄(Sipah-e-Sahaba Pakistan),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 운동(TLP) 등 극단주의 수니파 단체들은 시아파를 '이교도'로 간주한다. 이들은 종종 타크피르(takfir) 개념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따르는 무슬림을 이슬람 공동체에서 사실상 파문한다. 특히 시아파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 후세인 이븐 알리와 그 일가의 순교를 애도하는 무하람(Muharram) 기간에는 양 종파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곤 한다.

3.119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법적 혼인은 가능하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2018년 보고서는 이러한 종파 간 혼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과 사회 계층, 가족 상황에 따라 사회적 멸시와 방해부터 생명에 대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현지 소식통 또한 이러한 실태를 확인해주었다.

3.12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시아파가 파키스탄에서 대체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나 종교 범죄 기소와 같은 종교 기반의 공적 차별을 받을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반시아파 시위 등의 차별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보지만, 특정 공동체(방가쉬족, 하자라족, 투리족 등)에 속한 경우에는 더 높고 구체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방가쉬족, 하자라족, 투리족 별도 평가 참조). 아울러 시아파 여성과 소녀 역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여성, 아동 참조).

시크교도

3.121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시크교도 인구는 1만 5,998명이다. 파키스탄 법은 시크교도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시크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다만 수니파 이슬람을 제외한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시크교도 역시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종교 참조). 경찰은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종교 집회나 축제 기간 동안 시크교 예배소인 구르드와라(gurdwara)를 대상으로 특별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3.122 시크교도들은 신체적 폭력과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현지 소식통은 시크교도를 겨냥한 폭력 사례가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6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페샤와르(Peshawar)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남성 살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페샤와르에서 또 다른 시크교도 남성을 총으로 살해했다. 2023년 5월에는 라호르에서 시크교도 남성이 피살되었고, 2022년 5월에는 페샤와르 외곽에서 시크교도 2명이 신원 미상의 가해자들에게 살해당했다.

또한 2022년 10월 신드주 자코바바드(Jacobabad)에서는 13세 시크교도 소년이 무슬림 3명에게 총기로 위협받으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내 시크교 구르드와라 한 곳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했다.

3.123 현지 소식통은 시크교도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 개종, 조혼 및 강제 혼인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한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일례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부네르(Buner) 지구에서 25세 시크교도 여성이 총기로 위협받으며 납치된 후, 강간 및 강제 개종을 거쳐 납치범과 혼인하는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 혼인 과정에 지역 행정부와 경찰의 방조 내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혼인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한 「편자브 시크 아난드 카라즈 혼인법(Punjab Sikh Anand Karaj Marriage Act, 2018)」 등 주법을 제정했다. 신드주에서는 「신드 힌두 혼인법(Sindh Hindu Marriage Act, 2017)」 조항이 시크교도의 혼인에도 적용된다.

3.124 일반적으로 시크교도는 종교적 이유로 의료, 교육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뚜렷한 장애를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종교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고위 공직, 경찰 및 군 요직 진출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시크교도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공포와 더 나은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로 인도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3.125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시크교도들이 파키스탄에서 대체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이 정부 고용 기회 접근에 대한 장벽과 같은 종교 기반의 공적 차별을 받을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차별 및 폭력 위험 역시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나, 시크교도 여성과 소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여성, 아동 참조).

(실제 또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

3.126 파키스탄 헌법 제10조는 "모든 시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이슬람의 영광, 파키스탄의 통합·안보·국방,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질서, 품위 또는 도덕성, 법적 모독, 범죄의 실행 또는 선동과 관련하여 법률이 부과하는 '합리적 제한'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들이 지닌 광범위함은 결과적으로 파키스탄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3.127 파키스탄 정부, 군부 및 보안기관은 다양한 주제를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종교 및 민족 문제, 자치와 분리주의, 부패, 토지 및 재산권, 노동권,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초법적 살해, 그리고 군부나 정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논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 감시, 괴롭힘, 물리적·전자적 사찰, 비자 취소, 자산 압류,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실종이나 초법적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3.128 헌법 제50조는 보통 선거권에 따른 선거를 규정하며, 투표 연령은 18세이다. 사실상 종교를 포기해야만 출마가 가능한 아흐마디아파(Ahmadi)를 제외하면, 소수 민족이나 종교 출신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는 없다.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의석 중 비무슬림 소수자에게 10석, 여성에게 60석이 할당되어 있으며, 이 의석들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방식으로 배분된다(정치체제 참조).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국가 인구조사가 소수자를 과소 집계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배정된 의석수가 실제 비례 대표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129 파키스탄의 정치 지형은 매우 견고하고 다양하다. 2024년 총선에는 다양한 민족, 종교 및 이념을 대표하는 44개 정당이 출마했으며, 그중 14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러 비공식적 장벽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과 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군, 보안기관의 눈 밖에 난 정당은 법적 분쟁, 괴롭힘 및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의 정부 기관, 특히 국가책임국(NAB)과 연방수사국(FIA)이 법체계와 폭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전했다. 최근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와 파키스탄인민당(PPP) 주도의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대표적인 대상은 파키스탄정의운동(PTI)과 그 동맹 세력의 유력 인사들이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 여권인 PML-N과 PPP 당원들은 대체로 이러한 표적 수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연방수사국(FIA)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인권 활동가 및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130 다수의 현지 소식통, 외국 정부, 국제 언론 및 인권 단체들의 공통된 보고에 따르면, 2024년 2월 8일 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소속 정치인 전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제약을 받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PTI 지지자들을 구금 및 괴롭혔고, 정당的高유 선거 상징물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선거 당일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하고 결과 발표를 지연시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결과 조작에 관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정당의 출마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파키스탄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3.131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내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한이 민간 및 군 기관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제기하는 개인(가족, 옹호자, 법률 대리인 포함)과 단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위험 평가는 인종/국적, 시민사회, 언론 및 언론인 섹션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와미 국민당(ANP)

3.132 1986년 창당된 아와미 국민당(ANP)은 비폭력을 주창하고 파키스탄 각 주의 최대 자치를 옹호했던 칸 압둘 가파르 칸(일명 바차 칸)의 이념을 계승하는 세속적 파슈툰 민족주의 정당이다. ANP는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의 파슈툰족 밀집 거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파슈툰족 참조). 2021년 ANP는 아프간 탈레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테러 행위만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선언했다.

3.133 아와미 국민당(ANP)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주도의 연립 정부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를 통치했으며, 연방 연립 정부의 소수 파트너로 활동했다. 그러나 ANP는 2024년 총선에서 연방 의회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같은 해 치러진 주 의회 선거에서도 발루치스탄주 총 65석 중 3석,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총 145석 중 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세력이 약화되었다.

3.134 아와미 국민당(ANP)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자치권 확대, 편자브족의 패권 축소, 그리고 지역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옹호한다. 일례로 ANP의 주 대표 아이말 왈리 칸은 2023년 12월 집회에서 "파슈툰 지역의 전쟁은 현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파슈툰족은 애국적인 파키스탄인이지만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테러와 자살 공격에 침묵하는 성직자(울레마)들을 비판했다. ANP는 파슈툰족이 타 주로 이주할 때 겪는 차별에 반대하며 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2018년 이후 ANP 구성원들은 파슈툰보호운동(PTM)이 주도하는 인권 침해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시위자 참조).

3.135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와미 국민당(ANP)의 일부 단원들은 물리적 폭력,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일례로 2023년 10월, ANP 지도자 자베드 칸(Javed Khan)이 괴한의 근거리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당국은 이 사건의 원인을 '혈족 간 불화(blood feud)'로 규정했으나 논란이 있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2023년 초 발루치스탄주에서 파슈툰족의 권익을 옹호해 온 ANP 당원 3명이 정체불명의 집단에 납치된 후 살해되었다고 전했다.

3.13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아와미 국민당(ANP)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파키스탄 내 파슈툰족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파슈툰족의 권리 확대, 자치권 강화 또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자결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당원의 경우 괴롭힘, 감시, 체포, 구금,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 등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ANP 당원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대체로 낮은 수준의 폭력 및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민족운동(MQM)

3.137 통합민족운동(MQM)은 1984년 결성된 카라치(Karachi) 기반의 세속 정당으로, 인도 출신 우르두어 사용 무슬림 이주민인 무하지르(Muhajir)와 그 후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신드주의 핵심 정치 세력이었던 MQM은 당시 당내 무장 조직이 정부군 및 타 민족 정치 세력과 충돌하면서 카라치 내 대규모 정치적 폭력 사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3.138 2018년 지도자 알타프 후세인(Altaf Hussain)이 총선을 보이콧하면서 당은 'MQM-파키스탄'과 'MQM-런던' 분파로 갈라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두 분파는 화해한 상태이며, 통합된 MQM은 과거에 비해 '반체제적 성향'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MQM은 2024년 총선에서 연방 의석 22석을 확보했으며, 신드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총 168석 중 36석을 획득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3.139 통합민족운동(MQM) 당원들을 겨냥한 물리적 폭력과 초법적 살해 사례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최근에도 산발적인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데,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카라치에서 파키스탄인민당(PPP)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당원 1명이 사망했다. 이어 2월에는 또 다른 당원이 카라치 소재 자신의 처가에서 신원 미상의 괴한에게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14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통합민족운동(MQM) 당원들이 현재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공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들이 카라치 기반의 범죄 조직이나 타 정당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은 낮은 수준이며, 사회적 차별 역시 겪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

3.141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1996년 임란 칸(Imran Khan)이 창설한 세속 정당으로, 한때 당원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며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입지를 굳힌 PTI는, 2018년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임란 칸을 총리로 선출했다.

3.142 2020년 말, 파키스탄의 주요 야당들은 '파키스탄민주운동(Pakistan Democratic Movement, PDM)' 연합을 결성하여 임란 칸 총리가 군부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1년 말, 칸 총리는 군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실패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군부의 지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칸은 2022년 4월 10일, 국회 불신임안 가결로 실각한 파키스탄 최초의 총리가 되었다. 2022년 말에는 수천 명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지지자들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이어지는 '대장정(long march)'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칸은 암살 시도로 인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국가책임국(NAB)은 2023년 5월 9일, 임란 칸이 해외 순방 중 받은 고가의 국가 소유 선물(약 1억 4천만 파키스탄 루피 상당)을 불법 매매한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이 사건은 소위 '토샤카나 사건(Toshakhana case)'으로 널리 알려졌다. 체포 직후 수천 명의 PTI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며 경찰과 충돌했다. 현지 및 국제 언론은 시위대가 칸의 체포를 그의 '반군부 입장'에 따른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하여 파키스탄 전역의 군사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칸은 한 차례 석방되었으나 2024년 8월에 다시 체포되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칸은 수십 가지의 혐의를 받고 구금 중이며, 그는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143 2023년 5월 9일 발생한 폭동에 대응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군대를 배치하고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1898)」 제144조를 발동하여 4인 이상의 모든 미승인 공공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9일 시위 도중 민간인 14명이 사망했으나, 경찰 및 법 집행관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7일, 파키스탄 군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 맞서 증오를 조장하고 정치적 반란을 주도한 기획자와 배후 세력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천명했다.

3.144 다수의 인권 단체는 파키스탄 당국이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지도부와 그 가족들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강제 실종, 체포, 그리고 반복적인 구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 군부, 보안기관은 '예방적 구금'을 통해 지도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PTI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했다. 실제로 '실종' 처리되었던 PTI 정치인들은 이후 다시 나타나 기존 소속 정당을 공개 비난하는 등 변화된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일례로 PTI 지도자 사다캇 알리 압바시(Sadaqat Ali Abbasi)는 2023년 5월 강제 실종된 후 몇 달 만에 다시 나타나 당내의 급진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예자즈 차우드리(Ejaz Chaudhry) 상원의원은 5월 9일 시위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인해 '폭력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알리야 함자 말릭(Aliya Hamza Malik) 전 의원은 라호르 경찰서 방화 기소 혐의로 체포되었다. 2023년 9월에는 우스만 다르(Usman Dar)를 포함한 여러 PTI 지도자들이 강제 실종되었다가 이후 석방되었고, 2024년 2월에는 아슬람 굴만(Aslam Ghumman)이 신원 불상자들에게 납치되기도 했다. 같은 달, 연방수사국(FIA)은 주요 주 총리직 후보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임란 칸의 여동생 알리마 칸(Aleema Khan)을 대중 선동 혐의로 소환했다.

3.145 당국은 PTI 당원들을 정치적 견해에 따라 괴롭히거나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9일 시위와 관련하여 493건의 최초정보보고서(FIR)가 등록되었으며, 8,031명이 체포되고 3,261명이 구금되었다. PTI 측은 시위 이후 1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미결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고위직 당원들이 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1~3선급 지도자들 역시 집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위 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하위급 지지자들이 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향후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예방적 구금 사례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46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PTI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인, 학자 등도 공식적인 괴롭힘을 겪고 있다(정치적 견해도 참조). 2023년 3월, 파키스탄 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은 임란 칸이 국가 기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그의 연설 방송을 전면 금지하고 민영 뉴스 네트워크인 ARY TV의 송출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2024년 11월 15일, 신드 고등법원은 PEMRA가 부과한 칸의 연설 방송 금지 처분을 취소했다(언론과 언론인 참조).

3.147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지도자들이 괴롭힘, 체포, 투옥 및 강제 실종 등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과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당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시위를 주도하지 않는 일반 당원 및 지지자들의 경우 괴롭힘이나 체포와 같은 공적 차별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PTI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에 직면할 위험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파슈툰보호운동(PTM)

3.148 파슈툰보호운동(PTM)은 2018년 이슬라마바드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개최된 대규모 청년 집회(jalsas)를 계기로 급부상한 파슈툰 인권 운동 단체이다. 파슈툰보호운동(PTM)은 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 내 파슈툰족 밀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파슈툰보호운동(PTM)은 자신들의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파슈툰보호운동(PTM) 지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를 향해 파슈툰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의 중단, 지뢰 제거, 그리고 보안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3년 3월, 만주르 파슈틴(Manzoor Pashteen) 파슈툰보호운동(PTM) 대표는 파슈툰 지역의 평화 회복이 '억압받는 모든 파슈툰족'을 대변하는 파슈툰보호운동(PTM)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6일, 내무부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활동'을 이유로 파슈툰보호운동(PTM)을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

3.149 파슈툰보호운동(PTM) 지도자들은 해당 단체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일례로 파슈툰보호운동(PTM) 지도자 알리 와지르(Ali Wazir)는 2023년 11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데라 이스마일 칸(Dera Ismail Khan) 지구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선동적 발언'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앞서 2020년 12월에도 페샤와르(Peshawar)에서 '반역'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육군 참모총장은 알리 와지르가 군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파슈툰보호운동(PTM) 의장 만주르 파슈틴이 발루치스탄 진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원들은 오히려 경찰이 차량을 향해 발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만주르 파슈틴은 2022년 10월 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파키스탄 형법(1860) 제124A조(반란 선동) 및 제505조(공공질서 교란), 「대테러법(Anti-Terrorism Act, 1997)」 제11-X조(시민 소요 조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프론티어 군단(Frontier Corps)이 고위 파슈툰보호운동(PTM) 지도자 3명을 체포한 뒤 강제 실종시켰다.

3.150 당국은 파슈툰보호운동(PTM)이 테러 조직으로 선언되기 전에도 일부 회원들을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괴롭히거나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현지 소식통은 2019년 이후 수천 명의 파슈툰족(상당수가 파슈툰보호운동(PTM) 회원)이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체포된 회원 중 일부는 구금 중 고문을 당했거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에서 허위 최초정보보고서(FIR)가 작성되었다고 증언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경찰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권 시위를 앞두고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공공질서 유지 조례(1960) 제3조를 적용해 주 전역에서 다수의 파슈툰보호운동(PTM) 회원을 체포했다가 이후 석방했다. 2024년 10월, 현지 및 국제 언론은 파슈툰보호운동(PTM) 회원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지도자인 만주르 파슈틴은 현재 도피 중이라고 보도했다.

3.151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슈툰보호운동(PTM)이나 그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파슈툰보호운동(PTM)의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인, 학자 및 관계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현지 소식통은 2019년 5월 북부 와지리스탄의 카르카마르(Kharqamar) 검문소에서 발생한 군경과 회원 간의 유혈 충돌 이후, 파키스탄 정부가 파슈툰족의 결집과 지역 자치 요구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국이 파슈툰보호운동(PTM)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까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3.152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슈툰보호운동(PTM) 지도자들이 정치적 견해 표명 및 단체의 테러 조직 지정 등을 이유로 괴롭힘, 체포, 구금, 강제 실종과 같은 공적 차별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또한 신원이 알려진 활동가 및 회원들은 파슈툰보호운동(PTM)이 테러 조직으로 선언된 결과 괴롭힘, 체포, 구금 형태의 공적 차별을 당할 위험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슈툰보호운동(PTM) 지지자나 관련 사업체들이 겪을 공적 차별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다. 파슈툰보호운동(PTM) 회원들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사회적 폭력을 당할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타 파슈툰족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사회적 차별을 당할 위험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위원회

3.153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의 일부 분쟁 영향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나 정부가 설립한 '아만 지르가(aman jirga, 평화위원회)'라 불리는 지역 의회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같은 무장단체에 대항하는 활동을 돕고 있다. 안보생계연구컨소시엄(Secure Livelihoods Research Consortium)에 따르면, 평화위원회 위원들은 안보 문제를 다루고 지역 평화를 조성하며 법정 외 중재에 관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군이나 경찰에 의해 임명되었다. 때로는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 명칭과는 달리, 평화위원회의 임무는 무장 세력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부터 무장 부족 민병대로서 무장단체와 직접 교전을 벌이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3.154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을 포함한 무장단체들은 역사적으로 평화위원회 위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이 더 이상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참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평화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소수의 무장 세력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다만 국제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사망 사고 사례로, 2022년 9월 평화위원회 지도자 이드리스 칸(Idrees Khan)과 그의 경호원 2명이 탑승한 차량이 급조폭발물(IED)을 밟아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스와트 계곡(Swat Valley)에서 발생한 주요 폭발 사건 중 하나였다.

3.155 지역 주민들은 평화위원회의 폭력 행사와 인권 침해를 비난해 왔다. 일례로 2024년 4월 티라(Tirah) 주민들은 바자르-자카켈(Bazaar-Zakhakhel) 평화위원회 소속 무장 대원 24명이 '마약 거래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티라 지역에 진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평화위원회는 주민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원로들에게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며 지역 관습과 전통을 위반했다. 바자르-자카켈 평화위원회는 금지 단체인 라슈카르-이-이슬람(Lashkar-i-Islam)의 분파로 알려져 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단체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테러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바 있다.

3.15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평화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들이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적 차별을 겪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이 파키스탄 내 여타 파슈툰족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로부터 폭력이나 초법적 살해를 당할 위험도 낮다고 분석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평화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들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외부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장단체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국내 이주 참조).

시위자

3.157 헌법 제16조는 모든 시민은 공공질서를 위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제한을 따르는 조건 하에, 비무장 상태로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대가 4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상 불법 파업, 피켓 시위 및 기타 유형의 시위는 '시민 소요'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할 경우 파키스탄 「형법(1860)」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3.158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소수자, 노동조합, 직능단체, 학생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집단이 집회의 권리를 빈번하게 행사한다. 대규모 시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신성모독이나 기타 종교적 쟁점과 관련된 시위는 신속하게 광범위한 지지를 결집해 때로 폭력 사태로 비화되기도 한다(종교, 시민 소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참조). 이 외에도 세금 문제, 연료·물·밀·가스 등 생필품 부족, 강제 실종, 투표 조작,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사안을 주제로 대규모 시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159 파키스탄 당국이 시민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항상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3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NCHR)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개최된 858건의 집회 중 최소 392건에서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부당하고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개최된 503건의 집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집회의 12%에서 이른바 '국가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당국이 시위자들을 구금하고 기소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형법 조항을 원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3.160 파키스탄 정부는 수만 명의 지지자가 참여했던 임란 칸(Imran Khan) 체포 항의 시위(2023년 5월 9일) 이후, 정부 조치나 군부를 비판하는 공개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파키스탄정의운동(PTI) 참조). 경찰은 2023년 5월 9일 시위 당시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하고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해당 시위 이후 수주에 걸쳐 4,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칸 전 총리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적법 절차와 법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161 2023년 12월에는 수백 명의 여성이 젊은 발루치 남성들의 초법적 살해에 항의하기 위해 '발루치 대장정(Baloch Long March)'에 참여했다. 이들은 발루치스탄주 투르바트(Turbat)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약 1,600km를 행진했다. 2023년 12월 17일 펀자브주에서 대장정 참가자 최소 20명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행렬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12월 20일,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다음 날인 12월 21일, 경찰은 이슬라마바드 시위대에 대해 2건의 최초정보보고서(FIR)를 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자 300명이 체포되었다.

3.162 2023년 12월 23일, 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길기트-발티스탄(GB)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스카르두(Skardu), 길기트(Gilgit), 훈자(Hunza), 나가르(Nagar) 등지에서 수천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와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해당 지역 수니파 무장단체들의 지속적인 반시아파(anti-Shi'a) 종파 폭력에 항의하며 길기트-발티스탄(GB) 전역에서 수개월간 이어져 온 평화 시위의 연장선에 있었다. 또한 2024년 7월과 8월 사이에는 무역 관련 시위가 발생하여 카라코람 고속도로(Karakoram Highway) 일부 구간과 파키스탄-중국 국경의 접근이 차단되기도 했다.

3.163 2024년 2월 8일 총선 이후, 투표 조작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당원이 체포되었다. 국제 언론은 일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막대기를 휘둘러 시위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대변인은 2024년 3월, 시위 도중 체포된 인원의 대다수가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9명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소속 국회의원이 추가로 체포되었으며, 해당 집회는 최루탄을 동원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2024년 10월 4~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규모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주도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은 임란 칸을 비롯한 당 지도부 63명과 활동가 3,000여 명에 대해 선동, 테러,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최초정보보고서(FIR)를 등록했다.

3.164 2024년 5월 10일,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여 밀가루 가격 인하와 수력 발전 생산 원가 수준의 전기 요금 책정을 요구했다. 5월 13일에는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합동 아와미 행동 위원회(JAAC)가 주도한 시위대와 준군사조직인 레인저스(Rangers)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민간인 3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시위대 측은 레인저스가 자신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고 진술했다.

3.165 2024년 7월 24일, 과다르(Gwadar)에서 발루치스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보안기관의 강제 실종 행위에 항의하는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7월 29일 시위대 측은 현지 언론을 통해 발루치스탄 전역에서 이루어진 당국의 급습으로 300명 이상의 시위자가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자들이 경찰차로 강제 연행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이러한 무더기 체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군 대변인은 같은 날 과다르 시위 과정에서 군인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6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3.166 2024년 11월 26일, 4만 명 이상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시위자들이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모여 임란 칸의 석방을 요구했다. 보안군은 이슬라마바드 중심부에 진입한 2~3천 명의 시위자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진압 작전 과정에서 시위자 4천 명이 구금되었으며 6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3.167 2025년 3월 24일, 카라치(Karachi) 경찰은 발루치족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표적 공격에 항의하며 카라치 프레스 클럽(Karachi Press Club)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던 발루치통합위원회(Baloch Yakjehti Committee, BYC) 구성원들을 다수 체포했다. 체포된 인권 활동가 중에는 저명한 활동가인 사미 딘 발루치(Sammi Deen Baloch)도 포함되어 있었다(발루치족, 시민사회 참조).

3.168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시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위 양상에 따라 시위대, 경찰, 군부에 의해 다양한 수준의 폭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정부나 군부의 민감한 사안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인물들이 괴롭힘, 체포, 투옥과 같은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시위를 주도하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소속 시위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단순히 시위에 참가하는 일반 참가자가 직면하는 공적 차별 위험은 괴롭힘이나 일시적 체포 형태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본다. 또한 특정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폭력이나 국가 지원 폭력(state sponsored violence)의 강도는 시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화적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폭력 위험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시위자가 단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지는 않지만, 소속된 집단이나 시위의 주제에 따라서는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인종/국적, 시민사회,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 참조).

관심 집단

시민사회 – 활동가, 인권 옹호자, 변호사 포함

3.169 파키스탄의 정치적 환경은 현지 시민사회단체(CSO)와 국제비정부기구(INGO)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다. 이는 당국이 이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CSO)와 국제비정부기구(INGO)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등록법(Societies Registration Act, 1860)」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등록 절차는 국가 안보 유지 및 외세 개입 억제라는 명분 아래,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수년간 지속된 강력한 규제로 인해 파키스탄 내 시민사회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3.170 2015년 10월 1일,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비정부기구(INGO) 등록 정책을 도입하여 내무부 등록과 운영 허가 취득을 의무화했다. 등록 신청은 다부처 위원회가 검토하며, 내무부는 전략적·안보적·경제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제비정부기구(INGO)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민감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도 급격히 좁아졌다. 또한 시민사회단체(CSO) 규제 정책에 따라 각 조직은 외국 자본이나 물품을 사용하기 전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특정 지역 활동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 소식통은 정책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CSO)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2016년 이후 전체 단체의 약 60~70%가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3.171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2024년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협박, 괴롭힘, 감시를 당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비정부기구(INGO) 규제를 통해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 단체들의 정상적인 등록과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소식통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매우 불투명하고 단체들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자금 조달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뚜렷한 설명 없이 등록 신청을 빈번히 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3.172 시민사회단체(CSO)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14개 이상의 정부 부처로부터 동의서(NOC)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 명단'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도입한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를 악용하여, 시민사회단체(CSO)의 정당한 활동에까지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자들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무부는 시민사회단체(CSO)에 대한 동의서(NOC) 발급과 등록 승인 또는 거부 결정 권한을 주로 정보 보안 기구에 위임했다. 현지 소식통은 시민사회단체(CSO)들이 동의서(NOC) 처리를 위해 뇌물을 지불해야 하거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동의서(NOC) 거부 또는 미발급으로 인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미준수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CSO)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기도 했다. 특히 인권 옹호와 같은 소위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단체는 동의서(NOC)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2025년 현재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 외부 지역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지연·거부되는 방식으로 이동의 자유 또한 크게 제한받고 있다.

3.173 인권 활동가들은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신디족 권리 활동가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히다야툴라 로하르(Hidayatullah Lohar)는 2024년 2월 신드주의 캄바르 샤다드코트(Qambar Shahdadkot) 지구에서 신원 불상의 괴한 2명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3.174 인권 활동가들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강제 실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전문가들은 2021년 12월, 저명한 인권 옹호자이자 소수자 권익 활동가인 이드리스 카탁(Idris Khattak)이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드리스 카탁은 2019년 11월 보안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7개월간 강제 실종 상태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문 위험에 노출되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파키스탄 전역에서 수백 명이 강제 실종되었다(정치적 견해 참조). 2024년 7월에도 프론트라인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는 하피즈 발루치(Hafeez Baloch), 시마 발루치(Seema Baloch), 마자이브 발루치(Mahzaib Baloch) 등 활동가들이 과다르에서 강제 실종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3.175 인권 활동가와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군부 및 보안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 위협을 받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납 마자리-하지르(Imaan Zainab Mazari-Hazir)가 반란 선동 및 대테러법(1997)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또한 2022년 8월, 길기트-발티스탄(GB)에서는 술탄 마다드(Sultan Madad)와 하스나인 라말(Hasnain Ramal)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공질서 유지 조례(1960)에 따라 체포되었다. 현지 소식통은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파키스탄 내 인권 옹호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전했다.

3.17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인권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CSO) 관계자들이 보안군에 의한 괴롭힘, 체포, 투옥,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 등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위주의 활동을 하며 발언을 자제하는 단체 구성원들의 경우, 그 활동의 은밀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 수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시민사회단체(CSO) 구성원, 활동가, 변호사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차별 위협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언론과 언론인

3.177 헌법 제10조는 언론과 언론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제한이 뒤따른다. 파키스탄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은 정기적으로 언론 기관에 구체적인 검열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파키스탄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은 발루치스탄 지역 보도를 비롯하여 부패,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 임란 칸, 군부, 파슈툰보호운동(PTM), 종파 폭력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독립적인 방송, 인쇄, 전자 매체를 보유한 활기찬 언론 환경을 자랑해 왔으나, 현지 소식통은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 최근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전했다. 언론인들은 당국의 협박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회피하라는 강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52위를 기록했으며, 언론 상황은 '매우 심각' 단계로 분류되었다.

3.178 「언론인 및 언론 전문가 보호법(Protection of Journalists and Media Professionals Act, 2021)」은 언론인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인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 양식'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파키스탄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이 설정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이들은 '반란 선동' 혐의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무거운 행정적·형사적 처벌에 노출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 언론인의 개인 정보가 당국에 파악되어 있으며, 군부와 보안군은 파키스탄전자미디어규제청(PEMRA)과 별개로 정기적인 언론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의 지침에 반하는 보도를 한 언론인들은 반정부 또는 반군부 성향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경고 전화를 받기도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택이나 직장으로 살해 협박 편지를 받거나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으며, 파키스탄 형법(1860)상 '반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일례로 저명 언론인 아사드 알리 투르(Asad Ali Toor)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관련 법적 절차를 보도한 후 대법원을 겨냥한 악의적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2024년 2월 연방수사청(FIA)에 체포되었다.

3.179 언론인들은 민감한 주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강제 실종이나 초법적 살해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정치적 견해 참조). 2024년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파키스탄을 '세계에서 언론인에 대한 위협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며, 매년 3~4건의 살해 사건이 부패나 밀매 관련 보도와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3월 14일, 인권 보도에 주력하던 잠 사기르 아메드 라르(Jam Saghir Ahmed Lar) 기자가 미상의 공격자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2023년 8월에는 신드주 수쿠르(Sukkur)에서 잔 모하마드 마하르(Jan Mohammad Mahar) 기자가 피살되었다. 또한 2022년 6월 카라치(Karachi)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보도하던 나피스 나임(Nafees Naeem)과 아르살란 칸(Arsalan Khan) 기자가 각각 납치되어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기도 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실종과 살해 위협으로 인해 대다수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강한 자기 검열을 수행하며 정부의 편집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3.180 민감한 문제를 보도하거나 사회적·종교적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 언론인들은 성폭력 위협, 신상 털기, 사적 이미지 유출을 포함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빈번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괴롭힘에 직면해 왔으며,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공격 중 일부가 특정 정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여성 언론인들은 당국으로부터 접근을 받아 '나쁜 여자'나 '서구의 요원'이라는 매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도 태도를 바꾸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안받기도 한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 언론인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남성보다 더 가중된 위협과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참조).

3.181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에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괴롭힘, 체포, 투옥,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 등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성 언론인의 경우, 남성 동료들이 겪는 일반적인 위협에 더하여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위협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단순히 해당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더라도 이들이 일반 대중에 의해 사회적 폭력을 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인터넷 자유, 소셜 미디어 사용자, 블로거

3.182 파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통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차단 또는 필터링, 검열, 추적 기술을 정기적으로 사용 중이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3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파키스탄을 '자유롭지 않음(Not Free)' 단계로 평가하며, 당국이 비판적인 온라인 발언을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 차단, 플랫폼 접속 제한, 체포 및 가혹한 유죄 판결을 일상적인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3.183 파키스탄통신청(PTA)은 2023년 1월, '불법'을 이유로 110만 개 이상의 링크와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90만 개 이상은 '품위와 도덕성'을 근거로 차단되었으며, 그 외 '이슬람의 영광', '종파적/혐오 발언', '파키스탄의 국방' 등의 명분이 차단 근거로 사용되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가 차단 목록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 내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단편적인 사례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2월 총선을 전후하여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 유권자와 시위자 동원에 활용하던 X(구 트위터)가 장기간 차단된 사실이 널리 보도되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당국이 인터넷 트래픽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콘텐츠를 필터링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84 온라인 활동가와 블로거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8월, 경찰은 치안판사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소리(VOA)' 파슈토어 방송인 디와(Deewa) 소속 파야즈 자파르(Fayaz Zafar) 기자를 체포했다. 당국은 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을 비방하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에는 연방수사청(FIA)이 펀자브주에서 국가 기관을 비방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한 혐의로 8명을 무더기로 체포하기도 했다.

3.185 「전자 범죄 방지법(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2016)」은 당국이 온라인 활동가와 블로거를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법적 수단이다. 해당 법은 군부,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이른바 '가짜 뉴스' 유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이 법이 당국이 설정한 암묵적인 '레드라인'을 넘으려는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4월 11일, 아잠 나지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법무장관은 샤리프(Sharif) 총리가 해당 법의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3.186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NCHR)는 2024년 7월 25일 기준,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된 인원이 767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1년 9명, 2022년 64명, 2023년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사건의 증가는 「전자 범죄 방지 개정법(2018)」 시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등록된 신성모독 사건의 대부분은 연방수사청(FIA) 사이버범죄부서가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시하고 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여성 요원이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신성모독 활동을 유도한 뒤 체포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전술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87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소셜 미디어에 정부나 군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온라인 활동가와 블로거들이 괴롭힘이나 체포 등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여성 활동가 및 블로거의 경우, 남성들이 겪는 일반적 위험 외에도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위협이라는 가중된 공적 차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만 파키스탄 내 소셜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지도가 낮은 사용자의 수위 낮은 논평이 당국의 관심을 끌 가능성은 작다. 대다수 사용자는 온라인 콘텐츠가 감시·규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큰 문제없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블로거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분석한다.

보건 종사자

3.188 파키스탄폴리오퇴치프로그램(Pakistan Polio Eradication Programme)에 따르면, 당국은 연간 최소 35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3억 회분 이상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 인력을 직접 겨냥한 무장단체의 폭력 공격은 드문 편이다. 분쟁지역 보건의료 보호연합(SHCC)은 2022년 파키스탄 전역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 요원 3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연평균 2~3명의 요원이 공격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카이베르파크툽와주의 고립된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다. 국내 언론은 2024년에도 해당 주에서 총 3명의 요원이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도했다.

3.189 카이베르파크툽와주에서는 과거 소아마비 백신을 '비이슬람적'이거나 '서구의 가족계획 사업'으로 오인하는 정보 왜곡이 만연했으나, 공공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낙인이 완화되면서 보건 요원 대상 폭력 사건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CSO)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가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한 결과, 백신 접종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한다는 '파트와(Fatwa)'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의 특정 민족 집단이 지역 치안 불안과 실형민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집단 거부(boycott)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2024년 12월, 국제 언론은 경찰 호위를 받는 접종팀이 보안군을 위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사면서 무장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3.19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 요원을 포함한 보건 종사자들이 공적 차별을 겪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들이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낮게나마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카이베르파크툽와주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해당 지역 보건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3.191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1860)」은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제377조를 통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2023년 7월 23일 기준). 실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간 성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뇌물이나 성적 대가를 갈취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반면, 제377조가 여성이나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형법 개정(강간 범죄)법(Criminal Law (Amendment) (Offense of Rape) Act, 2016)을 비롯한 파키스탄의 강간 관련 법률은 성별이 고정되어 있어,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동성 간의 강간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후두드 법령(1979)」 역시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라 혼인 외 성교를 처벌하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동성 간 행위에 적용하거나 동성애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3.192 파키스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힌 게이 혹은 레즈비언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절연, 강제 이성혼, 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사회에서 동성애는 엄격한 문화적 금기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형사 기소의 위험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도시 지역의 상류층 공동체 사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적인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기도 했으나, 부유층 성소수자들조차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으며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는 부모에 의해 이성 혼인을 강요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3.193 파키스탄에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한 지원 단체가 일부 존재하지만, 당국의 감시와 괴롭힘을 피하고자 대개 비밀리에 운영된다. 현지 소식통은 보안기관이 시민사회단체(CSO)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이 '비이슬람적'이고 '서구 지향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과 협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연례 '여성 행진(Aurat March)'과 같은 행사들이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거나 관련 활동가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집회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194 2023년 국가 인구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구가 2만 33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파키스탄 통계청은 전통적인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제 수치가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내 트랜스젠더 총인구를 2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사이로 추정한다. 파키스탄 사회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정체성을 지칭하는 '과자 시라(khwaja sira)' 또는 '히즈라(hijra)'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 문화가 존재한다. 일례로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는 과자 시라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트랜스젠더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편자브주 교육부는 2021년 7월 물탄에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최초의 정부 운영 학교를 개교했으며, 주 내 17개 지구에서는 가정 폭력을 겪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조직이 활동 중이다.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차별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으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3.195 「트랜스젠더 권리보호법(Transgender Persons Protection of Rights Act, 2018)」은 트랜스젠더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발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했다. 또한 이 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보건 서비스 및 공공장소 접근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2023년 5월 19일, 연방샤리아법원(FSC)은 이 법의 핵심 조항들이 '이슬람에 반한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법률상 '트랜스젠더'의 정의가 간성, 내시, 과자 시라, 트랜스젠더 남성 및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으며, 각 정체성은 이슬람 내에서 뚜렷한 지위와 신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방샤리아법원(FSC)은 신이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했다는 구란의 구절을 근거로 이슬람이 그 외의 성이나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정의를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3.196 2023년 4월 4일, 트랜스젠더 관련 6개 법안이 상원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들은 이슬람의 명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쿤사인(권리 보호)법안(2023)」으로 통합되었다. 「쿤사인법안(2023)」은 기존에 간성(khunsas), 내시, 트랜스젠더 남녀, 과자 시라 등을 포괄했던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쿤사'로 대체함으로써, 남녀라는 이분법으로 분류 가능한 특정 생물학적 간성 특성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려 한다. 또한 이 법안은 간성 또는 트랜스젠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5명의 의사로 구성된 의료팀 앞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 「쿤사인법안(Khunsas Persons Bill, 2023)」은 아직 국회에서 채택되거나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197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 지역 트랜스젠더 조직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파키스탄 내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및 학대 사건은 총 1,046건에 달했다. 특히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같이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강간, 소위 '명예살인', 사회적 폭력 사례가 언론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트랜스젠더 대상 폭력에 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나,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9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파키스탄 최초의 트랜스젠더 뉴스 앵커인 마르비아 말릭(Marvia Malik)이 라호르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으나 생존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3.198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트랜스젠더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2021년 이후 일부 개선되었다고 전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심각한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성노동에 종사하거나, 구걸 또는 축제나 결혼식에서 춤을 추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은 대중에게 매우 노출되기 쉬운 특성상 신체적·성적 폭력에 취약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용 기회 상실이나 소득 활동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트랜스젠더들은 보건 의료, 치안 서비스 및 기타 정부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높은 장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 내 의료 여건상 질 성형술과 같은 전문적인 성별 확정 수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환 적출술이 성별 정정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의료적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199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LGBTQIA+)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물리적 감시, 불충분한 국가 보호, 체포, 불공정한 재판 등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이 대중적 비난과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들은 폭력과 차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종종 가족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숨기기도 한다.

3.20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불충분한 국가 보호 및 정부 서비스 접근 시 장벽과 같은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공평한 고용 기회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성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할 위험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여성

3.201 헌법 제25조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는 여성이 국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22년 파키스탄 정부는 젠더기반폭력(GBV) 해결과 성평등 증진 및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국가 젠더 정책 체계'를 발표했다. 당시 임란 칸 전 총리는 이 체계가 모든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가 이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정책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식통은 행정 역량 부족과 사회문화적 태도 장벽으로 인해 관련 법률과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거나 존중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국가여성지위위원회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가 젠더기반폭력(GBV) 전담 법원을 설립하는 등 성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고도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퇴행적 규범 및 성 고정관념이 여성과 소녀들의 이동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3.202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여성의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정치적 권한 부여 등 모든 지표를 종합했을 때 146개국 중 145위를 차지했다. 2023년 파키스탄 여성 지위에 관한 국가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1%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39%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교육 측면에서도 15세~64세 여성의 53%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특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아, 특히 농촌 지역 여성들이 생식 보건과 산전·후 관리 및 유방암 치료 등 필수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2024년 총선 당시 여성 투표자 수가 남성보다 약 1천만 명 적게 집계되는 등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며, 여성 후보에 대한 성별 편견이 공적 활동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203 파키스탄 사회에서 여성의 대외 활동은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제약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격리하는 이슬람 관행인 '푸르다(purdah)' 준수로 인해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라호르, 카라치, 이슬라마바드와 같은 대도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만, 보수적인 농촌 공동체 여성들은 더 심한 제약을 받는다.

공공장소와 교육 기관 내에서 여성과 소녀를 향한 성희롱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부유층 여성들이 공직 고위직에 진출하기도 하나, 이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부족 및 농촌 지역의 전통적 장벽은 여성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204 파키스탄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혼인 및 이혼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성의 권리는 제한적이며, 법적 혼인 연령 또한 남성은 18세인 반면 여성은 16세(단, 신드주는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부간 강간은 현행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정법원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혼 소송은 대체로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단, 편자브주는 예외적으로 신속히 처리됨). 아울러 무료 법률 지원이 부족하며, 소송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자녀 양육권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혼한 여성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는 등 심각한 문화적 낙인을 경험하며, 재혼하지 말라는 사회적 압박과 동시에 이혼 결정에 대한 전남편 및 친정 가족의 위협과 학대에 노출되기도 한다.

3.205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등록 시, 여성은 반드시 아버지나 남자 형제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신분 증명 참조). 이로 인해 가까운 남성 친척이 없는 이혼·별거·미혼 여성들은 주거지 임대,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및 신용 확보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현지 소식통은 여성들이 남성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 임대 주택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부족 지역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상속권을 갖지 못했으며, 관련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해당 지역의 부족 원로들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정부 관리들을 향해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며 지역 문화 규범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3.206 파키스탄에서 젠더기반폭력(GBV)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나, 관련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유병률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미비로 인해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파키스탄 여성의 32%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도움을 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3년 상반기 4개월 동안 편자브주에서만 1만 365건의 여성 폭력 사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사회개발기구(SSDO) 등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5월에서 8월 사이 최소 5,551명의 여성이 납치되었고, 2,818명이 신체적 폭행을, 304명이 강간을 당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다. 현지 소식통은 가정 폭력이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경찰조차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3.207 젠더기반폭력(GBV)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파키스탄 국회는 형법(개정)(강간 범죄)법(2016)을 통과시켜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법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과 DNA 검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 생존자의 진술을 기록할 때 반드시 여성 경찰관이 입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 보호법(2006)」은 여성 납치, 인신매매 및 강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산(酸) 통제 및 산 범죄 방지법(2011)」은 산 테러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재활과 보상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실제 시행 효과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산(酸) 통제 및 산 범죄 방지법(2011)」은 비교적 실효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산 공격 사건은 약 80% 감소했다. 반면 「형법(개정)(강간 범죄)법(2016)」과 「여성 보호법(2006)」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 유죄 판결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지 소식통은 2024년 기준 신고 사건의 전국 기소율은 5%에 불과한 반면, 무죄 선고율은 64%에 달한다고 밝혔다.

3.208 연방 및 주 정부는 주요 도시에 젠더기반폭력(GBV) 전담 법원과 여성 전담 경찰서를 설치하여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21년 5월, 이슬라마바드 경찰은 24시간 핫라인을 갖춘 '성 보호 전담반(Gender Protection Unit)'을 개설했으며, 이 조직은 운영 첫 3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지 소식통은 시민사회단체(CSO)들이 경찰을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GBV)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실무 대응 역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여전히 젠더기반폭력(GBV)을 사적인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등 감수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과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젠더기반폭력(GBV)의 책임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거나 신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 최초정보보고서(FIR)가 접수되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3.209 학대를 일삼는 배우자를 떠나 이주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수단과 개인 및 가족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가정을 떠난 여성은 가중된 젠더기반폭력(GBV) 위험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 운영 여성 쉼터(darul aman)는 입소와 퇴소 시 통상적으로 법원 명령이 필요하며, 민간 및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쉼터는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대개 피해자에게 학대자에게 돌아가라고 압박하며, 일부 여성은 가정을 떠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하기도 한다. 일례로 2023년 9월, 나일라 비비(Naila Bibi)는 남편 아크타르 알리(Akhtar Ali)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어린 아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2월, 카라치(Karachi) 법원이 님라(Nimra)라는 여성에게 유리한 이혼 합의 판결을 내렸으나, 전 남편 아와이스 카마르(Awais Qamar)가 사건 종결 직후 그녀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여성들은 「펀자브 여성폭력방지법(Punjab Protection of Women Against Violence Act, 2016)」에 따라 펀자브주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판사가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승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10 파키스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간주되는 친척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지속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명예 관련 범죄의 주된 원인은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을 위반하는 행동에 있다. 여기에는 여성의 복장·취업·교육에 대한 자율적 선택, 중매결혼 거부, 가족 동의 없는 결혼, 이혼 청구, 강간 및 성폭행 피해, 혼전 또는 혼외 이성 교제 및 성관계(단순 의혹 포함) 등이 포함된다. 젊은 남성이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명예살인의 위험이 실재할 경우,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더라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211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2024년 최소 346건의 '명예살인' 사건을 기록했다. 현지 소식통은 특히 발루치스탄과 카이베르파크툽와주에서 매년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명예 범죄로 목숨을 잃는다고 전했다. 2023년 3월 펀자브주 토바 텍 싱(Toba Tek Singh)에서는 무하마드 파이살(Muhammad Faisal)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동생 마리아 비비(Maria Bibi)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남동생 셰바즈(Shehbaz)는 이 과정을 촬영했다. 일주일 뒤 영상이 공개되면서 자연사로 보고됐던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고 경찰은 가족들을 체포했다. 2023년 10월 카라치에서는 한 남성이 '나쁜 사람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제수(동생의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친동생까지 살해한 뒤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3.212 파키스탄 법률은 「여성 보호(형법 개정)법(Protection of Women (Criminal Laws Amendment) Act, 2006)」 및 「형법(개정)(명예를 명분으로 한 범죄)법(Criminal Law (Amendment) (Offences in the name or pretext of Honour) Act, 2016)」을 통해 소위 '명예살인'과 전통적 관행을 명분으로 저질러지는 여타 폭력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명예를 명분으로 한 범죄법(Offences in the name or pretext of Honour Act, 2016)」은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이 뇌물을 공여하여 수감을 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범죄가 '명예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기록될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상속인이 이슬람법적 관행인 '디아(diya, 보상금)'를 지급받음으로써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명예살인 사건이 자살이나 사고로 위장 보고되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지 소식통은 정부가 이러한 수사 당국의 오분류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않는 한 대체로 묵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3.213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부족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지르가(Jirga) 의회가 소위 '명예살인'을 명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2023년 11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히스탄(Kohistan) 지구에서 지르가 원로들의 명령에 따라 18세 여성이 친부와 삼촌에 의해 총격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사진이 국제 언론에 확산되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파키스탄 정부에 "가부장적 폭력을 처벌 없이 영속화하는 평행 사법 체계인 지르가 및 부족 의회의 초법적 권한을 즉각 억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전에 이미 이러한 부족 의회의 운영이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따른 파키스탄의 국제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사법부 참조).

3.214 파키스탄에서는 조혼과 강제 혼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등 종교적 소수 집단의 소녀들이 이러한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기독교도, 힌두교도, 강제 개종 참조). 유니세프(UNICEF)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 소녀의 31%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은 16세(신드주는 1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슬람 율법상 사춘기에 도달한 소녀의 혼인을 허용하는 관습이 우선시되기도 한다. 강제 혼인은 엄연한 형사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24년 4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강제 혼인이 종교법을 명분으로 법원에 의해 승인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피해 소녀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납치범의 수중에 두는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아동혼, 조혼, 강제 혼인은 그 어떤 종교적·문화적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3.215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특정 부족 지역에서는 남성 구성원이 어린 소녀에 대한 혼인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주장하는 '가그(ghag)'라는 관습이 시행된다. 가그는 복수나 정치적 목적으로 혼인을 강요하기 위해 집 대문에 총알을 발사하거나 사자를 보내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소녀나 그 가족의 동의는 배제되며, 가그가 선언된 소녀는 해당 남성과 혼인하지 않는 한 다른 남성과 결혼할 기회를 박탈당해 평생 사회적 낙인 속에 살게 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의회는 2013년 이 관행을 금지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현지 소식통은 부족 지역에서도 조혼과 강제 혼인이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다고 전했으나, 여전히 남성 간의 혈족 불화나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제물로 삼는 '바달-에-술라(badal-e-sulah)'라는 관습에 의해 지르가 의회가 강제 혼인을 명령하는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3.216 파키스탄에는 '여성 성기 절제' 또는 '절단'(FGM/C) 관행을 금지하는 공식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관행은 시아파 이스마일리파의 분파인 다우드 보흐라(Dawoodi Bohra) 공동체 내부로 국한되어 행해진다. 이 공동체에서는 주로 7세 소녀를 대상으로 '카프드(khafd)' 또는 '카트나(khatna)'라 불리는 시술을 시행하는데, 이는 음핵의 포피를 단축하거나 끝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국제 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다우드 보흐라 여성의 50~90%가 이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최대 1,000명에 달하는 규모다. 시술은 극도의 보안 속에 비밀리에 행해지며 공동체 내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된다.

3.217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가의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재산권, 가족법, 사법 절차 전반에서 공평한 접근권이 결여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기반폭력(GBV)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우드 보흐라 공동체의 소녀들은 여성 성기 절제(FGM/C)라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공동체로부터의 배척 등 사회적 차별을 겪을 수 있다. 여아 및 여성의 강제 혼인 위험은 대체로 낮고 조혼 위험은 중간 수준이나,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의 소녀들은 두 가지 위험 모두 중간 수준의 상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의 소수자 여성과 소녀들은 더욱 가중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인종/국적, 종교, 아동 참조).

아동

3.218 헌법 제11조는 공장, 광산 및 기타 위험한 고용 환경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아동 고용 금지법(KP Prohibition of Employment of Children Act, 2015)」 및 펀자브 벽돌 가마 분야 아동 노동 금지 조례(Punjab Prohibition of Child Labour at Brick Kilns Ordinance, 2016) 등 주 단위의 법률을 통해서도 아동 노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동 노동 사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급 가사 노동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언론은 2023년 기준 파키스탄 전역의 벽돌 가마와 농업 분야에서 10세에서 14세 사이 아동 70만 명 이상이 노동에 종사했다고 보도했다. 2017-18년 파키스탄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7세 아동의 13.7%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4%는 헌법상 금지된 위험 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글로벌 노예 지수는 아동을 포함하여 약 230만 명의 파키스탄인이 노예 상태에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이 채무 노예제에 있다고 추산했다.

3.219 주요 언론 및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 성적 학대 및 성 착취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2022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아동 성적 학대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간 약 55만 명의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하다. 일례로 2024년 3월 파이살라바드(Faisalabad)에서는 12세 소년 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성직자 마울라나 아부바카르 무아비아가 체포되었고, 5월 신드주에서는 9세 소년을 성추행한 모스크 교사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일부 부족 지역에서는 어린 소년을 표적으로 한 소위 '관습적 강간(customary rape)'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 권리 활동가 투파일 무하마드 박사는 2022년 분석을 통해 아동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피해 가출한 아동들이 거리에서 더 심각한 폭력과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220 형법 개정법(Criminal Law Amendment Act, 2016)은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 보호 조치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221 「후두드 법령(1979)」에 따라 혼인 외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로 인해 혼외 출생 아동에게는 극심한 사회적 낙인이 부여된다. 부친의 이름을 증명할 수 없는 혼외자는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보육원 등 공식적인 국가 후견 기관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등록을 통한 신분 증명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신분 증명 참조).

3.222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성년자라는 지위 자체가 위험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다만, 남녀 아동 모두가 국가의 불충분한 보호와 가정 폭력·성적 학대·착취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재라는 형태로 중간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아동이 겪는 폭력 위험 또한 중간 수준이나, 빈곤층, 지리적 고립, 여성, 장애, 혼외 출생, 고아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은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본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인신매매, 인종/국적, 종교, 체별 섹션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애인

3.223 2023년 국가 인구조사 결과 파키스탄 내 장애인 인구는 744만 8,574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통계 수치는 조사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파키스탄 법률상 장애는 질병, 사고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보행이나 동작 수행 등 하나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서명국으로서, 장애인을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입어, 여러 사회적·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국제 기준을 따른다.

3.224 파키스탄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한 「장애인 권리법(Disability Rights Act, 2022)」 등 여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휴머니티엔inkl루전(HI)은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의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3.225 파키스탄 사회에서 장애를 대하는 문화적 시각은 주로 '동정'에 기반한다. 장애인은 종종 '신의 고통을 짊어진 존재'로 인식되며, 일부 가족은 장애 아동의 출생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신앙의 시험으로 여겨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휴머니티엔inkl루전(HI)은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여 가족들이 장애 아동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일상적으로는 '불구'나 '정신 지체'와 같은 경멸적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남성을 돌보게 할 목적으로 여성을 혼인시키는 '간병을 위한 혼인' 관습이 존재하며, 장애가 있는 본처를 대신해 가문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일부다처제 형태의 재혼을 추진하기도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성적 학대 위험에도 더욱 취약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과 행정 역량은 장애가 있는 젠더기반폭력(GBV) 생존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보건·경찰·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 지침이 결여되어 있다.

3.226 장애인은 고용 시장에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정당한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는 주체라기보다 의료적 지원이나 자선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고용 및 재활) 조례(1981)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전체 인력의 최소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휴머니티엔inkl루전(HI)의 보고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이행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공공 부문 등에서의 고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의존해 왔다. 일례로 신드주의 시각 장애인 아메드 칸(Ahmed Khan)은 2018년 동료 40명과 함께 청원을 제기한 끝에 2020년 신드 고등법원(Sindh High Court)에서 승소하여 정부 일자리를 얻었으며, 아프타브 알리 무게리(Aftab Ali Mugheri) 역시 2년여의 법적 투쟁 끝에 2023년 7월 주정부 부서 임용 발령을 받아냈다. 다만 파키스탄맹인협회(신드 지부) 사무총장은 당국이 장애인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 발령을 내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3.227 파키스탄자폐증협회(Pakistan Autism Society)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포함한 신경다양성 사례는 파키스탄 내에서 흔하게 보고된다. 그러나 신경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매우 낮으며, 당사자들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식 유병률 데이터는 부재하나, 파키스탄자폐증협회는 2020년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이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이들은 종종 신으로부터 '처벌의 징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등 가혹한 사회적 낙인에 직면한다. 가족들은 수치심 때문에 아동을 외부로부터 숨기기도 하며, 당사자들 역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두려워 지원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2020년 임상심리학 및 신경심리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오진하거나 관리하지 못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신경다양성 아동을 둔 가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도 턱없이 부족하다.

3.228 파키스탄의 특수 교육은 대체로 질 낮은 특수 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휴머니티엔inkl루전(HI)은 2022년 이러한 분리 교육 환경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슬라마바드주, 펀자브주, 신드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역을 통틀어 특수 학교는 약 330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교육 접근에 큰 장벽을 겪고 있다. 휴머니티엔inkl루전(HI)에 따르면 장애 아동의 최소 50%가 특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입학한 경우라도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3.229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적절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이라는 형태의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고용 거부, 직장 내 합리적 편의 제공 미비, 지역사회 배제 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빈도와 강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 농촌이나 소도시 거주자와 그 가족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장애인은 신체적·성적 학대 형태로 중간 수준의 사회적 폭력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여성, 아동, 빈곤층, 종교·민족 소수 집단에 속한 장애인은 이러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여성, 아동, 인종/국적, 종교 참조).

3.23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스스로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신경다양성으로 간주되는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적 차별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배제의 빈도와 심각성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이나 소규모 마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보충적 보호 신청

자의적 생명 박탈

초법적 살인

4.1 헌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보호법(Protection of Pakistan Act, 2014)」 제3조에 따르면, 보안군 장교는 폭탄 테러, 살인, 사이버 범죄, 특정 집단 대상 범죄 등 '지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자를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보안군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결 사살권을 행사할 수 있다.

4.2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보안기관이 초법적 살해를 포함하여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매년 수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CSO)인 인권보호(DHR)는 2023년 강제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3,120명 중 88명이 초법적으로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초법적 살해 피해자 중 소외된 인종 및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용의자들은 초법적 살해의 완곡어인 '조우 살해(encounter killing)'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조우 살해는 강제 실종된 용의자에게 가짜 무기를 쥐여준 뒤 특정 장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경찰이 이들을 살해하거나 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언론은 가해자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일부는 형사 기소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경찰이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초법적 살해 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4.4 발루치스탄주에서 인권 단체들은 정부 요원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납치, 고문한 후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하는 '살해 후 유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분리주의 용의자들과 발루치족 권리 활동가들이 초법적 살해의 가장 빈번한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발루치스탄의 언론인들 역시 민감한 사안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초법적으로 살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발루치족 참조).

4.5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는 2014년과 2017년 사이 군 주도 작전으로 8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책임성 결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국제 언론은 이후에도 조작된 교전 살해와 반무장 세력 작전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파슈툰족 참조).

4.6 펀자브주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경찰이 연루된 544건의 교전으로 용의자 612명이 사망했다. 일례로 2022년 기록된 154건의 교전 살해 사건 중 10건에 대해 사법 조사가, 44건에 대해 부서 내 감찰이 진행된 바 있다.

4.7 신드주에서 현지 소식통은 다수의 민간인과 신디족 민족주의자들이 반체제적 정치 견해를 가졌거나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초법적으로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23년 9월, 신디혁명군(SRA) 구성원 체포 작전 중 보안군의 물리적 행사로 인해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2023년 10월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신드주 정부는 이후 피해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2022년에 실종된 다수의 신디족 민족주의자가 나중에 고문 흔적이 남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4.8 파키스탄에서 강제 실종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다. 과거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 통합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실종은 2018년 임란 칸 정권하에서 더욱 빈번해졌으나, 2023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되었다.

4.9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2020년 5월, 강제 실종에 대한 '신고되지 않은 목시적 승인'의 책임을 물어 임란 칸과 세바즈 샤리프 전 총리에게 통지서를 송달하라고 연방 정부에 명령했다. 2022년 11월, 당시 과도 정부는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위원회를 구성해 실종자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자, 2024년 2월 시위대들은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하며 발루치스탄주 투르바트(Turbat)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대장정' 시위를 벌였다. 2024년 1월, 카지 파에즈 이사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모든 시민이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으나,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4.10 강제실종 조사위원회(COIED)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 사이 파키스탄에서 보고된 강제 실종 사건은 총 1만 78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실종자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표적은 무장 세력 용의자뿐만 아니라 활동가, 학생, 야당 정치인, 인권 옹호자, 언론인 등 광범위하다. 실종 기간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며, 일부는 초법적으로 살해당하기도 한다. 생환한 이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 소식통은 이들 대다수가 영구적인 장애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고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4.11 보안기관은 종종 실종자들에게 신분을 밝히며, 드물게 구금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다. 2022년 아프라시압 카탁 전 상원의원은 정보기관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면책 특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8월 개정된 「파키스탄 군법(Pakistan Army Act, 1952)」은 강제 실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개정안이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면책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만, 변호사와 판사들조차 보안군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 수임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4.12 발루치스탄주의 경우, 강제실종 조사위원회(COIED)는 2024년 1월까지 총 2,752건의 실종 사건을 기록했다. 인권보호(DHR)의 2023년 1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적 중인 실종자 82명 중 67명은 여전히 소재가 불분명하며, 12명만이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 활동가들은 2024년에도 분리주의나 민족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 활동가와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만연한 공포로 인한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었으며, 실종을 신고한 이들조차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4.13 유엔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UN WGEID)은 2024년 보고서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발루치스탄주에서 1만 4천 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나, 주 정부가 인정한 사례는 100건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발루치스탄 내각은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내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종자위원회(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설치를 승인했다. 해당 위원회는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와 현지 인권 단체들은 발루치스탄 실종자위원회 및 국가 강제 실종 조사 위원회가 실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비판하고 있다(발루치족 참조).

4.14 2011년부터 2024년 사이 강제실종 조사위원회(COIED)가 기록한 파키스탄 전체 실종 사례 1만 78건 중 3,485건이 카이베르파크툽주에서 발생했다. 인권보호(DHR)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에서 추적 중인 실종자 1,091명 중 121명은 석방되었으나 79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151명은 소재는 확인되었으나 발견되지 않았고 27명은 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실종자위원회는 카이베르파크툽주의 높은 실종률에 대해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쟁 상황,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피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파슈툽족 참조).

4.1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2023년 펀자브주에서 주로 야당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 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711건의 강제 실종 증거를 확보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2023년 10월 펀자브 대학교(Punjab University) 캠퍼스 내에서 실종된 파리드 후세인 발루치(Fareed Husain Baloch) 사례를 포함해, 라호르(Lahore)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발루치족 및 파슈툽족 학생들이 강제 실종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4.1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2023년 신드주에서 188건의 강제 실종 사건 증거를 기록했다. 인권보호(DHR)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신드주 내 실종자 중 134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고, 70명은 석방되었으며, 8명은 소재가 파악되었고 10명은 초법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소식통은 지난 20년 동안 신드주에서 수백 명의 활동가가 실종되거나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4.17 강제 실종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출마 후보와 정치인 및 그 가족,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등이 주요 표적이 되었다. 2023년 9월 지역 언론이 보도한 주요 고위급 실종 사례에는 전 국회의원 사다캇 알리 압바시(Sadaqat Ali Abbasi), 임란 칸의 전 고문 우스만 다르(Usman Dar), 파키스탄정의운동(PTI) 후보 압둘 카림 칸(Abdul Kareem Khan), 전 국무장관 파루크 하비브(Farrukh Habib)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총선 전후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치적 견해' 섹션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금 중 사망

4.18 「고문 및 구금 중 사망(방지 및 처벌)법(Torture and Custodial Death (Prevention and Punishment) Act, 2022)」은 정부 인사의 구금 하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NCHR)와 연방수사청(FIA)이 신고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4.19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2023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전국적으로 27명이 경찰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현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CSO) 역시 경찰 구금 중 발생하는 다수의 사망 사례를 보도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고문이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23년 1월 펀자브주 사히왈(Sahiwal) 지구에서 사르프라즈(Sarfraz)라는 남성이 경찰 구금 중 사망했을 당시, 유족은 고문을 주장했다으나 경찰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기록했다. 같은 해 8월 파이살라바드(Faisalabad) 지구에서도 펀자브 고속도로 순찰대(PHP)에 구금되었던 남성이 사망했으며, 유족은 고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2024년 9월 퀘타(Quetta) 경찰서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 중이던 남성이 경찰관의 충격으로 현장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형

4.20 파키스탄에는 납치, 유괴, 살인, 강간, 테러, 반역뿐만 아니라 신성모독, 마약 범죄, 위증 및 다수의 군사 범죄 등 사형 선고가 가능한 31개의 범죄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1898)」 제368조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사망할 때까지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에 도입되었던 사형 집행 유예(moratorium) 조치는 2014년 페샤와르(Peshawar) 육군 공립학교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전격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총 508명의 사형수가 처형되었으나, 201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은 여전히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4.21 2021년 2월 10일, 파키스탄 대법원은 정신 질환이 있는 수감자를 처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 여러 명의 사형이 즉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 질환자에게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보고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마약통제물질(개정)법(Control of Narcotic Substances (Amendment) Act, 2022)」을 통해 일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4.22 저스티스 프로젝트 파키스탄(Justice Project Pakistan)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파키스탄 내 사형수는 총 6,039명이며 이 중 여성은 약 1%를 차지한다. 주별 사형수 분포를 살펴보면 펀자브주가 2,400명으로 가장 많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2,326명, 신드주 526명, 발루치스탄주 396명,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391명 순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언론은 하급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형 재판이 적법 절차와 절차적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다수의 사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종 판결 전까지 수년간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문

4.23 「고문 및 구금 중 사망(방지 및 처벌)법(2022)」은 고문을 실행·방조·공모한 공무원에 대해 「파키스탄 형법(1860)」 제16장에 명시된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금 중 사망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자는 형법 제302조에 따라 처벌하며, 구금 중 강간 범죄 가해자는 관련 강간 처벌법 및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구금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형법(1860)」 제16장은 제299조부터 제338H조까지 다양한 범죄 상황을 포괄하며, 위반 시 종신형과 최대 300만 파키스탄 루피(약 1만 6,200호주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공무원들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고문 및 구금 중 사망(방지 및 처벌)법(2022)」은 국가인권위원회(NCHR)와 연방수사청(FIA)에 보고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방수사청(FIA) 직원이 고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2022년 한 상원의원이 연방수사청(FIA) 사이버범죄 부서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례가 있었으나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4.24 국제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보안군, 경찰, 교도소 관리들에 의해 고문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고문 방식은 구타였으나, 성폭력과 모욕적인 대우도 포함되었다. 2023년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구금 센터, 경찰 유치장, 교도소에서의 고문 의혹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의료 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NCHR)는 라왈핀디(Rawalpindi) 교도소 수감자 35명을 면담한 결과, 26명이 고무 타이어를 이용한 구타부터 독방 감금까지 다양한 고문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고했다.

4.25 파키스탄 정부가 2023년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채택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21년 편자브주에서는 고문이나 비행 혐의로 경찰관 624명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인권부와 경찰·교도소 교육 기관이 법 집행관들에게 현대적 수사 기법과 적법한 증거 수집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프로젝트파키스탄(JPP)은 2023년 보고서에서 고문이 여전히 주요한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찰, 군부 참조).

4.2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에서 체포·구금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중간 수준의 고문 위험에 직면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무장단체 가담이나 '테러 활동' 연루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이러한 고문 위험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4.27 「고문 및 구금 중 사망(방지 및 처벌)법(2022)」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그리고 구금 중 사망과 강간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통해 얻은 모든 진술, 정보, 자백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고의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564호주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고문 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역으로 고문을 가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인정된다. 이러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식통은 경찰관들이 피구금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유치장에서 옷을 모두 벗긴 채 대기하게 하는 등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4.28 「후두드 법령(1979)」상 법원은 이론적으로 신체 절단(amputation), 태형(whipping), 투석형(stoning) 등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태형은 「태형 처벌 폐지법(Abolition of the Punishment of Whipping Act, 1996)」에 의해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신체 절단형이나 투석형의 경우 실제 파키스탄 사법 역사상 집행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4.29 종교적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식 사법 체계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투석 살해 사건이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종교 참조). 일례로 2023년 9월 데라 가지 칸(Dera Ghazi Khan)에서 한 여성이 돌에 맞아 살해당한 소위 '명예 살인' 사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물탄(Multan)에서 꾸란을 모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년 남성이 군중에게 돌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전통적 사법 기구인 지르가(jirga)는 과거 투석이나 절단형 외에도 공개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에 검은 칠을 하는 등의 처벌을 내리기도 했으나, 현재 이러한 초법적 처벌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추세다(사법부 참조).

체벌

4.30 파키스탄 형법을 비롯하여 「편자브 빈곤 및 방치 아동법(Punjab Destitute and Neglected Children Act, 2004)」, 「신드 아동법(Sindh Children Act, 1955)」,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아동 보호 및 복지법(KP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Act, 2010)」 등 각 주법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가해자에게 면책 사유를 제공하는 조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형법(1860)」 제89조는 12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 질환자의 이익을 위해 보호자 또는 합법적 보호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하에 선의로 행한 행위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해악을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체벌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한다.

4.31 파키스탄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체벌이 자행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체벌에는 손찌검이나 발길질뿐만 아니라 회초리, 벨트, 전선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한 구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응하여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체벌 금지법(ICT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ct, 2021)」이 통과되어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내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체벌 금지법(2021)」에 따라 체벌을 가한 사실이 밝혀진 교사는 강제 퇴직과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체벌 금지법(2021)」은 2021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2023년 2월에야 고지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해당 법에 근거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아동 참조).

5. 기타 고려 사항

국가 보호

5.1 파키스탄에는 성별, 민족, 종교를 근거로 국가 보호에 대한 접근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은 이론적으로 경찰과 사법부를 통해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장벽, 불충분한 행정 자원, 그리고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의 권리 구제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아흐마디아파 등 일부 민족 및 종교 소수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안군은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 추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찰 조직의 자원 부족과 만연한 부패 역시 국가 보호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형사 사건을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도 주요한 장애물로 꼽힌다.

5.2 2021년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개정안이 발표되고 폭력 억제 조치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나 종파적 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낮은 기소율의 원인으로 경찰 수사의 비효율성, 법의학적 증거 수집 역량 부족, 검·경의 법적 전문성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변호사·증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을 지목하고 있다.

군대

5.3 파키스탄 군부는 고도로 훈련되고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집단이다. 2024-25년 예산은 2조 1,300억 파키스탄 루피(약 117억 2천만 호주 달러) 이상에 달하며, 2024년 글로벌파이어파워지수(GFP) 기준 세계 9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정규군 총 병력은 약 120만 명 규모(현역 65만 4천 명, 예비군 55만 명)이다. 파키스탄은 세계 5위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국이기도 하며, 징병제 없이 모병제로만 운영된다.

5.4 군부는 파키스탄 내에서 가장 유능한 국가 기관으로 널리 간주된다. 국내 정치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주도한다. 역사적으로 1958년, 1977년, 1999년 세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연방 정부를 직접 장악한 바 있다(최근 역사 참조). 군인은 높은 급여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 군 내부에 파슈툰족과 하자라족 등 소수 집단이 고용되어 있으나, 시아파나 힌두교도 등 일부 소수 집단 관계자들은 고위직 승진에 있어 비공식적인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진술했다. 여군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전원 비전투 보직에 배치되어 고위 장교로의 승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5.5 군부에 의한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 안보 상황, 발루치족, 파슈툰족 참조).

준군사조직

5.6 파키스탄에는 펀자브주와 신드주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 레인저스(Pakistan Rangers)를 비롯한 여러 준군사조직(paramilitary forces)이 존재한다. 레인저스는 행정상 내무부 소속이나, 지휘관을 현역 육군 장성이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레인저스의 주 임무는 인도 접경 지대 경비 및 국내 치안 유지이다. 한편, 프론티어 군단(Frontier Corps)은 발루치스탄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를 포함한 서부 국경 지역에서 레인저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5.7 유엔,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레인저스와 프론티어 군단이 고문 및 가혹 행위, 자의적 구금, 초법적 살해, 강제 실종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

정보기관

5.8 파키스탄의 정보 기구는 군부 산하의 국가정보부(ISI)와 내무부 산하의 정보국(IB)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기관은 광범위한 전자 및 물리적 감시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연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테러 용의자, 언론인,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2024년 3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IHC) 소속 판사 6명은 정보 기구 요원들이 자신들의 친척을 납치·고문하고 자택에 도청 및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법 판결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5.9 정보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는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부(ISI)는 초법적 살해, 강제 실종, 구금 중 고문 등의 혐의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Afghan Taliban)을 비롯한 여러 무장단체와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연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대내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안보 상황, 발루치족, 파슈툰족 참조).

경찰

5.10 연방 및 주 경찰은 법 집행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연방수사청(FIA)과 국가대테러청(NACTA) 등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각 주 및 자치 지역 당국은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연방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수도 경찰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5.11 2020년 기준 파키스탄에는 총 1,724개의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펀자브주가 683개로 가장 많고, 신드주 555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297개, 발루치스탄주 130개, 이슬라마바드 22개 순이다. 2021년 기준 전국 경찰 인력은 약 53만 명 규모로 파악된다.

5.12 파키스탄 경찰의 법 집행 역량과 효율성은 구조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훈련, 경직된 문화적 태도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 또한 상층부와 정치권, 군부, 사법부로부터 가해지는 서로 다른 압력이 경찰의 중립적 업무 수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주 경찰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교육 기준이나 조정 체계가 부족하며, 중앙집중식 범죄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이 미비해 광역 범죄자 추적 및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13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인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급여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족한 생계비를 뇌물 수수로 충당하는 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다. 또한 경찰은 무장 세력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어 심각한 신변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경찰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소속 인력 18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발루치스탄주의 경찰 사망자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 당국은 관련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14 경찰청은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해 모든 부서에 10%의 여성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체 요건과 필기시험 등 선별 절차의 장벽, 그리고 여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2023년 기준 여성은 전체 경찰 인력의 약 3%에 불과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안보 위험 또한 여성의 경찰직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법부

5.15 파키스탄 사법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이 있으며, 그 아래로 5개의 주 및 지역 고등법원과 다수의 지방법원이 편제되어 있다. 또한 은행법원, 마약법원, 젠더기반폭력(GBV) 법원, 아동법원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전문 법원들이 운영 중이다. 재판 절차는 통상 우르두어로 진행되고 속기사가 이를 영어로 기록하며, 대법원 판결문은 영어로 공식 발표된다. 2024년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제26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위 법관 임명 절차를 개편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연방 정부는 국가적 사건의 최종 심급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의회는 특정 사건을 전담 심리할 '헌법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인권 보호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5.16 연방샤리아법원(FSC)은 형식상 대법원 체제 내에 있으나, 모든 법률이 이슬람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병행 사법 기구이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 또한 입법 개혁에 관한 강력한 권고권을 행사하며 사법 및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종교 참조).

5.17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사건을 제외하고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사법 관행은 법의학적 증거나 물적 증거보다 증인의 증언을 결정적인 근거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편, 파키스탄은 1960년대에 배심원 재판 제도를 폐지했다.

5.18 파키스탄 사법 시스템은 만성적인 사건 적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의 최초정보보고서(FIR)가 접수된 후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일반 형사 사건이 최종 판결에 도달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미결 구금 상태로 장기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죄 선고율은 4~5%로 매우 낮으며, 특히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률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지연되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언론의 압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잦고, 사법 부패와 신성모독 등 종교적 민감 사안에 대한 판사 협박 문제도 빈번하게 보고된다.

5.19 2015년 페샤와르 육군 공립학교 테러 사건 이후, 파키스탄은 특별법을 통해 테러 혐의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특별법은 2019년 3월 만료되었으나, 군사법원은 이후에도 관할권을 행사하며 일반 민간인 사건까지 다루어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군사법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언론 취재나 변호인의 상세 정보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다. 2023년 5월 9일 폭동과 관련해 체포된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지지자들도 군사법원 재판 대상이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민간인에 대한 군사 재판을 '무효'로 선언했다. 그러나 동년 12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어 일부 민간인 사건의 군사 재판 재개를 허용했으며, 현재 이 관할권에 대한 항소 심리가 다시 진행 중이다.

5.20 부족 지역에서는 공식 사법 절차의 대안으로 아만(aman) 위원회, 판차야트(panchayat), 지르가(jirga)와 같은 전통적 분쟁 해결 기구가 운영된다. 이들은 공식 법원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적법 절차와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개인의 인권보다 공동체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한계가 있다(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종교 참조).

구금 및 교도소

5.21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교도소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나,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발루치스탄주와 신드주 내륙(수카르 지역 등)의 시설은 국가 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1930년대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는 일부 교도소와 구금 센터의 환경이 극심한 과밀화, 부실한 식단 및 의료 지원, 비위생적인 시설로 인해 '가혹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5.22 교도소 과밀화는 파키스탄 사법 행정의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전국 91개 시설의 적정 수용 가능 인원은 약 6만 7,30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9만 7,000명을 상회한다. 저스티스프로젝트파키스탄(JPP)과 국가인권위원회(NCHR)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용률은 152%에 달하며, 일부 시설은 300%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구금자의 약 73%가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들은 전체 재판 과정 동안 구금되어야 하며 종종 기결수와 혼합 수용된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3년 보고를 통해 최대 3인용으로 설계된 감방에 15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개방형 재래식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자거나 교대로 취침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했다.

5.23 교도소 급식 수준은 매우 부실하며 수감자들의 영양실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외부 음식을 지원받을 수 없는 빈곤층 수감자들에게서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3년 출소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불충분한 배식과 오염된 식수 등 위생 문제를 보고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식사에 대해 수감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재력이 있는 수감자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반면 대다수 수감자는 기본 식단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5.24 교도소 내 의료 시설은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기초 및 응급 의료 체계가 부실하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수감자들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대다수 교도소 병원에 전문 의료진과 심전도 기계 등 필수 의료 장비, 구급차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2021년 12월 라호르(Lahore)의 캠프 제일(Camp Jail) 교도소에서는 의료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감자 6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시설에서 위생, 환기 및 조명 상태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5.25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6×6미터 크기의 사형수 전용 특별 감방에 수용되며, 협소한 공간을 여러 명이 공동 사용한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삼엄한 감시 하에 놓이며, 하루 두 번 제공되는 30분씩의 운동 시간 동안에만 감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된다. 운동 시간에도 해당 블록 내로 이동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형수는 교도관이 입회한 상태에서만 가족 및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5.26 파키스탄에는 발루치스탄주를 제외한 전역에 여성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분리되어 수용된다. 2020년 파키스탄 인권부(Ministry of Human Rights) 보고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들은 매우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교도소 공무원들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도소 의료 예산의 고질적인 부족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수감된 아동들까지 필수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과자 시라(khwaja sira)나 히즈라(hijra) 등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의 2023년 보고서는 교도소 당국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수용동에 함께 수용하여 가혹한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27 파키스탄 내에 독립적인 소년 교도소 시설은 단 한 곳 뿐이며(아동 참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년범을 성인 수감자와 분리된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호협회(SPAR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수감자와 교도소 직원들이 소년범을 상대로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성적 폭력을 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관리 감독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5.28 일부 인권 단체와 언론인들은 교도소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CSO)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은 분쟁의 영향이 직접적인 지역의 구금 시설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피구금자들이 수용된 시설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당국의 강력한 제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안적 국내이주

5.29 파키스탄 헌법 제15조는 모든 시민에게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 당국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더 나은 고용 기회와 교육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 국내 이주는 사회 전반에 걸쳐 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주민들은 대개 새로운 정착지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가족, 친구, 부족 또는 민족 네트워크 등 연고 집단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주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장벽은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과 그 동반 자녀 등 취약 계층에 더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5.30 이슬라마바드, 카라치(Karachi), 라호르(Lahore)와 같은 대도시들은 민족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추고 있어,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한다. 파슈툰족 등 일부 민족 집단은 이러한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정착하기도 한다. 반면, 아흐마디야파나 하자라족과 같이 박해 위험이 높은 집단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눈에 띄는 집단 거주 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파키스탄 경찰 시스템은 주 경계를 넘어서는 수사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타 주로 이주한 인물에 대한 추적 역량이 제한적이다.

5.31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이주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폭력 위협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취약 집단은 경제적 자립 능력 부족과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결여로 인해 이주 과정에서 훨씬 가중된 장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여성, 아동 참조).

귀환자 대우

출입국 절차

5.32 파키스탄 출국(통제)조례(Exit from Pakistan (Control) Ordinance, 1981) 제2조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 파키스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파키스탄 시민은 「여권법(Passports Act, 1974)」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출국 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동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유효한 서류 없이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파키스탄에 입출국하려는 시도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신매매나 밀입국 혐의자는 「인신매매방지법(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ct, 2018)」 및/또는 「이주민밀입국방지법(Prevention of Smuggling of Migrants Acts, 2018)」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5.33 파키스탄 정부는 주로 형사 범죄 수배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국통제명단(Exit Control List, ECL)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출국 통제 명단(ECL) 제도가 변경되어, 법원이 90일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120일 경과 후 명단에서 자동 삭제되도록 허용되었다. 단, 자동 삭제 규정은 '테러, 흉악 범죄 및 국가 안보 위협, 대법원·고등법원·은행법원 등록관이 이송한 사건, 마약 밀매, 폰지 사기(Ponzi scheme), 대규모 대중 사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34 출국통제명단(ECL)은 역사적으로 정치화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연방 정부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출국통제명단(ECL)에 올렸지만, 현지 소식통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역 언론은 2023년 11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의장 임란 칸, 그의 아내 부슈라 비비(Bushra Bibi),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의 여러 다른 정치인들이 출국통제명단(ECL)에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4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Islamabad High Court)은 전 연방 장관 시린 마자리(Shireen Mazari) 박사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국통제명단(ECL)에서 그녀의 이름을 제거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했다.

5.35 아프간 시민이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이동하려면 유효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국경 검문소는 수시로 개폐된다. 작성 시점 기준, 타즈키라(tazkira) 소지자의 국경 간 이동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아프간인 참조).

귀국자 환경

5.36 귀국자들은 대개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파키스탄을 출국하며, 귀국 시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입국 절차를 밟는다. 파키스탄 재외 공관은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했던 이들을 포함하여 해외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에게 긴급 여행 서류와 여권을 발급한다. 원칙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귀국자들이 도착할 때 임시 서류를 발급한다.

5.37 이민 당국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귀국자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출국 전 파키스탄 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거나 소지한 신분증이 국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이전의 것인 경우에만 구금 조치를 취한다. 이민 관리들은 귀국자들에게 불법 출국 여부, 파키스탄 내 범죄 수배 여부, 해외 범죄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파키스탄 내 범죄로 수배 중인 귀국자는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정기적인 경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귀국자들은 공항을 통해 재출국을 시도할 경우 개입 조치를 발동시키는 경보 데이터베이스인 '승객 통제 명단(Passenger Control List)'에 등재될 수 있다.

5.38 귀국자는 파키스탄 입국 지점부터 정착지까지의 이동 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나, 2023년 일부 시민사회단체(CSO)들이 이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귀국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주 시도로 인한 불이익 없이 파키스탄 지역사회에 원만히 재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부채를 진 비자발적 귀국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가족에게 수치를 안겼다는 심리적 부담과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귀국자는 재통합에 실패하고 망명을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려 시도한다.

5.39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파키스탄 귀국자들이 과거의 이주 시도나 서구 국가 거주 경험 자체를 이유로 공적 또는 사회적 차별을 당할 위험은 없다고 평가한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귀국자들이 해외 거주 중 표출한 특정 행동이나 견해를 이유로 공적 또는 사회적 차별을 당할 위험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정치적 견해, 관심 집단 참조).

신분 증명

5.40 파키스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과 국민신분증(NIC)이다. 그 외 일반적인 신분 증명 양식으로는 거주지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있다. 반면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취득한 진본 문서나 위조된 기초 문서를 바탕으로 정식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신뢰도가 낮은 신분 증명 수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운전면허증 자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될 가능성이 있다.

5.41 출입국여권총국(DGI&P)이 여권을 발급하며,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이 국민신분증(NIC) 발급을 담당한다. 두 기관 모두 전국적인 사무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모든 파키스탄 시민은 여권과 국민신분증(NIC)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호주를 포함한 16개국과 이중 국적 협정을 맺고 있다.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51)」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여성은 파키스탄 남성과 혼인함으로써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파키스탄 여성이 외국인 남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개 불가능했다.

5.42 2024년 7월 14일, 페샤와르 고등법원(Peshawar High Court)은 아프간 시민권을 소지했거나 아프간 국민과 혼인한 이들이 제기한 65건의 청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파키스탄 여성과 혼인한 아프간 국민에게도 이중 국적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라호르 고등법원(Lahore High Court) 역시 「파키스탄 시민권법(Pakistan Citizenship Act, 1951)」 제10조제(2)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으며, 연방샤리아법원(FSC)은 정부에 파키스탄 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지시에 불복하여 대법원(SCP)에 항소(민사 샤리아 항소 2008년 제1호)를 제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파키스탄 시민권법(1951)」에 대한 실제적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생증명서 및 학교 기록

5.43 출생증명서는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지방정부기관(주민평의회)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게는 병원 출생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중앙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병원 밖에서 태어난 수많은 영유아를 포착할 수 있는 자동 등록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사기 만연 참조). 원칙적으로 출생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나 실제로는 다수의 출생이 등록되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9년 기준 파키스탄 내 미등록 아동이 약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아동 참조).

5.44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외 다른 기관의 증명서 양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NADRA 증명서는 전산화되어 있으며 영어와 우르두어(Urdu)로 된 완전한 출생 기록을 포함한다. NADRA 증명서와 지방정부 증명서는 모두 해당 지역 공무원의 날인과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는다. 한편 파키스탄 내에서는 학교 기록과 중등교육 수료증이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공식 서류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국민신분증

5.45 국민신분증(NIC)은 파키스탄의 18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신분 증명 수단이다(아동용 신분 문서는 출생증명서, 여권 섹션 참조). 국민신분증(NIC)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정식 고용 계약, 유권자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을 비롯해 SIM 카드 발급, 수도·전기·가스 신규 연결, 토지나 차량 구매, 대학 입학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2012년부터 기존의 모든 전산화 국민신분증(CNIC)을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 국민신분증(SNIC)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스마트 국민신분증(SNIC)은 발급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여전히 이를 발급받지 못한 파키스탄인이 다수 존재하며, 현재 전산화 국민신분증(CNIC)과 스마트 국민신분증(SNIC) 모두 유효한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5.46 국민신분증(NIC)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자는 본인의 생체 정보(사진 및 지문)와 함께 혈족의 국민신분증(NIC) 번호, 그리고 출생증명서, 학교/대학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가 되어 국민신분증(NIC)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동등록증명서(CRC) 또는 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5.47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의 팩-아이덴티티(Pak-Identity)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신분증(NIC)을 생애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서류 제출, 사진 촬영, 서명 및 엄지 지문 등록 절차를 위해 반드시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등록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5.48 이미 국민신분증(NIC)을 보유한 신청자는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 재발급 또는 정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서류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 반면,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구형 국민신분증(NIC)을 갱신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신청자들은 자신의 본적지(출신 지구) 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식 정책이라기보다 일부 지역의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증명서 등 신규 발급에 필요한 기초 서류가 본적지에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위해 실제 출신 지구를 방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49 국민신분증(NIC)에는 법적 성명, 성별(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부친 성명(기혼 여성은 남편 성명), 신체 식별 특징, 생년월일, 가족 등록 ID 번호, 현주소 및 영구 주소, 발급일, 만료일, 서명, 사진, 엄지 지문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카드 겉면에 소지자의 종교 정보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으나,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신청 과정에서 종교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스마트 국민신분증(SNIC)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와 추가 보안 기능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다. 국민신분증(NIC)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며, 65세 이상의 시민에게 발급된 신분증은 갱신 없이 평생 유효하다.

5.50 파키스탄 대법원은 2009년 콰자 시라와 히즈라(khwaja siras and hijra)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반영한 국민신분증(NIC)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2012년 2월, 전산화 국민신분증(NIC) 등록 양식에 '쿤사(khansa, 선천적 간성)'라는 제3의 성별 범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콰자 시라와 히즈라 공동체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에도 이들이 국민신분증(NIC)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정책이라기보다 개별 담당자의 편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2024년 초 「트랜스젠더 권리보호법(Transgender Persons Protection of Rights Act, 2018)」에 대한 연방샤리아법원(FSC)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성별 표시가 'X'인 모든 이들은 약 6개월간 유효한 신분증 없이 방치되었다. 이후 2024년 말에 이르러서야 국민신분증(NIC)과 여권을 포함하여 성별이 'X'로 표시된 문서의 재발급이 재개되었다(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참조).

5.51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의심스러운 사용 기록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분증(NIC), 파키스탄 거주 카드(PoR 카드), 또는 아프간 시민 카드(ACC)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한다(아프간인 참조). 현지 소식통은 한 번 차단된 카드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카드 차단 조치는 대개 해당 신분증 취소의 전 단계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5.52 국민신분증(NIC)은 문서 자체의 보안성은 높으나, 발급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2023년 10월 연방 정부의 조사 결과,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이 자격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에게 4만 개 이상의 전산화 국민신분증(CNIC)을 부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아프간인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의장은 상원 위원회에서 외국인의 부정한 국민신분증(NIC) 취득을 조력한 혐의로 직원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5.53 파키스탄은 현재 기계 판독식 및 생체 인식 기능을 갖춘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기 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기계 판독식 여권에는 소지자의 사진, 지문, 워터마크와 더불어 종교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생체 인식 및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생체 인식 여권은 데이터 페이지 내에 비접촉식 NFC 칩이 내장되어 있어, 소지자의 이미지, 생체 정보, 개인 인적 사항, 고유 식별 번호 및 디지털 서명을 디지털 데이터로 포함한다.

5.54 원칙적으로 모든 파키스탄 시민은 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아흐마디아파 등 특정 집단은 발급 과정에서 종교적 확인 절차와 같은 차별적 장벽에 직면하기도 한다(아흐마디아파 참조).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2017년부터 성별란에 '제3의 성'을 상징하는 'X'로 표기된 트랜스젠더용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참조). 호주 주재 공관을 비롯한 전 세계 파키스탄 재외 공관에서도 자국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5.55 통상적으로 파키스탄 여권 신청 시 요구되는 유일한 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국민신분증(NIC)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국민신분증(NIC)을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에게 파키스탄 여권이 잘못 발급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해 왔다. 일례로 2023년 10월 현지 및 국제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허위로 취득한 파키스탄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아프간인 약 1만 2천 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5.56 2024년 6월 5일, 내무부(MoI)는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파키스탄 시민에 대해 여권 갱신 및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7월 22일 해당 결정을 전격 번복하고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4년 9월까지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망명 신청자 및 획득자 포함)에 대한 여권 발급 업무를 전면 정상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혼인증명서

5.57 파키스탄에서 혼인증명서(무슬림의 경우 니카 nama(nikah nama)라 칭함)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증명 문서다. 니카 nama(nikah nama)에는 통상적으로 신랑과 신부, 2명의 증인, 그리고 주례자(marriage officiator)의 서명이 날인된다.

이 증서는 일반적으로 우르두어로 수기 작성되며, 작성된 니카 nama(nikah nama)는 관할 지역 주민평의회(Union Council)에 등록된다. 이후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수기 증서를 바탕으로 우르두어와 영어가 병기된 전산화 혼인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증명서는 혼인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소하여, 이를 악용한 허위·사기 발급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5.58 비(非)무슬림 종교 지도자들 또한 각 공동체의 관습에 따른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나, 일부 소수 종교 집단은 혼인 이후 이를 근거로 국민신분증(NIC)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일례로 편자브주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혼인증명서 양식 내에 '카트메 나부왓(Khatm-e-Nabuwwat, 예언의 최종성)' 서약을 포함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아흐마디아파, 기독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 참조).

기타 문서

5.59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은 파키스탄 정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시 '재외국민 국가신분증(NICOP)'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파키스탄 무비자 입국, 시민권 인정,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등록 절차는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외 공관이 아닌 파키스탄 본국에서 직접 처리된다.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은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신분증(NICOP)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신분증은 특송 서비스를 통해 신청지까지 배송된다.

5.60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전산화된 신분 증명 문서인 아동등록증명서(CRC)를 발급한다.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등록증명서(CRC) 발급을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나, 10세 이상의 아동은 출생증명서나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5.61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각 가족 구성원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가족등록증명서(FRC)를 발급한다. 가족등록증명서(FRC)는 혼인 시 신규 발급되고 자녀 출생 시마다 정보가 수정된다. 거주지 증명서(domicile certificate)는 개인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 또는 지구 담당관(deputy commissioner)이 발급 권한을 가진다.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지방정부에서도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파키스탄 거주자에게만 합법적으로 발급되지만, 현지 소식통은 해당 문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62 경찰 당국은 개인의 범죄 기록 유무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증명서 발급 전 일반적으로 신청자 거주 지구의 관할 경찰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내에 국가 차원의 중앙화된 범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문서의 실제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사기 행위의 만연

5.63 파키스탄에서 문서 사기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변조되거나 완전히 위조된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에서 유통되는 주요 허위 문서로는 학위 및 성적증명서, 은행 거래 명세서, 계약서, 추천서, 소유권 증서 등이 있으며 그 범위는 매우 넓다.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이 발급한 신분 문서는 타 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나, 2024년에도 국민신분증(NIC)과 여권 발급 과정에서 부패와 사기가 결탁한 여러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주로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본 문서의 사본을 정교하게 조작한 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5.64 주민 평의회와 국가등록데이터베이스청(NADRA)은 제출된 문서의 외관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진본 형식의 문서' 자체가 뇌물이나 허위 정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을 경우, 이를 식별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NADRA가 공식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병원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변조 또는 위조한 증명서를 여전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5.65 최초정보보고서(FIR)는 고소·고발 또는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초동 기록을 의미하며, 표준 양식에 관련 정보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조가 비교적 용이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이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최초정보보고서(FIR)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최초정보보고서(FIR)의 존재가 해당 문서에 기술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최초정보보고서(FIR)를 발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